

2020
가을

생협 평론

40

길잡이 연대의 길 밝혀주는 지혜의 별자리
— 김찬호(편집위원장)

4

특집

생협평론 10년, 돌아보기와 내다보기

[독자 집담회] 더 나은 세상을 잇는 무지갯빛 징검다리 14



김성미 김이경 이선영 정설경 김찬호

〈특집 I〉 생협평론과 사회적경제의 길 찾기

생협평론, 협동조합 담론 활성화의 주역 37

— 염찬희(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미디어 지형 49

— 조현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사회적경제로 그린뉴딜 하기 61

—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비대면 사회와 사회적경제 79

— 김병권(정의정책연구소 소장)

사회적경제 10년 후, 2030년 우리의 모습 93

— 김형미(상지대학교 평생교육융합대학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특집 II〉 사람책, 사회적경제 일꾼들의 삶과 생각

사회적 금융이 왜 활성화되지 못하냐면요 112

: (주)비플러스 박기범 대표

— 주세운(생협평론 편집위원)

마음의 소리를 따라 걸어온 10년 121

: HBM사회적협동조합 MTA코리아 이예나 팀코치

— 김이영(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시련도 매력으로 받아들이는 청춘의 힘 132

: (주)김태경우리밀베이커리 김태경 대표

— 박범용(SAPNet지원센터 경영지원팀장)

돌발 논문	노동자협동조합의 노동관계와 노동법의 적용에 관한 검토 — 조제희(세이프넷지원센터 변호사)	140
생협 zoom in	대화강 십리대밭 — 김성광(작가)	152
기획 연재	생협평론이 만난 사람 정책 설계자에서 현장 운동가로 돌아온, 최혁진 — 우미숙(『생협평론』 편집위원)	154
서평	자본세 600년, 멈추지 않으면 멸망한다 : 라즈 파텔·제이슨 W. 무어,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 — 이차경((사)소비자의 정원 탐장)	164
	‘자유를 위한 사회적경제’에 대해 말하다 : 김종길, 『자유로서의 사회적경제』 — 황명연(생협평론 편집위원)	169
협동조합 소식	ICA 2020-2030년 전략 발표 — 이주희(SAPENet지원센터 국제팀장)	173
청년의 소리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 박용원(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177

생협평론 밑줄 긋기	183
『생협평론』 과월호 목차	190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발행물 목록	210
정기구독 안내	220



생협 평론

계간 2020년 가을 제40호 **퍼넌날** 2020년 9월 20일 **퍼넌이** 고영희 **편집위원** 김아영 김현숙 박범용 우미숙 조금득
조현경 주세운 황명연 **편집위원장** 김찬호 **코디네이터** 이은정 **퍼넌곳**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등록번호** 구로, 바
00038 **등록일** 2016년 4월 5일 **주소** 07317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전화** 02-2060-1373
이메일 icoop-institute@daum.net **디자인편집** 잇다 **인쇄** 아람P&B **ISSN** 2093-987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도서 문의 (주)알마**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1길 8 | 전화 · 02-324-3800

길잡이

김찬호

편집위원장

연대의 길 밝혀주는 지혜의 별자리

별

김완하

별들이 아름다운 것은
서로가 서로의 거리를
빛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이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허리가 휘어 언덕을 오르는
사람들 발 아래로 구르는 별빛,
어둠의 순간 제 빛을 남김없이 뿌려
사람들은 고개를
꺾어 올려 하늘을 살핀다
같이 걷는 이웃에게 손을 내민다

별들이 아름다운 것은
서로의 빛 속으로
스스로를 파묻기 때문이다
한밤의 잠이 고단해
문득, 깨어난 사람들이
새벽을 질러가는 별을 본다
창밖으로 환하게 피어 있는
별꽃을 꺾어
부서지는 별빛에 누워
들판을 건너간다

별들이 아름다운 것은
새벽이면 모두 제 빛을 거두어
지상의 가장 낮은 골목으로
눅기 때문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오랜 경구를 되새기면서 잠시 견디면 될 줄 알았다. 크나큰 착각이었다. 한동안 주춤했다가 더 매서운 기세로 몰아치는 대유행은 우리가 긴 터널의 입구에 이제 막 들어선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번 팬데믹이 어느 정도 안정되려면 2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어느덧 비일상이 일상이 되면서 세상의 풍경이 확 바뀌었다. 여행, 야유회, 휘트니스, 회식, 결혼식, 노래방, 예배... 이런 단어들이 낯설게 들린다. 모임과 놀이는 기쁨이 아니라 불안의 원천, 민폐의 요인이 되어버렸다.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재난 앞에서 모든 영역의 전문가들이 향후의 변화와 대응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의학이나 생물학은 물론 수학, 물리학, 도시공학, 건축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그리고 인문학 등 코로나와 관련해서 연구 주제가 잡히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다. 인간의 삶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에 코로나와 관련되는 연구 과제가 있을 것 같지 않은 학문이 하나가 있다. 바로 천문학이다. 우주의 광대한 시공간 속에서 전염병은 아주 미미한 파동에 지나지 않으리라.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거나 해결책을 찾는 데 천문학적 변수를 상정하는 것은 어려울 듯하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재난을 뜻하는 영어 ‘disaster’의 어원을 따지면 dis+aster인데, aster는 바로 별을 가리킨다. (천문학이 astronomy이고 우주비행사를 astronaut라고 한다) 그러니까 ‘별’에 부정어 dis를 붙인 것이

‘disaster’다. 무슨 의미일까. 인류는 오래전부터 하늘을 보면서 미래를 점쳤고, 별뿔별 같은 것이 떨어지면 불길한 징조로 여겼다. 재앙이 닥치거나 위대한 인물이 죽을 때, 그 사건을 하늘의 움직임과 연관시킨 것이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점성술은 예전만큼의 위력을 갖지 못하지만, 말에는 고스란히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재난과 별 사이에 아직도 의미 연관성이 있을까. 트라우마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어느 정신의학자에 따르면, 재난은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한다. 한밤중에 먼 길을 가야 하는데 방향의 가늠자가 되는 별이 보이지 않을 때의 막막함 말이다.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그 어느 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재난이라는 것이다. 바로 지금 온 인류가 그런 지경에 처한 것이 아닌가. 문명을 떠받치는 시스템과 기반에 균열이 일어나는데,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패닉 상태에서 우리는 좌충우돌하고 있다. 길을 비추어줄 별은 있을까.

『생협평론』 창간 10주년을 맞아 공모한 슬로건에서 ‘연대의 길 밝혀주는 지혜의 별자리’가 선정되었다. 축하하기에는 너무 암울한 세상에서, 사회적경제의 존재 이유를 되묻는 화두처럼 들려온다. 그런데 왜 별자리인가? 시인은 말한다. ‘별들이 아름다운 것은/ 서로가 서로의 거리를/ 빛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이다’ 별들은 그 하나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여럿이 무리를 이뤄 어떤 형상을 빚어낼 때 한결 예쁘다.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세상도 어우리집의 미학에 다름 아니었다.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해지는 시대에 연대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믿고 출구를 모색해왔다. 그 여정에서 『생협평론』은 어떤 몫을 했을까. 앞으로 떠맡아야 할 소임은 무엇일까. 이번 호는 그런 질문으로 기획되었다.

좌담 대신 마련된 ‘집담회’에서는 『생협평론』 창간 편집위원 한 분과 이

책을 꾸준히 애독해온 독자들을 초대했다. 출판에 얽힌 몇 가지 흥미로운 일화들을 통해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위상이 어떻게 변모해왔는지를 알 수 있고, ‘생협평론 읽기 모임’의 경험을 들으면서 생협 활동가들의 배움과 성장에 이 책이 어떤 길잡이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여러 현장에서 품고 있는 고민을 나누면서 향후 『생협평론』의 역할도 점검한다. 집담회에서 이뤄진 회고는 ‘생협평론 밑줄 긋기’라는 특별 코너와 맞닿는다. 독자들이 마음에 소중한게 간직된 문장들을 함께 읽으면서 그 동안 우리가 딛고 온 징검다리들을 돌아보게 된다.

초대 편집위원장 염찬희 님은 『생협평론』이 창간된 배경과 이후의 전개 과정을 개괄적으로 짚어주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빠르게 확장되는 가운데 그 방향을 제대로 짚어줄 이론과 지식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생협평론』은 운동과 연구와 저널리즘 사이를 이으며 담론을 형성하고 여러 가지 의제를 설정해왔다. ‘윤리적 소비’에 대한 개념부터 협동조합법 등 제도적인 쟁점까지 폭넓게 문제를 다루면서 인식의 지평을 넓혀왔다. 사회적경제의 외연이 확대되는 흐름에 『생협평론』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이 글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있다.

조현경 센터장은 사회적경제가 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 되어 왔는지를 짚어준다. 사회적 경제와 언론은 공공성을 담보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태생적인 공통점을 갖는다는 것, 솔루션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경제를 다루는 기자는 ‘연구자’적인 성격과 ‘활동가’적인 성격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적경제의 토대를 다져가기 위해서는 후속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고 인재를 키워내야 하는데, 밀레니얼 세대와의 소통이 열쇠임을 밝힌다. 유튜브의 위력으로 집약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풀어가야 하는 그 과제는 기존 언론들의 고민이기도 하다.

『생협평론』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내다보는 코너에는 세 편의 글이 실

리는데,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거시적 맥락을 진단하면서 우리의 실천 방안을 구상하는 데 초점이 모아진다. 김병권 소장은 비대면 사회의 여러 양상들을 조명하면서 그것이 사회적경제의 진로에 어떤 변수가 되는지를 살핀다. 여기에서 핵심은 지역사회인데, 적절한 방역을 담보하면서도 사회적 교류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수행될 수 없으면서 각 가정에 막중한 부담이 되는 돌봄이 커뮤니티 케어로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는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시장의 실패 그리고 국가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역사회의 재난 회복력을 일으켜야 한다.

이유진 연구원은 그린뉴딜을 중심에 놓고 사회적경제의 활로를 점검한다. 한 해가 다르게 긴박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대안경제의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영역들을 거론한다. 지역사회의 에너지 자립, 친환경적 주거 환경 개선, 자원순환 재사용, 생물종 다양성 보호, 공동체의 재난 회복력이 그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그동안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었던 ‘토건’의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일상을 보살피는 ‘돌봄’으로 전환하는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사회적경제가 시도해온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더욱 세밀하게 다듬고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을 탐색한다. 아울러 그런 운동과 사업들이 내실을 기하기 위해 무엇을 유념해야 하는지를 짚어낸다.

김형미 교수는 2030년의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를 전망하면서 사회적경제의 나아갈 바를 타진한다. 한편으로 기후위기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다른 한편으로 정보통신기술이 혁신을 거듭하는 속에서 우리의 삶은 숨가쁘게 달라지고 있다. 그런 변화가 인류의 풍요와 안녕으로 이어질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쟁점들을 이 글에서 검토한다. 그리고 2015년 유엔과 국제협동조합연맹 등 여러 집단이 작성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한국정부가 2018년 내놓은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비교하면

서 우리의 목표를 어느 수준에 두어야 할지를 토론한다. 필자는 그런 흐름에서 사회적경제가 추구할 비전을 SDGs 실현과 기후위기 대처, 공공 서비스 회복, 일하는 사람들의 잠재력 최적화를 통한 기술변화 대응으로 집약한다.

이번 호 특집에서 마련한 또 하나의 코너는 ‘사람 책 이야기’다.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오랫동안 자기 나름의 길을 개척해온 인물 세 분을 선정해 3인의 편집위원들이 찾아갔다. 그들이 펼쳐온 인생의 드라마를 들으면서 사회적경제의 성장이 구체적인 개인들의 중대한 결단과 치열한 도전 위에서 가능했음을 새삼 확인한다.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음에도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인공들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열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실패를 무릅쓰는 용기만이 아니었다. 사회적 가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그것을 옹골게 구현하려는 전략이 병행되었다. 그러한 진정성은 연재 코너 ‘생협평론이 만난 사람’에서 인터뷰한 최혁진님의 모습에서도 발견된다. 어린 시절 세상과 삶에 대해 가지게 된 질문에서 인생의 사명을 찾아 현장에 뛰어들어 변화를 꾀해왔고 그 경험을 토대로 정책의 큰 그림도 그려낸 그분의 행적에서 사회적경제의 원초적 동력을 발견한다.

사회적경제의 실체는 조직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회질서를 향한 열망이다. 좋은 삶에 관한 상상과 실험이다. 시장의 취약성과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대안적인 경제와 생활양식을 창조하는 이 운동은 지속 가능한 문명의 토대를 정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거대기업들은 자기 확장에만 매진하고 국가들은 혼미에 빠져 있는 가운데 많은 이웃들이 생존의 벼랑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가 감당해야 할 과제는 더욱 엄중하게 체감된다. 갈 길이 아득하기만 하다. 그 머나먼 여정에 『생협평론』이 소박한 전조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별들이 아름다운 것은/ 새벽이면 모두 제 빛을 거두어/ 지상의 가장

낮은 골목으로/ 눕기 때문이다' 저마다 타인의 눈길을 끌기 위해 몸부림치는 세상에서, 진정한 변화는 스스로 제 빛을 거두는 이들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닐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낮은 숨결로 사람다운 삶의 자리를 일구어가는 것, 바로 사회적경제 그리고 『생협평론』의 몫이라. 지난 10년 동안 이 책을 함께 만들어주신 편집위원들, 어려운 주제들을 정성으로 논구해주신 필자들, 출판을 지원해주신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일꾼들, 그리고 잡지가 사라지는 시대에 한결같이 성원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특
집

생협평론 10년, 돌아보기와 내다보기

『생협평론』의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나온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두드려본다. ‘돌아보기’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 사회와 사회적경제의 지형 변화 속에서 『생협평론』이 어떻게 자리매김했는지를 고찰하고,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도 조감한다. 아울러 10년 동안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오롯이 한 길을 걸어온 인물들을 만나본다. ‘내다보기’에서는 생태위기와 비대면 사회에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접속하고 있는지, 향후 10년 동안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전개되어갈지를 고민한다.

생협 평론

독자
집담회

더 나은 세상을 잇는 무지갯빛 징검다리

_____ 김성미, 김이경, 이선영, 정설경, 김찬호

〈특집 I〉 생협평론과 사회적경제의 길 찾기

생협평론, 협동조합 담론 활성화의 주역

_____ 염찬희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미디어 지형

_____ 조현경

사회적경제로 그린뉴딜 하기

_____ 이유진

비대면 사회와 사회적경제

_____ 김병권

사회적경제 10년 후, 2030년 우리의 모습

_____ 김형미

〈특집 II〉 사람책, 사회적경제 일꾼들의 삶과 생각

사회적 금융이 왜 활성화되지 못하냐면요

: (주)비플러스 박기범 대표

_____ 주세운

마음의 소리를 따라 걸어온 10년

: HBM사회적협동조합 MTA코리아 이예나 팀코치

_____ 김아영

시련도 매력으로 받아들이는 청춘의 힘

: (주)김태경우리밀베이커리 김태경 대표

_____ 박범용

{ 독자 집담회 }

더 나은
세상을 잇는
무지개빛
정.견.포.로

김성미

울산아이쿱생협
조합원.
10년차 아이쿱생협
활동가.

김이경

협동조합연구자.
『생협평론』 창간호부터
독자.

이선영

강서아이쿱생협
이사장.
6년차 '생협평론'
읽기 모임' 참여자.

정설경

성대골어린이도서관
대표운영자.
『생협평론』 창간호
편집위원.

김찬호

『생협평론』
편집위원장.

때 2020년 7월 30일(목) 곳 아이쿱신길센터 마실

사회(김찬호) 우리나라는 출판 대국인 편입니다. 하루에 출판되는 책이 약 100종, 단행본 출판이 연간 약 8만 권에 이릅니다. 물론 이중 번역서가 70% 정도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반면 잡지류는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한때 많은 계간지 등이 담론을 이끌던 시기도 있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못한데, 『생협평론』이 10년을 끊이지 않고 발행되어온 것은 의미가 있고 큰 역사가 될 듯합니다.

『생협평론』 10주년을 맞아서 독자분들을 모시고 집담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생협평론』을 거울로 해서 여러분 삶 속에 비춰진 『생협평론』과 앞으로 새로운 10년, 『생협평론』을 평소에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등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행하다 보면 의외의 질문이 우리 안에서 또 떠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독자 네 분이 참석해주셨는데 현재 울산시민아이쿱 조합원이고 성공회대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에서 공부하고 계신 김성미 님, 현재 한국의 초기 협동조합 역사로 박사논문을 준비 중이신 김이경 님, ‘생협평론 읽기 동아리’에 오랫동안 참여해오셨고 현재 강서아이쿱 이사장이신 이선영 님, 『생협평론』 편집위원도 역임하시고 전 서울아이쿱 이사장이셨던 성대골어린이도서관 대표운영자 정설경 님입니다.

우선 첫 질문은 『생협평론』과 처음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책을 받아볼 때마다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간호 편집위원이셨던 정설경 님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설경 정말 10년이 지났다는 게 잘 믿기지 않네요. 창간호가 나

왔을 때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창간호는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장을 본 조합원들에게 모두 나눠 드렸어요. 창간호 표지색은 자연드림의 색을 재현하려고 했던 것인데, 일부 조합원들이 ‘생협이 왜 빨간색이냐, 왜 빨간색 책을 내느냐’고 항의해서 화들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창간호 ‘돌발논문’에서 윤리적 소비에 대한 미디어 부분으로 기획된 글이 천안함 사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언급했는데 이것의 연장선에서 제기된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해프닝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편집위원장이 상세하게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사회 표지 색 컨셉을 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무지개 색으로 정했던 게 아니었던 거군요.

정설경 처음에는 자연드림의 색깔인 자주색을 의도했던 것인데 논란 이후 편집위원회에서 표지를 무지개 빛깔로 다양화하기로 했고, 생협이 취급하는 농산물 색깔과도 관련이 있어서 1년 단위로 색깔을 바꿨습니다.

창간 초기에는 주제에 있어서 협동조합에 대한 강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흘러온 주제의 흐름을 자주 살펴보는 편인데, 창간 이후에 마침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되기도 해서 협동조합 중심으로 논의를 풍부하게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제에 비해서 협동조합을 아는 전문적인 필자가 풍부하지 않았고, 주제의 한계에 대한 고민도 컸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장은 척박하고 이론은 이상적이어서 이론과 현장이 함께 가지 못하는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이론을 정리하고 현장을 전달해야 하는 요구는 아주 컸습니다. 결과적으로 『생협평론』은 아이쿱생협 활동가들에게는 정기적으로 학습할 소재를 제공해주었고, 조

합의 이사학습회에 중요한 교재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학습하고 성장해왔으니까요.

사회 창간 편집위원이시니까 처음에는 『생협평론』이라는 책을 어떻게 해서 내게 된 것인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설경 협동조합에 대한 담론을 다루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생협평론』 창간호 전에 홍보팀에서 냈던 『생협평론』 준비호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생산지 이야기나 조합원 이야기여서 협동조합 이론이 부족했습니다. 편집위원회를 외부인과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구성해서 현장 이야기와 함께 이론적인 연구 성과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초창기를 거쳐 이런저런 변화의 시도로, 『생협평론』이 더 많이 변화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편집위원회는 사회적경제 현장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내용도 사회적경제로 넓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창간에 얹힌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생협평론』과 만나게 된 인연과 사연이 궁금합니다.

김이경 제가 창간호를 받았을 때가 아마 대학 졸업할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정무역에 대한 사례 조사를 하던 차였습니다. 한국에는 ‘아름다운커피’와 ‘그루’ 등이 시작할 무렵이었고, 국내 생협은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 공정무역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도료를 방문했을 때 우연한 기회에 김형미 전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님을 만났고, 그때 아이쿱에서 공정무역에도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



“사람들은 현장의 혁신가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들, 혁신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기면 좋겠습니다.”

{ 정설경 }

는 걸 어렵פות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후 아이쿱에서 2008년에 ‘윤리적 소비 정체성 선언’을 하면서 생협의 역할이란 윤리적 생산과 조합원의 가치 있는 소비를 잇는 것이라고 운동성을 확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후 아이쿱에서 윤리적 소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생협평론』 창간호가 나왔고 그때 특집 주제가 윤리적 소비인 걸로 기억합니다.

창간호 특집 주제를 보면서 앞으로 한국 생협에서도 윤리적 소비나 공정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구나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한국 생협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산자와 농업, 친환경이 중심이고, ‘생협은 이래야 돼’라는 고정된 이미지가 있었는데, 앞으로 지형이 좀 더 넓어지겠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국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경제, 무역 등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넓은 관점으로 협동조합운동을 하겠다는 출발을 알리는 신호가 『생협평론』 창간호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간 후 6년간은 협동조합을 다각도로 깊이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규범적으로 이해되던 협동조합을 보다 더 실증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합니다. 무엇보다 『생협평론』은 연구소 홈페이지,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등에서 PDF로 쉽게 볼 수 있어서 늘 감사하게 글을 읽었습니다.

김성미 저는 2010년에 매장이 집 주변에 생겨서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에 관심은 없는 상태였는데, 가입 교육을 받으면서 공정무역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내가 소비하려고 산 커피에 공정무역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땡~’ 하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의미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활동에 참여했다가 깊숙이 빠져들면서 점차

이론적으로 알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고, 『생협평론』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교과서 같은 내용이었고 이론과 활동이 차이가 있다 보니 인용한 학자도 모르고 문구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활동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고민도 했는데, 활동이 깊어지니 점차 이해의 폭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십 년 전만 해도 협동조합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생협평론』에 정리된 것들이 의미가 크고 역할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며 다시 읽어보니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고 그 당시 채워지지 않았던, 알고자 했던 욕구들을 『생협평론』이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생협평론』이 3개월에 한 번씩 오는데 잇을 만하면 또 옵니다. (웃음) 사실 3개월 동안 꼼꼼히 다 읽게 되지는 않지만, 다시 들춰보고 되새김하게 되는 책입니다. 저는 책을 받으면 편집위원장님의 글을 맨 먼저 읽습니다. 이번 호 주제는 이런 흐름이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고, 읽고 싶은 글부터 읽은 다음, 이후에 다시 읽어봅니다.

이선영 2011년에 조합원이 되었는데 저에게 『생협평론』은 처음엔 ‘색’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조합 사무실을 갔는데 책장에 ‘빨주노초파’로 꽂혀 있는 책을 보면서 ‘참 예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파랑색’까지 꽂혀 있었으니 아마 2014년일 겁니다. 그러다 2015년에 조합에서 협동조합 공부를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책으로 공부할까 의논하다가 당시에 협동조합에 대해 다루는 책이 별로 없기도 했고 ‘우리에게는 『생협평론』이 있잖아’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해 12월에 ‘생협평론 읽기 동아리’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잡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조합원들이 계셨어요. ‘한국에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하는 잡지가 『생협평론』밖에 없을 거다, 내용

도 구체적이고 사례도 들면서 차근차근하게 협동조합에 대해 이야기 하는 곳은 『생협평론』뿐이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구독 신청을 하는 데 부담이 됐습니다. 꼬박꼬박 책이 오면 다 읽어야 할 것 같아서였는데(웃음), 차차 모임 구성원들이 다들 구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생협평론 읽기 모임’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나요? 이런 모임이 많이 진행되고 있나요?

이선영 처음 모임 시작하고는 매월 한 꼭지씩 읽으면서 진행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재미있었고 좋았다, 무엇을 배우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읽은 소감을 나눕니다. 큰 제목을 보면 그 당시 협동조합 현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주제 중심이었고, 그 시기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담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모임은 37호에서 민관 협력과 중간지원조직을 다루었을 때인데, 우리 조합원들 외에 중간지원조직에 있는 세 분이 지역에서 오셨고 모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인 10명이 모였습니다. 이 제까지 주제에 따라 다양한 지역의 활동가 그룹을 만나기도 하면서 진행해왔는데 모임의 주요 구성원은 주로 활동가, 조합이사, 조합원입니다. 다른 조합들도 ‘생협평론 읽기 모임’을 진행하는 곳도 있기는 한데 지속되는 곳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합 이사회는 『생협평론』으로 이사학습회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 『생협평론』이 재미있는 책은 아니지만 꾸준히 읽힌다는 것은 현장 활동 경험에서 계속 문제의식이 생기고, 이 문제의식이 책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 동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협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마을에서도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싶은, 쉽게 읽힐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실리면 좋겠습니다.”

{ 이선영 }

정설경 『생협평론』은 현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대한 길잡이 역할도 하지만 현장을 잘 반영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현장을 반영할 수 있는 필자가 풍부하지 않은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을 계속 담아야 하고, 현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론적 욕망과 욕구들도 있었고, 그런 욕구들을 채워주면서 한편으로 거울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초창기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누구나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열망 때문에 협동조합을 중심 주제로 했습니다. 이론가와 현장 활동가들이 만나는 지점이 『생협평론』이었고, 특히 ‘좌담회’는 현장 사람들과 만나서 당시의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장이어서 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제가 무겁고 ‘누가 얼마나 읽겠어’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편집위원들은 늘 적합한 필자를 찾는 것을 고민했고, 그 점이 너무 어렵기도 했습니다. 초기만 해도 연구자들도 제한적이어서 늘 고민이었는데 그동안 각 대학의 연구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앞으로는 더 필진이 풍부해질 거라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사회 우리나라는 지식 생산과 학문이 식민주의적으로 발전해온 데다 현장과 별로 관계없이 전개되어서 공부가 더 재미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나마 1980년대 사회과학 담론이 있었지만 현장과는 관계없이 너무 추상적이었고 거대담론 위주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생협평론』의 독특한 점이, 주로 학자들이 글을 많이 쓰지만 학자들끼리만 오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장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긴장이 있어서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플랫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이경 조금 덧붙이자면 지금 쓰고 있는 박사논문이 ‘20세기 초 한국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발간된 신문이나 잡지 같은 매체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금융조합이나 산업조합 등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관제 조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협동조합이 설립되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어떻게 이해했고 운영했는지 등을 파악할 때 『개벽』이나 『조선농민』 등의 잡지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 누군가가 21세기의 협동조합 지형이나 변화를 파악할 때 『생협평론』이 가장 적절한 잡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자료는 데이터와 정책을 파악하는 참고 자료이지 민간의 역동적인 움직임까지는 파악할 수 없잖아요. 『생협평론』은 연구자들의 글뿐 아니라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들의 고민과 실천, 경험이 생생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겁니다.

사회 『생협평론』을 딱 받았을 때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생협평론』이 오면 무엇부터 보시나요?

김성미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길잡이’ 글부터 봅니다. 특히 근래 들어 시로 시작되는 ‘길잡이’ 글이 저에게는 마음에 탁 와닿는 것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소한 변화지만 『생협평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작은 변화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김이경 저도 그 부분이 좋았는데, 『생협평론』에서는 늘 딱딱한 제도 이야기가 많았는데 시가 등장하니까 ‘아… 협동조합은 인간이 참여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잡지에서 인간이 보인다고 할까요? 인

간의 숨결이 느껴지는 잡지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설경 저는 그 작은 변화가 큰 변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문학적 접근을 해주셔서, ‘딱딱한 사회적경제에서 인문학적인 사회적경제로 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이야기가 딱딱할 수도 있고 종사자들도 메말라 있을 수 있는데 인문학적인 색채를 담은 사회적경제 담론을 만들어가는 큰 변화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과도 잘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을, 동네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내가 사는 삶을 중심으로, 인문학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생협평론 읽기 모임이나 학습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제일 많이 하나요? 이론적인 것들인가요? 어떤 논쟁들이 있는지요?

이선영 이론적인 것보다는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기가 더 중심인데요, 활동과 연관된 주제를 이론적으로 깊이 있게 다룬 내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흥미로운 내용에 먼저 접근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재난과 관련된 것이었고, 평소 관심 있는 주제 중심으로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노년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모두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평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다가 모임을 계기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제도가 필요하더라’, ‘다른 나라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는 없으니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논의합니다. 현재 자신의 삶과 미래의 삶이 연결된 부분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논쟁은 많지 않지만 필자와 의견이 다르다든지, 동의한다든지 하는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아무튼 ‘좋은 삶’에 대

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 독자들의 의견이 편집회의 할 때나 아니면 『생협평론』 안에 반영되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아까도 이야기해주셨지만 2017년을 계기로 주제가 사회적경제로 바뀌었는데 어떤 계기였을까요?

이선영 정책과 제도 변화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사회적경제로 다 통합을 하다보니까 협동조합 협의회가 따로 활동하고는 있는데, 활동이 다 겹치니 협동조합 협의회를 그냥 사회적경제 파트 안으로 같이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서울 권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설경 『생협평론』이 다루는 주제의 폭이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는 파이^ㄷ가 큰데 협동조합은 사실 그중 일부이고, 어떻게 보면 서로 힘의 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 자체를 더 크게 가지는 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이경 저는 협동조합 관련해서도 아직 다룰 이야기는 많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협동조합의 직원 노동과 활동가 노동, 자원활동가의 보람과 보상,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교육, 여성 활동가의 돌봄노동에 기대고 있는 젠더 문제 등이 아직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조직과 제도·정책 위주로만 다루었다고 봅니다. 사회적경제를 조직이 아닌 생활을 새롭게 구성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사회적경제와 일상의 삶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내



“생태, 기후변화, 젠더, 소수자, 빈부격차, 차별 문제 등
아직 정면으로 다루지는 못한 담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예민한 문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었으면 합니다.”

{ 김이경 }

용이 필요치 않나 생각됩니다.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일상생활에 스며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철학적인 고민이 있는 담론으로 끌어갔으면 하고요, 그럴 때 ‘협동조합 철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가 아직까지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협동조합 개념으로 다가가면 보다 명확히 설명되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중심 축으로 두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역에 사회적경제 협의회도 있고 협동조합 협의회도 있는데, 협동조합 협의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큼니다. ‘협동조합 안에 있는 철학적 담론으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되는데,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기업화된 느낌이 있다’, ‘협동조합은 삶의 방식에 대해 좀 더 폭넓게 인문학적으로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생협평론』 내용이 사회적경제로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협동조합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꼭지가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노동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에서 더 다양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노동 부분에 대해 더 공부하지 않고, 더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회 협동조합은 역사의 뿌리가 깊고 인문학적 성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는 맥을 같이 하면서도 약간 떨어져 있는, 법과 제도로 국가가 주도하는 측면이 있어서 방향이 좀 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변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삶의 방향이나 철학 등이 중요한데 협동조합은 그 원천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연스럽게 앞으로 『생협평론』이 어떻게 나가면 좋을지로 이야기가 흐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설경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지?’ 그런 고민과 함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활동해보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아이쿱 생협 활동은 활동의 폭이 넓고, 생협 활동가들이 하는 우스갯소리로 약간 백화점식입니다. 특히 연합회 활동은 전국구 활동이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고, 인문학적인 성찰도 있고, 다양한 활동이 재미는 있었지만, 활동 현장과 내 생활이 분리되어 있어서 실생활에 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10년 생협 활동을 마무리하고 생활 반경 안에서, 동네 안에서 활동을 하니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동네로 들어와 보니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고, 마을공동체의 화두는 동네에서 어떻게 살까, 나이 들어서 뭐 하고 살까였습니다. 부모 커뮤니티, 시니어 활동, 반려동물 관련 활동 등 다종다양한 활동이 있는데 이 활동 속에서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민주적 운영 그리고 사회적경제라는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로 만난 사이에서 공동체성은 중요한 자산이고, 원하는 일을 시스템으로 구현하고자 한다면 사회적경제라는 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일을 만들까’라는 문제와 같습니다. 좋은 삶을 기준으로 일을 만든다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다루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생협평론』에 좋은 삶에 대한 담론이 담기면 좋겠습니다.

사회 그동안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가 압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외형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고, 사회적 설득을 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스토리들은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거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다루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십 년을 내다볼 수 있는 내용을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성민 }

이선영 내년엔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약 20%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말씀대로 압축성장은 재원과 연관이 있었던 것인데, 내년 되면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서아이쿱에서 작년부터 마을공동체와 연계해서 여러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여성 환경기 관련 사업, 올해는 ‘삶의 기록’에 관련된 사업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마을 안에 안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보된 곳에서 사람들 간 안전 수칙을 지키며 소규모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협평론』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협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마을에서도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싶은, 쉽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실리면 좋겠습니다.

사회 ‘생활협동조합’이라고 하면서도 생활에 대한 철학이 없었습니다. 생활이라는 것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사실 생활이라는 건 깊게 들어가야 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생활이 없는 시대를 살아왔고, 예를 들어 저녁이 없는 삶이었고, 이제 다시 ‘생활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김성미 최근에 10주년을 기념해서 ‘생협평론 밑줄 긋기’ 캠페인을 진행해서 『생협평론』을 다시 읽어보았는데 ‘사회적경제는 그냥 조직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한 인간 사회의 열망이다’라는 문구가 계속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몇 십 년 동안 폐쇄한 자본주의적 삶을 살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생겨난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를 조직으로만 바라보거나 기업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새로운 흐름에 대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하지 않나, 그동안 우리가 너무 지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경제라는 건 인간다운 삶에 대한 열망과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인데, 법제도나 정치에 따라 축소되고 달라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회 한편에서는 사회적경제 영역을 국가가 재정으로 지원해서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마중물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으니, 지원 기간 동안에 자생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등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이고 경제도 내리막길인 상황이라서 정치적 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지원이 좌지우지되고 기반도 만들기 전에 지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요새 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한다는 ‘영끌투자’라는 말이 있듯이 젊은 사람들은 부동산, 주식 투자 등 머니게임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진짜 경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구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생협평론』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미 지역 생협에서 활동할 때 『생협평론』을 활성화해보려고 조합원이나 활동가들에게 권해보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에게 중요한 책이지만 대중들에게는 너무 어려워서 접근성을 높이지 못하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가짜 뉴스도 많고 여러 정보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어 중심이 서지 않으면 외부 이야기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주체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책을 많이 공유하고 싶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일반 독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사회 초창기부터 그게 늘 딜레마였던 것 같습니다. 이론과 현장을 매개하는 역할이면서 학문적인 것만도 아니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도 담아보려고 여러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생협평론』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대중들이 쉽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타겟 독자층을 잘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이경 『생협평론』은 두고두고 읽는 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협동조합과 관련된 실증적인 글이나 연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보고서나 논문을 쓸 때 현장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는지 찾아볼 때 늘 『생협평론』의 글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대학원생이나 연구자들에게는 『생협평론』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하나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작년부터 세대교체 주제를 잡으면서 ‘청년의 소리’를 고정 칼럼으로 싣고 있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세대 간 단절이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생협도 86세대가 주도해서 만들고 40~50대가 중심일 텐데 선배들의 경험과 논의가 어떻게 유산으로 전승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이선영 저희 조합은 청년 조합원이 서너 명 있는데 활동에도 잘 참여하고 있고 이분들은 거의 지역 단체의 활동가들입니다. 또 조합에서 청소년 활동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서 재작년부터 공정무역 청소년 교육도 하고, 작년에는 괴산에도 가고, 올해는 랜선 동아리도 만들어 하반기에 공정무역 활동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에서는 활동의 지속가능함에 대한 고민이 늘 있는데 조합의 지속가능은 결국 지역의 문제이고 여기에서 청년이나 청소년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

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취업 준비 때문에 사실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청소년 활동을 만들려고 하는데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미래세대라고 하는 것 자체도 싫어합니다. 기성세대가 자기들에 대해 뭐라고 규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활동가들도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기 삶의 확장에 관심이 있어서 좋은 삶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선배 활동가들이 지역에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청년들도 이런 모습을 보고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우선 인구가 확 줄다 보니 청년세대는 인구 자체도 적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에도 불리한 점이 있고, 거기에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이런 담론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세대가 사회적경제를 발판으로 해서 사유와 공유의 언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김이경 『생협평론』과 세대 문제를 연결해서 생각할 때, 이제까지 다룬 주제가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 쪽 이슈가 중심이고 이번 코로나19 외에는 사회적인 큰 담론을 정면으로 다루지는 않았기 때문에 청년세대와 공감할 부분이 적었다고 봅니다. 아마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내 현안이나 제도개선 등이 더 급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생태, 기후변화, 젠더, 소수자, 빈부격차, 차별 문제 등 아직 정면으로 다루지는 못한 담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예민한 문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생협의 3~4인 가구 중심의 가족주의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층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이 많고 가족에 대한 상도 많이 달라지고 있기



“ ‘생활협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생활에 대한 철학이 없었습니다.

생활이라는 것을 매우 평면한 것으로 여겼는데,
사실 생활이라는 건 깊게 들어가야 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 김치남 }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담아야 세대교체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요.

그리고 꼭 사회적경제와 직접 관련은 없더라도 호혜, 연대, 협동, 인간의 관계, 인간의 문제 등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을 깊게 다루는, 철학적 고민을 하는 연구자들의 글을 다루는 꼭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미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과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다른데 정확한 개념을 딱 짚어주는 ‘주요 개념 길라잡이’ 같은 꼭지도 현장에 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다 보니 민주주의와 협동조합에 대한 2012년 원고에서 다룬 내용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다루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십 년을 내다볼 수 있는 내용을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설경 사람들은 현장의 혁신가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들, 혁신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기면 좋겠습니다.

사회 지금까지 돌아보기, 내다보기, 바람 등을 담아보았습니다. 내년 다룰 주제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웃음) 오늘 긴 시간 함께해주셔서 그동안 해온 작업을 자리매김하고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고,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생협평론과
사회적경제의
길
찾기



염 찬 희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생협평론』은 누구든 협동조합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다른 이의 생각을 진지하게 듣고
함께 토론해보는 공론장으로서 기능을
하겠다며 나섰다. 또한
건강한 담론 생산을 과제로 삼았다.
그 과제를 풀려는 의지는
현재도 한결같다.

생협평론, 협동조합 담론 활성화의 주역

2020년 겨울이면 『생협평론』을 창간한 지 10년이 된다. 이제 『생협평론』은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이 관련 지식을 얻기 위해서 찾아 읽는 몇 안 되는 신뢰할 만한 정기간행물 중 하나로 공인되고 있다. 2010년 12월 겨울 창간호부터 2020년 여름호까지 서른아홉 권을 쌓아 놓고 훑어보니, 협동조합의 이론 및 실천과 관련해서 짚어야 할 것들 중에 빠진 내용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리고 2017년 이후에는 협동조합에 맞춰왔던 초점의 범위를 사회적경제로 넓히고, 시의적인 주제를 포착해 다루는 것을 편집 방향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가능할 수 있다. 발행자는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지만 『생협평론』이 정론지(正論誌)로 자리할 수 있게 창간 때부터 편집권의 독립을 보장했고, 별다른 굴곡 없이 1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다양한 독자들로부터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생협평론』이 태어난 배경

2020년 현재 『생협평론』은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회적 의제를 생산하는 공기(公器)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시작은 아이쿱생협이라는 한 협동조합 조직이 협동조합에 대해 홍보하고 조합원 활동가를 교육할 전문적인 매체를 필요로 한 것에서 추동되었다.

1997년 9월 조합원들에게 물품 공급을 시작한 후 10년을 맞았던 2007년의 아이쿱생협연합회(당시는 한국생협연합회)는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앞날을 내다보는 깊이와 격을 갖춘 간행물을 계획했다. 활동가와 직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을 전문적으로 갖추기를 희망하면서, 동시에 조합원과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일반 대중과 공감대를 만들고 확산시켜야겠다는¹ 필요도 있었다.

한편, 2006년 5월 설립된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당시는 한국생협연구소)

에서는 이미 “연구 사업과 활동 등을 엮되 논문집 형태보다는 조금 쉽고 활동가들이 접할 수 있는 논집, 저널 정도 수준”의 ‘생협 논집’ 발간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² 연구소는 아이쿱생협연합회가 계획했던 “조합원이 icoop생협의 활동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할”³ 생협 전문지가 발간되도록 지원에 나섰고, 마침내 2008년 1월에 ‘조합원 활동가와 직원들이 보는 일정한 전문성이나 깊이를 갖는 잡지’를 『icoop생협평론』⁴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호를 선보이게 되었다. 같은 해 8월에 두 번째 준비호가 나왔는데 첫 호에 없던 ‘논단’ 부분이 새로 배치되었으며, 거기에 협동조합의 가치에 대해 논하는 꼭지와 생협의 어떤 장점이 경제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꼭지를 두어 총 두 개의 원고를 담았다. 바야흐로 전문지의 면모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의 경제 환경 속에서 『생협평론』으로 이름을 바꾸고 또 하나의 준비호를 2009년 10월에 내놓았다. 이 세 번째 준비호는 원래는 창간호로 계획했으나⁵ 사정이 여의치 않아 또다시 준비호라는 이름을 달았고, ‘경제위기의 시대 협동과 나눔의 경제를 실현하는 생협’이라는 부제가 붙어 아이쿱생협이 어떤 시대적 역할을 하고자 했는지 읽을 수 있다. 처음 준비호의 제호 ‘icoop생협평론’에서 icoop을 빼고 ‘생협평론’으로 바꾼 것은 한 조직 내의 소통에 머물지 않고

1 『2008 한국생협연합회 제8차 정기총회 자료집』 (2008.1.29).

2 『2007 한국생협연합회 제7차 정기총회 자료집』 (2007.2.28). 182쪽.

3 『2008 한국생협연합회 제8차 정기총회 자료집』 (2008.1.29)의 홍보팀 보고 부분.

4 『2009 한국생협연합회 제9차 정기총회 자료집』 (2009.2.4). 68쪽.

5 『2009 한국생협연합회 제9차 정기총회 자료집』 (192~194쪽)에 따르면, “기존 제작된 iCOOP생협평론 준비호를 창간호로 제작하며, 윤리적소비, 클러스터사업, A마크 등을 중심으로 한 생협의 정책, 사업 활동을 심도 있게 다루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홍보팀은 2009년의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한편, 배포 대상으로 조합원 외에 기자들까지 염두에 두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협동조합 영역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와 소통하는 잡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지는 ‘논단’ 부분을 채워줄 원고의 필자 선정에도 반영되었다. 아이쿱 내부 인사들이 필자였던 이전 호와 달리 협동조합 관련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외부 인사들로부터 원고를 받아 ‘논단’을 채웠다. 짧지 않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총 세 번의 실험, 그 과정에서 겪은 적지 않은 경험은 이후 창간 실무를 맡은 연구소의 자원이 되었다. 연구소는 조합원 활동가, 아이쿱생협 직원, 편집 전문가 등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인사에게 편집 책임을 맡긴 후 2010년 늦여름부터 창간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이전 준비호의 논단에 해당하는 ‘특집’에 많은 공을 들였고, 협동조합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라는 맥락에 관심을 둔 ‘이슈’에도 힘을 쏟았다. 필자는 해당 주제의 전문가로 선정하고, 원고의 깊이는 논문이되 기사 수준의 독해력을 갖는 대중적 전문지를 목표로 했다.

이렇게 해서 아이쿱생협의 사업과 활동, 정책을 조합원과 일반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매체, 동시에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 기능할 계간 『생협평론』 창간호가 2010년 12월 20일 세상에 나왔다. 협동조합의 다양한 이론과, 그보다 더 다양한 실천을 그 분야 전문가의 글과 말을 통해 담아내는 역할을 시작한 것이다.

애초에는 조합원, 활동가, 직원 등 아이쿱생협 구성원을 독자로 설정했으나, 창간호가 준비되던 2010년에는 생산자, 기자, 협동조합 관련 정책 담당자, 협동조합 연구자 등으로 구독 대상을 확장했다. 연구자 집단을 구독자로 상정한 배경에는 2009년 말 아이쿱생협이 성공회대학교가 석사과정의 협동조합경영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협동조합경영학과를 통해서 2010년 3월부터 매 학기 ‘협동조합 연구자들’이 양성되었는데, 그들에게도 『생협평론』이 쓰임새 있는 잡지로 역할하기를 기대했다.

창간호의 표지는 그림 없는 바탕에 색을 깔고 제호만을 강조하는 형식이었다. 원래는 자연드림 브랜드 색상인 붉은 벽돌색을 구현하고자 했으나, 인쇄를 거치는 중에 의도치 않게 빨강에 가까운 색감의 표지가 되었다.⁶ 편집위원회는 2호 발간을 논의하는 중에 겉표지의 색상을 무지개색으로 하되 매호 바꾸기보다는 년마다 색을 바꿔 1년 단위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지개 색은 아이쿱생협이 2009년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로고 색상인데, 협동(조합)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생협평론』의 표지 색으로 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편집위원회는 판단했다.⁷ 이렇게 『생협평론』 2호 편집회의에서 7년간의 표지 색상이 정해졌다. 1호가 빨강색이지만 2010년 겨울에 나왔기에 빨강색은 한 호에 그치고, 해가 바뀌면서 2호인 2011년 봄호부터 5호인 겨울호까지 네 개의 호가 주황색을 입었고, 2012년에는 노랑색으로, 2013년에는 초록색의 방식으로 계속 바뀌었다. 보라색으로 무지개색이 끝나자 표지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했고, 보다 쉽게 대중에게 다가가는 잡지의 외형을 갖고자 하는 필요가 반영되어 2017년 봄호(통권 26호)부터 바뀐 표지 디자인과 판형으로 현재에 이르렀다.

『생협평론』이 갖는 사회적 의미

협동조합에 대한 담론이 대중적으로 활성화된 시기는 2012년 이후라고

6 창간호가 조합원에게 배포된 이후 몇 통의 전화가 연구소 사무국으로 걸려 왔다. 빨강색 표지와 함께 일부 쪽지, 특히 천안함에 대한 언론 보도의 문제를 짚은 글 등이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항의성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2011 봄호(통권 2호) 편집위원장의 '잡집이' 「먹을거리만 다루라고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2008년 말 아이쿱생협은 ICA에 회원으로 가입 신청을 하고, 2009년부터 회원 활동을 시작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언론의 보도 건수의 추이에서도 확인된다. 네이버 뉴스 검색 서비스에서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등 전국지 10개를 대상으로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생산된 기사의 제목에서 ‘협동조합’을 열쇳말^{keyword}로 검색해보면, 2000년에 협동조합을 제목에 단 기사가 처음 등장하고 2008년까지 연평균 9건가량 보도가 되었다. 2009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는데 2008년의 배에 달하는 보도 건수였다. 특히 2012년에 급증했는데 이전까지 두 자릿수였던 기사 건수가 세 자리로 올라서서 200건 이상을 기록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협동조합에 관한 기사는 연평균 300여 건이다. 언론의 보도 건수가 대중의 관심 정도와 사회적 이슈 여부에 대한 지표라고 본다면, 2012년 이전까지는 한국 사회의 일반 대중이 협동조합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거나 협동조합이 사회적 화제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한국 사회는 IMF 체제에 돌입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가정과 지역사회가 무너졌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은 일자리 사업을 정부에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었다. 자활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담론이 언론을 중심으로 대중에게 소개되었지만,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협동조합은 대중의 관심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협동조합은 주로 학술 담론 영역에서만 다루어졌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학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협동조합학회가 1983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학술지 『협동조합연구』를 통해서 협동조합 관련 연구 결과물을 엮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 학술논문집은 200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대중과도,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나 활동가와도 접점을 넓히지 못한 채로 주로 연구자 집단 내에서만 유통되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것은 대부분의 학술논문집과 다르지 않은 현실이었다.

『생협평론』이 준비호를 내고 정기 발행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2000년대 말 협동조합 담론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협동조합 담론은 미미했고 그마저도 더러는 왜곡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현장 활동가들과 관계자들로부터 나오는 불만이기도 했다. 즉, 대중 담론 영역의 상황은 협동조합에 대한 언급도 부족했고, 그나마도 제대로 된 논의나 전문적인 지식의 유포가 부족했다. 활동 경력 10년을 지나면서 활동가들은 현장에서 점차로 자신의 지식을 반문하고 반성했던 것 같다. 2000년대 후반이 되면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다.

『icoop 생협평론』이 드디어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생협신문』을 만들며 한편으로는 생협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가 있으면 좋겠다고 꿈꾸었던 일이 또 하나 이루어지게 되어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 시대에 맞는 운동의 방향을 잡아주고 상생의 가치를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키며 더 폭넓은 활동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경희·이정주, 『icoop 생협평론』 준비호 ‘발간사’ 중에서

활동가들의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협동조합에 대한 담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은 『생협평론』 발행의 주체가 된 아이쿱연구소에게는 당연한 당면 과제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협평론』은 협동조합 관련 담론을 아이쿱생협 안에 갇히지 않도록 애썼다. 『생협평론』으로 인해 생산된 담론이 원심력을 갖고 한국 사회 구석구석에까지 가서 닿았다가, 반동의 힘으로 다시 구심을 향해 움직여 내부를 자정하고 또다시 원심으로 끊임없이 반복운동을 하게 한다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했다.

생협평론을 창간하여 구성원 서로 간에 그리고 생협과 바깥세상 간에 소통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가 공유할 담론을 생성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 정병호, 『생협평론』 창간호 ‘발간사’ 중에서

『생협평론』은 누구든 협동조합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다른 이의 생각을 진지하게 듣고 함께 토론해보는 공론장으로서 기능을 하겠다며 나섰다. 또한 건강한 담론 생산을 과제로 삼았다. 그 과제를 풀려는 의지는 현재도 한결같다. 협동조합에서 사회적경제로 범위를 넓힌 변화 말고는 달라지지 않았다.

협동조합에서 사회적경제로

협동조합과 관련된 전문 잡지가 없던 시절 대중적인 전문지를 지향하면서 등장한 『생협평론』이 요구하는 원고의 조건은 하나였다.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거 없는 주장은 사양했다. 『생협평론』은 협동조합과 관련한 사회적 의제를 던질 수 있는 ‘특집’ 부분을 핵심으로 삼았는데, 이 부분에는 흔히 소논문에 가까운 수준의 글들이 포진했다. 창간호에서는 윤리적 소비를 다뤘고, 최근 호(2020년 여름호)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다뤘다. 각각 ‘윤리적 소비, 신자유주의 질서를 거스르다!’와 ‘재난의 시대, 사회적경제의 길 찾기’를 특집 제목으로 삼았다.

『생협평론』 창간호는 아이쿱생협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정체성으로 천명한 ‘윤리적 소비’를 조합원과 활동가 그리고 직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동시에 소비자나 일반 대중을 향해서 생협이라는 사업체는 일반 기업들과 달리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고 사

회적 가치를 담은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리려 했다. 2007년부터, 주로 공정무역을 소개하는 지면에서 ‘착한 소비’와 ‘윤리적 소비’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는데, 관습적으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졌던 이 두 개념이 당시에는 자주 혼동되어 쓰였다. ‘착한 소비자’라는 말은, 소비자가 지나치게 착하면 문제가 있는 상품이나 불편한 서비스에도 잘 참아서 생산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 개선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때 자주 사용되었다.⁸ 동시에 공정무역 등을 논의하는 장에서는 ‘정직한 상품을 알아보는 소비자’의 뜻으로 전용되기도 했는데, 이 또한 윤리적 소비자의 뜻과는 다른 것이었다. 하지만 언론은 한동안 ‘윤리적’이라는 단어가 갖는 딱딱함을 피하기 위해 ‘착한’이라는 부드러운 단어를 선택해서, 가격과 품질보다는 환경과 인권을 고려한 (윤리적) 소비 현상을 이전과는 다른 소비 형태의 등장으로 소개했다.⁹ 이런 상황에서 『생협평론』은 윤리적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가다듬으려 했고, 다만 그 개념의 제대로 된 정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맥락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인 의제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

소비행위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이념적 소비 즉 윤리적 소비자 운동이 일어난 것은 세계화의 거센 바람과 관련이 있다.

—이정옥, 『생협평론』 창간호 ‘특집’ 중에서¹⁰

8 「‘착한 소비자’가 금융서비스 뒷걸음치게 한다」(제윤경, 〈한겨레〉 2006.11.06.)

9 한국의 언론은 2006년에 처음으로 영국과 미국 등의 윤리적 소비(Ethical Consumption) 운동을 소개했는데(「“클린 커피” “그린 웨딩”... ‘윤리적 소비문화’ 새 물결」, 조이영, 〈동아일보〉 2006.3.30.), 2007년 중반부터 ‘윤리적 소비’ 대신 ‘착한 소비’를 선택하거나, 둘을 병기하는 경향을 띠다가 2008년 중반 이후부터는 ‘착한’이라는 단어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앞의 기사와 함께 「사회를 변화시키는 윤리적 소비자」(김정숙, 「제주일보」, 2010.1.11.)도 비교해서 읽어볼 만하다.

10 이정옥 (2020). 「소비가 이념적이고 윤리적이기까지 한 까닭은?」, 『생협평론』 창간호, 13쪽.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야기된 세계 경제 불황으로 많은 기업이 파산하고 수많은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전 세계 지식인들이 시장에 대한 염증을 표출하고 자본주의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많은 이들이 이러한 발언에 귀를 기울이고 동의했다. 이런 와중에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빈부격차와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 중 하나로 일각에서 협동조합운동에 주목했다.

마르크스와 그람시 등 좌파 이론가들은 물론 밀이나 미드 같은 중도 개혁파와, 발라스 같은 오른쪽 학자들 모두 협동조합에서 인류의 미래를 찾은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정태인, 『생협평론』 창간호 ‘축사’ 중에서¹¹

협동조합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라는 노암 촘스키Noam Chomsky의 주장이 언론에 소개되었고, 2009년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거대한 전환 The Great Transformation, 1944』이 번역 소개되는 등 2000년대 중하반기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글 생산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한국 사회의 주류 연구 진영에서도 자연스러워졌다.

한편, UN이 2009년 12월 18일 총회에서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2008년의 미국 금융위기발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UN은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에 주목했고, 특히 빈곤 퇴치, 고용 창출, 그리고

11 정태인 (2020). 「인간의 본성, 그리고 생협」, 『생협평론』 창간호, 6쪽.

사회통합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협동조합은 역사를 통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살아남는 사업 모델임을 입증해왔고,¹² UN은 가정과 지역사회를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할 대안으로 협동조합에 주목한 것이다.¹³ 즉,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를 포함한 일반기업에 비해 경제위기 극복에서 우수성을 보였고, 고용 부문에서 탁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였다. 그리하여 UN은 2012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에 회원 국가와 관련 이해당사자 조직에게는 협동조합이 사회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대중이 알도록 애쓰고, 공동의 경제적 필요를 해결하려는 개인과 조직에게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성장시킬 것을 장려했으며, 각국 정부에게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을 돕는 국가 정책과 법제를 수립해달라고 권고했다.¹⁴

한국에서는 2011년 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라는 큰 변화는 『생협평론』의 특집과 이슈에 담겨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냈다. 예를 들면, 기본법 시행의 성과를 짚어보거나 연동해서 생협법을 포함한 협동조합 법제도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킨 것이었다. 2014년 사회적경제기본법의 국회 발의 과정에도 주목하여 담론으로 만들었다. 그간 협동조합에 관심의 초점을 맞춰왔던 『생협평론』은 2017년부터 사회적경제 안에서 협동조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변화를 꾀했다. 본격적으로 사회적경제 전문지로 외연을 확장했지만, 편집의 지향과 방향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담론 생산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있다. 2020년 여름의 『생협평론』은

¹² 협동조합학자 존스톤 버첼(Johnston Birchall)은 10년 이상 생존 비율을 볼 때, 협동조합이 일반기업의 2배에 달한다는 등의 조사 결과를 담은 '위기 시대에 강한 협동조합기업 모델' 보고서를 2009년 ILO(국제노동기구)에 제출했다.

¹³ <https://www.un.org/en/events/coopsyear> 참조(2020년 8월 15일 접속)

¹⁴ <https://social.un.org/coopsyear/about-ityc.html> 참조(2020년 8월 15일 접속)

코로나19 위기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묻고, 협동과 연대를 통한 해결을 우리 사회에 권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활동을 보고 있자니 『생협평론』이 여전히 건강하구나 싶다.

생협평론과
사회적경제의
길
찾기



조 현 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미디어 지형

사회문제 해결에 소명을 둔
사회적경제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진단과 대안 모색을 주 기능으로 삼는
언론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언론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반면, 사회적경제 영역은
가치와 의미 중심으로 (...)
사회적경제를 알리고 확산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더 넓은 것만은 사실이다.



‘솔루션 저널리즘 네트워크’ 누리집 (<https://www.solutionsjournalism.org>)

‘사회적경제’와 ‘솔루션 저널리즘’,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다

“문제는 비명을 지르지만 해법은 속삭인다 The problems scream, but the solutions whisper”는 말은 ‘솔루션 저널리즘’을 설명할 때 흔히 인용되는 문구다. 솔루션 저널리즘은 문제를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언론이 문제에 대한 해법과 결과를 추적하는 보도 양식을 말한다. 지난해 <경기 뉴미디어 페스티벌>에 참여한 ‘솔루션 저널리즘 네트워크’ SJN, Solutions Journalism Network의 CEO이자 공동 설립자인 데이비드 본스타인 David Bonstein은 “잘못을 지적하는 데 집중했던 기존 저널리즘에서 벗어나 사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사에서 좋은 기사를 쓰는 일은 ‘취재’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일, 즉 얼마나 현장에서 고생해서 쓴 글인가에 따라 판가름되곤 한다. 현장을 해상도 높게 보여주고, 우리 사회 이면의 실상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좋은 기사는 대개 잠입 현장취재의 르포 형태 기사다. 힘든 만큼 좋은 기사로 손꼽히지만, 때론 독자를 관객으로 머물러 있게 하거나 현장을 오해하게 만드는 기사도 있다. 현장의 생생한 스펙터클이 펼쳐지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해법보다는 공공성을 확대하고 정부의 의지를 담은 정치적 결단과 예산 문제가 풀려야 한다는 이야기로 서둘러 마무리 짓는 기사를 찾아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반해 ‘사회적경제’를 다루는 기사는 태생적으로 ‘사회문제’를 드러내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중심 골자는 ‘해법’에 있으며, 실제 문제를 해결한 사례나 인물, 정책이나 사업을 다루는 기사가 주류를 이룬다. 사회적경제 기사의 정체성이 비판과 감시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협력과 연대의 힘을 기반으로 지금 우리가 시도해볼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최대한 동원해 실행에 옮기는 데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선 사회적경제 분야 기사가 미담 기사로 흐르기 십상이라는 우려도 있다. 때문에 ‘무엇’이나 ‘누구’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에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 조직과 지역에 도입해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현장과 함께 ‘연구자’의 자세로 탐구하기도 하고,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네트워크와 함께 확산 가능한 정책과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도 있다.

때로는 연구자, 때로는 활동가가 되는 사회적경제 분야 언론인

때문에, 솔루션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경제를 다루고자 하는 기자는 ‘연구자’적인 성격과 ‘활동가’적인 성격이 모두 필요하다. 해법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해야 하며,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과 연대하며 실행으로 이어지는 맥락에 동참해야 과정을 따라갈 수 있다. 문제점을 제

대로 짚는 것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독자들이 현장을 마치 영상처럼 떠올릴 수 있도록 생생하게 묘사하는 동시에 ‘본질’에 맞게 그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1980년 광주 시민들을 언론이 민주시민으로 그렸는지, 폭도로 그렸는지 생각해보면 명쾌하다. 폭도로 규정해 전달했다면 쓰지 않은 것만 못하다. 본질에 맞게 쓴다는 의미는 현장의 본질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질문이 있어야 하고, 맥락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사회적경제 현장의 본질은 서 있는 곳에 따라 달리 규정될 때가 많다. 저마다의 진심과 사실, 역사가 뒤섞여 있기도 하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글은 허구일 때가 많다. 언론이 정파성을 띠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다만, 사회적경제의 본질과 원칙,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일관된 입장을 가져야 한다. 반감과 갈등으로 치닫는 공론장을 거부하고, 사회적경제와 공동체의 결속을 지지하길 바란다.

사회적경제와 언론은 태생부터 닮았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하나의 기업으로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갈등하는 곳이 소위 ‘언론사’라고 할 수 있다. 공공이 언론을 소유하면 관변 언론이 되기 쉽고, 시장으로 내몰리면 시장 논리에 얽매이기 쉽다. 언론이 사회적경제의 비즈니스와 태생적으로 닮아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일은 의외로 간단하다. 이봉현 <한겨레> 저널리즘책임무실장도 「좋은 언론의 물질적 토대」라는 칼럼¹에서 “먹고사는 문제 앞에서 언론 윤리와 취재 보도의 원칙이 희미해지는 한국 언론의 현실”과 “미디어 환경 변화로 사업 모델이

무너진 전통 매체의 생존 위기” 문제에 대해 짚은 바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를 둘러싼 좋은 언론 역시 물질적 토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는 못했다.

기업의 구조적인 정체성뿐 아니라, 주제의식 역시 닮아 있다. 사회문제 해결에 소명을 둔 사회적경제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진단과 대안 모색을 주 기능으로 삼는 언론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언론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반면, 사회적경제 영역은 가치와 의미 중심으로 비용을 덜 들이면서 언론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알리고 확산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더 넓은 것만은 사실이다.

이러한 추세에 걸맞게 언론인 스스로 사회적경제 연구를 위한 모임도 결성했다. 2013년 2월 김현대 <한겨레> 발행인(당시 선임기자)을 중심으로 <머니투데이>, <경향신문>, <시사IN>, <오마이뉴스>, <조선일보>, CBS 등 신문과 방송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같이 하는 다양한 언론인들이 모여 ‘사회적경제언론인포럼’을 출범시켰다. 2017년엔 서울의 사회적경제 기업 30곳을 취재한 현장 리포트를 엮어 『사회적경제 참 좋다!』²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사회적경제’ 보도에 동참하는 언론들

<한겨레> 역시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 CSR(사회책임경영)을 중심으로

1 이봉현 (2020.6.16). 『좋은 언론의 물질적 토대』.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9629.html>

2 사회적경제언론인포럼 (2017). 『사회적경제 참 좋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 다운로드 링크 <http://www.ecommons.or.kr/book/1001574996739>

HERI 포커스



공공조달은 사회적경제의 숨구멍...“우선구매 의무” 법제화를”

HERI | 2020. 08. 10

사회적 경제 3법 이번에는 꼭! ③ 판로지원법 사회적 가치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시장에서 영리기업과 경쟁엔 한계 공공구매가 자생력 키워줄 ‘마중물’ ‘5% 우선구매’ 등 판로지원 시급 품질 개선악용 방지 노력도 ..



코로나로부터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가?

HERI | 2020. 07. 30

시민건강연구소 주최 ‘의료자원 위기’ 토론회 감염병으로 대두된 의료자원 배분의 문제 한정된 자원에서 부딪히는 효율성과 정의 시장경제 원리..

Search



2019 아시아미래포럼

대전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합의



알림

[알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

[알림] 13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안내

[알림] '주력임대차보조금' 계정을 위한 일...

보고서 · 자료집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누리집 (<http://heri.kr>)

‘99% 경제’, ‘착한 기업’ 등의 담론을 형성하며 싱크탱크로서의 기능과 언론 기능을 결합시켰다. 조직(구 한겨레경제연구소, 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을 만들고, 인력과 지면을 투자하며 대안경제로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동반자를 자임하고 활동하고 있다. <한겨레> ‘더 나은 사회’ 지면과 <HERI Review>라는 이름으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담론과 의제를 공론화하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플랫폼 종사자 지원 방안’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는 연구를 통해 사회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대안을 모색하며 싱크탱크로서 해당 의제를 공론화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조선일보>에서도 2011년부터 ‘더 나은 미래’라는 공식섹션을 통해 NPO, 사회적경제, CSR 등의 분야를 폭넓게 보도하면서 독자의 폭을 넓히고 있다.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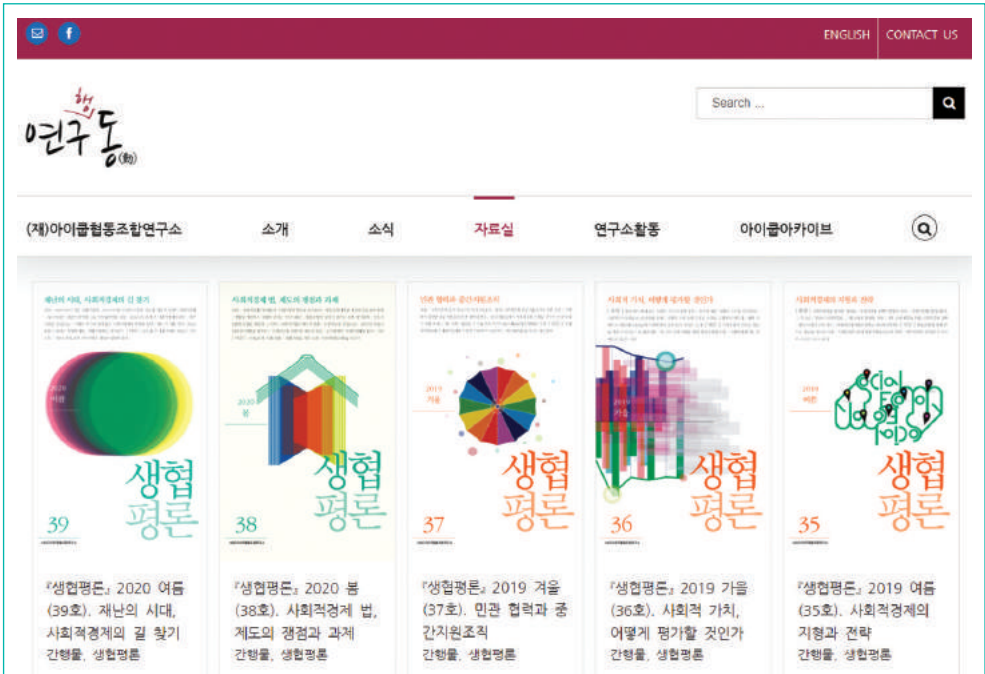
적경제가 보수와 진보의 아젠다를 스펙트럼 넓게 포괄할 수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가 좌우 정치 이념을 망라해 실용적인 대안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는 2012년 대안경제 미디어 이로운넷 사이트를 런칭했다. 〈이로운넷〉은 2008년 윤리적 소비 인터넷쇼핑몰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이로운몰’로 시작해 2012년 인터넷신문 사업을 등록하면서 본격적인 사회적경제 전문 언론사로 자리매김했으며, 2017년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설립 당시 새로운 시민 언론의 필요성을 느낀 개인들의 출자로 설립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한 비영리 미디어 〈라이프인〉은 사회적경제 전문 온라인 언론사로서 생명·안전과 사회적경제 분야 구석구석 풍부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경제 분야 온라인 기사의 절대량이 풍성해진 것은 〈이로운넷〉과 〈라이프인〉의 활동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지역사회 풀뿌리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중부일보〉, 〈대전신문〉, 〈충남일보〉, 〈무등일보〉, 〈부산일보〉, 〈경남신문〉 등의 지역 신문에서 사회적경제 소식을 접하는 것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팔을 걷은 지자체들과 지역의 공공기관 덕분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양상이다.

‘좀비 협동조합 지원’, ‘부실·탈법 판치는 사회적기업’ 등의 프레임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던 〈한국경제〉조차도 최근 보도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한겨레〉뿐 아니라 〈경향신문〉, 〈서울신문〉, 〈국민일보〉 등 주요 일간지는 물론 보수 언론으로 손꼽히는 〈동아일보〉, 〈중앙일보〉에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경제 소식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

언론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선택한 〈프레시안〉과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취지하에 시민 기자들의 참여를 동력으로 운영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누리집 '자료실'의 <생협평론> 아카이브 (<http://icoop.re.kr>)

되는 <오마이뉴스>, 영상매체를 위시로 움직이는 미디어협동조합 <국민 TV>에서도 사회적경제 콘텐츠는 무게 있는 꼭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미디어에서는 정권의 드나듐에 관계없이 사회적경제 관련 콘텐츠가 꾸준히 다뤄지고 있다.

매거진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 분야 미디어 활동도 눈에 띈다. 1991년 영국에서 창간한 글로벌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그룹 '빅이슈'는 2010년 한국판 『빅이슈』를 창간해 공익을 지향하는 대중 매거진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S. Economy』(에스이코노미)는 2016년부터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이야기를 담는 온·오프라인 매거진으로 활동하

고 있다. 학술적 기능과 미디어 기능을 크로스오버한 계간지 『생협평론』은 2010년 겨울호로 시작해 2020년 가을호에 이르러 지령 40호를 맞이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이슈를 의제화하고, 협동조합과 생협에 대한 담론을 풍부하게 만들며 학술적 기능과 미디어 기능을 크로스오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문이나 방송 등 전통 매체와는 다른 문법으로 소통하고 있는 ‘마을미디어’의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마을미디어는 주민들이 소유하고 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미디어다. 주민이 직접 신문, 라디오, TV, 잡지를 만들어 마을의 소식을 공유한다. 중앙 매체에서 다루지 않는 마을 구석구석의 현안을 파악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이 직접 마이크를 잡거나 기자가 될 수도 있다. 〈공동체 라디오〉는 2004년 시범방송 뒤 서울의 용산·강북·노원·구로·강서·관악·마포, 고양, 성남, 대구, 광주, 공주, 전주 등 전국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공동체 라디오’란 FM 주파수 대역에서 작은 출력을 이용해 지역 밀착형 방송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외에도 〈은평 시민신문〉, 〈새구로마을신문〉, 〈성북마을방송 와보송〉, 〈양천구마을미디어 줌인네거리〉, 〈가재울라디오〉, 〈마을미디어 광진사람들〉 등 다양한 마을 미디어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어서 대부분의 마을 미디어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며 들고남이 심한 편이다.

밀레니얼 세대와의 소통 관건이다

이봉현 〈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은 「밀레니얼 세대가 좋아하는 뉴스의 6가지 비밀」³이라는 기사에서 미디어 스타트업들이 밀레니얼 세대의 시선을 잡기 위한 노력을 종합·분석한 결과, 성공적인 사례에서 드러나

는 특징을 6가지로 정리했다. ① 표적 독자를 명확히 하라, ② 큐레이션은 ‘필수’다, ③ 효능감을 주라, ④ 좋은 삶에 관해 얘기하라, ⑤ 독자의 ‘관여’를 끌어내라, ⑥ 플랫폼과 채널에 ‘정답’은 없다가 그것이다. 조사 대상이 된 매체는 국내외 언론사와 뉴닉^{NEWNEEK}⁴, 닷페이스^{.FACE}⁵, 어반플레이^{URBANPLAY}의 ‘아는동네’⁶, 베네프트^{Benefit}⁷ 같은 온오프라인 미디어 매체들이다. 미국언론연구소^{API}가 2015년 발표한 「밀레니얼 세대는 어떻게 뉴스를 읽는가^{How Millennials Get News}」라는 보고서에서 이들 세대는 “뉴스를 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읽는다”고 분석했다.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는 전통적인 신문과 방송 뉴스 영역 밖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미디어 생태계는 이들과의 소통에 미숙하기만 하다. 이러한 문제는 미디어 자체의 숙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경제의 확산을 위한 과제 역시 단연 ‘밀레니얼 세대와의 소통’이다.

미디어 스타트업들 중 일부는 사회적경제와 함께 형성된 토양 속에서 비교적 안정되게 싹을 틔우기도 하지만, 대형 언론사도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지금, 미디어 스타트업 대부분이 생존의 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사회적경제 분야에 합류한 전통 매체,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온·오프라인 매체, 사회적경제의 의제를 발신하는 전문잡지, 그리고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미디어의 기존 문법을 바꿔내는 마을 미디어나 미디어 스타트업 모두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부침을 겪고 있다.

3 이봉현 (2019.11.25) 「밀레니얼 세대가 좋아하는 뉴스의 6가지 비밀」.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918317.html>

4 뉴닉 홈페이지 <https://newneek.co/>

5 닷페이스 홈페이지 <https://dotface.kr/>

6 어반플레이 ‘아는동네’ 홈페이지 <https://www.iknowhere.co.kr/>

7 베네프트 홈페이지 <http://www.benefit.is/>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사회 구성원들 간에 공유된 의미와 해석, 소통과 협력을 강화시키는 언론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설양환(2017)⁸은 특정 이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해석의 틀을 언론이 제공하는 의미 방향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알랭 드 보통Alain de Botton은 그의 책 『뉴스의 시대*The News : A User's Manual*, 2014』에서 “우리는 태어나서 고작 18년 남짓 교실에 갇혀 보호받을 뿐, 나머지 인생은 사실상 어떤 제도권 교육기관보다도 더 커다란 영향력을 무한정 행사하는 뉴스라는 독립체의 감독 아래에서 보낸다”면서, 뉴스의 막강한 권력을 경계하기 위해 뉴스를 제대로 읽는 능력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달리 말하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언론의 관점과 해석이 보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절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솔루션 저널리즘’과 같은 길을 걷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취재와 보도는, 방향을 설정한 뒤 정보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취재·보도하는 관행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기존의 보도 방식은 핵심적인 방향을 설정한 뒤, 두둔하는 팩트는 과대 포장하고 논박하는 팩트는 과소 보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방향을 설정하되 지독한 자문(自問)이 필요하다. 언론에 무관심하고 냉담해진 독자를 사회적경제와 함께 ‘문제 해결자’로 초대해보면 어떨까.

8 설양환 (2017). 「국내 신문 기사에 나타난 영재교육 및 영재에 대한 담론분석」,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생협
평론
10주년



© 진중섭



연대의 길 밝혀주는 지혜의 별자리

특집

I

생협평론과
사회적경제의
길
찾기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사회적경제가 그린뉴딜과
만날 수 있는 영역은
에너지, 건물, 교통, 폐기물,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교육, 재난 대비, 돌봄,
건강과 의료, 예술과 놀이, 먹거리 등
다양하다.

사회적경제로 그린뉴딜 하기

2020년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기억될 것 같다. 긴 장마로 비가 54일간 내렸다.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라는 해시태그와 이미지를 SNS에 올린 기후위기 전복비상행동의 캠페인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많아졌다. 게다가 1973년 기상청이 관측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7월 평균 기온이 6월보다 낮았다. 지금의 이상기후는 지난 150여 년 동안 인간이 뿜어낸 온실가스가 지구 평균기온을 1℃ 올렸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이 전망하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은 1.5℃, 앞으로 8년만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40년 우리는 1.5℃ 상승한 지구에서 살아야 한다.

지구 평균기온을 올리는 온실가스는 화석에너지 연소에서 주로 발생한다. 석유, 석탄, 가스를 태워서 작동하는 탄소 경제,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로 작동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기후위기를 막기 어렵다. 나오미 클라인은 “자유시장의 전략서에 포함된 모든 원칙을 깨부수고, 기업들의 권력 행사를 통제하고, 지역경제를 재건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탈환하면, 우리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¹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다. 그런데 ‘어떻게?’

‘탈탄소 경제’ 사회로의 전환과 대안경제 구축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1.5℃ 이내에서 지구 평균기온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순증 제로^{Net Zero}를 달성해야 하고, 2030년까

¹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 2014).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 자본주의 대 기후』(*This Changes Everything : Capitalism vs. the Climate*), 이순희 옮김(2016). 열린책들.

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각국은 UN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제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왔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삭감,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탄소국경조정, RE100 등을 도입했다.² 동시에 탈석탄발전과 내연기관 생산·판매 금지 연도 설정, 비행세, 육류세 도입 등 에너지전환과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제와 산업 전반의 탈탄소화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와 기후 재난을 겪으면서 ‘어떤 경제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각종 재난의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시민의 삶을 지키는 생활경제, 대안경제가 필요하다. 자본주의가 초래한 환경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대안경제는 경제활동의 주체, 공간, 목적, 작동방식부터가 달라야 한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순증 제로를 달성하려면, 꼭 필요한 생산과 소비로 경제 규모를 축소해야 하고, 상품과 인간의 이동 자체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지역 단위 생산과 소비가 중요해진다. 국가 간 이동이 감염병으로 통제되고 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해지면 수출주도경제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 결국 내수가 중요한데, 내수도 어떤 생산과 소비인지를 따져야 한다. 첫째, 한정된 자원을 사용해 생산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둘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산과 소비인가 셋째, 기후 재난에 대응해 지역사회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대안경제는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지역을 기반으로 시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² 탄소세는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해 가격을 높임으로써 소비를 줄이는 것이고, 배출권거래제는 시장을 통해 다배출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 탄소국경조정금은 유럽연합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덜한 국가의 상품에 내재한 탄소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RE100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기업 활동을 할 것을 약속하고 지키는 방식이다.

하고, 지역사회 회복력 증진을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와 그린뉴딜

7월 14일,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전국민고용안정망을 기반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발표 후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코로나19 이후 사회 대전환에 대한 급박한 문제 인식과 방향성 제시가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는 온실가스는 줄였지만 불평등은 심화시켰다. 갑작스러운 재난은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긴다. 우리에겐 기후위기에 대응해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불평등 해소를 동시에 접근하는 그린뉴딜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지역 기반 뉴딜이라 밝히고 지자체 협력을 강조했다. 곧이어 정부는 8월 13일, ‘사회적경제³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6만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⁴ 민간·공공 판로 확대와 연구·개발R&D 강화, 지역별 허브 조성, 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 사업모델 발굴,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 혁신 성장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기재부·중기부가 맡아 지원하며, 사회적경제 기본법·사회적가치기본법·판로지원특별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을 조속히 추진한다. 정부가 뉴딜에서 지역과 사회적경제를 강조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 또한 ‘어떻게?’라는 질문이 남아 있다.

³ 사회적경제 조직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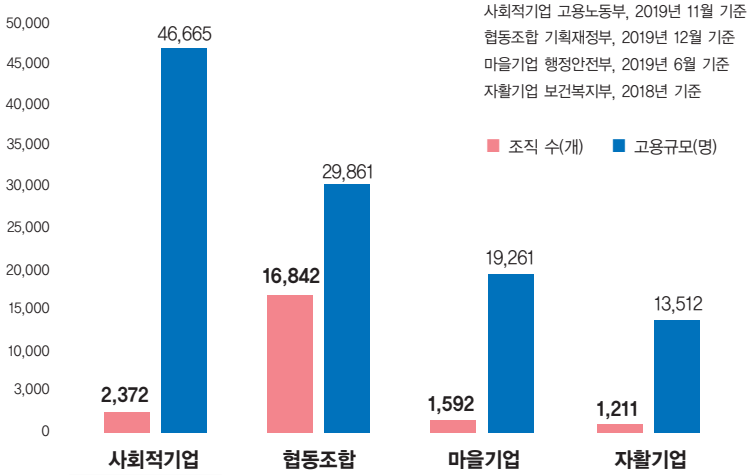
⁴ 관계부처합동 (2020.8.13),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필요'와 사회적경제가 만나는 일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병원, 폭염과 한파를 견디는 안전한 집, 편리한 공공교통과 자전거 도로, 폐기물을 만들지 않는 자원 순환, 집 근처에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공원이다. 이상기후에 대비해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고, 새로 짓는 건물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노후 건물은 그린 리모델링으로 추진해야 일자리도 만들고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교육을 하고, 강과 숲을 가꾸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며,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시민들도 재난에 안전할 수 있도록 재난 대비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또 동네 친구와 이웃은 긴급할 때는 도움을, 평온할 때는 행복감을 주는 존재가 되고, 더불어 이들과 동네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사회적경제는 참여하는 주체들의 헌신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사회적경제 현황을 보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총 2만 2,000여 개이고, 고용 규모는 10만 9,000여 명이다. 경제 규모도 2019년 기준으로 1조 3,000억 원대이다. 10여 년 이상 일궈온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성과를 잘 분석해서 그린뉴딜과 연결해보자. 사회적경제가 그린뉴딜과 만날 수 있는 영역은 에너지, 건물, 교통, 폐기물,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교육, 재난 대비, 돌봄, 건강과 의료, 예술과 놀이, 먹거리 등 다양하다. 분야별로 어떤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는지와 그린뉴딜과 연결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살펴보자.

〈그림1〉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 사회적기업 고용노동자 가운데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28,263명(60.6%)

출처 : 통계로 보는 2019 사회적경제 현황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5645>)

1) 에너지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 공동체 재생가능에너지

기후위기의 강력한 대안은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국가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에너지 생산에 나서는 ‘에너지 시민’들의 협동조합 활동이 활발하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2016년 100개에 이르던 에너지협동조합이 2019년 242개로 크게 늘었다.⁵ 경기도는 2018년부터 예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모든 시민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주

체가 되는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2019년 10월 기준 49개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설립·운영 중에 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⁶은 24개의 발전소에서 연간 3,299MW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 전기를 판매하는 수익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 시공, 전기공사, 유지보수업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2020년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정부가 지정하는 태양광 분야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전담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⁷

서울시 동작구 상도3·4동 일대 성대골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고, 척박한 도시에서 에너지 효율과 생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2년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과 결합해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했고, 사업이 끝난 뒤에도 주민들은 마을닷살림협동조합, 국사봉중 생태에너지전환 사회적협동조합, 성대골에너지협동조합 등 3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수요자원 관리 사업, 에너지 저장장치를 결합한 전력중개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경제 조직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2016년부터 ‘리빙랩 Living Lab’ 방식을 통해 주민들이 마을 연구원으로 태양광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지역사회에 맞게 적용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면서부터였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는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환경청에서 ‘공동체 에너지’ 과정을 만들어 주민이 직접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홍

5 김제남 외 (2020).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발전방향」, 서울연구원.

6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http://www.ansansolar.kr/>

7 「올해 신재생에너지 A/S 전담업체 확정」, 〈투데이에너지〉 2020.8.4.

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마을 단위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기술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다.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연합회도 8월 18일,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민 참여와 에너지전환 지역 역량을 위한 기반 구축 작업에 나섰다.

2) 주택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기회복과 재투자법’에 따라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건물 내후화^{Weatherization} 사업⁸에 50억 달러(5조 6,000억 원)를 투입해 3년 만에 100만 가구에 내후화 사업을 진행했다. 성과는 일자리 창출, 에너지 소비 절감, 가구소득 보전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소득층 주거지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리모델링과 마을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다. 자치구 또는 동 단위로 지역별 인적자원(동네 설비업체, 집수리 사업, 설비제품 업체), 기술지원 등을 조사해, 지역에서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를 진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주택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은 집수리 사업과 연결하여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키울 수 있는 분야이다.

2008년 원주에서 시작한 집수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노나메기’가 있다. 노나메기는 ‘단열과 기밀’을 강조해 주택에 에너지를 결합해왔고, ‘주택에너지진단사 제도화’에 기여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정생활기술

8 내후화 사업(Wheatherization asistance program)은 1973년 석유파동으로 저소득층의 난방 요금을 줄이기 위해 1976년 ‘에너지 보존과 생산법(Energy Conservation and Production Act)’에 근거해 시작. 초기 플라스틱 시트로 창문을 덮고, 틈을 메우고, 문풍지를 붙이는 간단한 작업으로 진행하다가 1980년대부터 단열, 창호 등 영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 적용. 내후화 사업 신청 요건은 생활보조금 지급 대상자이거나 부양아동가족부조 대상자, 60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아이가 있는 가정으로 가구당 지원액 감사 결과에 따라 최대 650달러 직접 지원.

을 보급하기 위해 자전거 발전기, 태양광 오븐, 주택에너지 효율화 건축 학교, 로켓매스히터 화목난로 제작, DIY 목공교육, 장애인 목공 진로교육, 청소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공헌, 노인돌봄을 위한 클라우드펀딩 등으로 사회적인 기여를 했다.⁹ 12년 동안 축적된 주택에너지 효율 사회적 기업의 경험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강원 태백시를 무대로 ‘주거재생’을 전문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최근 만 들어졌다. 건축 관련 시공업을 했던 청년들이 협동조합 ‘망치’를 설립하고 ‘단열’과 ‘주택’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혹독하게 추운 태백의 노후주택에서 생활하는 진폐환자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단열공사부터 시작한다.¹⁰ 나아가 일반 초보 인력을 전문 공정 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인력 양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녹색친구들은 사회주택 건설과 운영에 제로에너지주택 건축 등 그린뉴딜 요소를 적용하여 에너지 절감과 환경문제 해결, 주거복지를 연계한다. 최근 켄코에너지솔루션과 MOU를 맺고 제로에너지빌딩ZEB 사회주택 ‘녹색친구들 대조’를 만들어 사회주택과 제로에너지주택을 연결할 예정이다. 켄코에너지솔루션은 건축비 투자, ZEB 컨설팅과 인증 및 제로에너지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녹색친구들 사업 기획 및 건축시공, 임대 운영을 한다. 쿨루프 사회적협동조합은 도시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 녹색 지붕을 흰색 지붕으로 바꾸는 사업을 하는데, 옥탑방과 노후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구호활동’을 하고 있다.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면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린 리모델링은 단기간에 일자리를 늘리면서도 확장 가능

9 변재수 (2020.8.17). 「사회적경제 3법은 국책사업의 전달체계의 변화와 시민역량의 강화를 통한 시민 자산화, 지역자산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변재수 페이스북.

10 홍춘봉 (2020.7.28). 「태백 주거재생 전문 ‘협동조합 망치’ 눈길, ‘단열’ 키워드로 태백 도시재생 ‘활력소’ 기대」. <프레시안>

성이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이다. 국토부는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공공건물 1,000개 등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할 예정이다.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사회적기업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나아가 도시재생 지역 329곳(2019년 기준)과 도시재생 지원센터(415개), 지역 자활센터의 집수리 사업단과 집수리 자활기업, 도시재생 집수리사업단 등 이미 있는 기존 기업을 활용해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 내 자생력 있고 실력 있는 집수리 거버넌스가 구축되면, 그린뉴딜을 통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3) 자원순환 재사용 산업

코로나19로 택배 물동량이 전년 대비 20%가 늘었고, 배달 음식이 늘어나 포장 쓰레기도 증가했다. 플라스틱 소비량도 약 20%가 늘어나 환경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 재활용, 업사이클링을 넘어 생산-소비-관리-재생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줄여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재사용과 재활용을 동시에 늘려야 하는데, 중고품 매장을 재사용 복합쇼핑 문화공간으로 현대화하면서 수리와 수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트래쉬버스터즈’¹¹는 축제 기획자, 브랜드 디자이너, 업사이클링 전문가 등이 모여 설립한 소셜벤처 기업이다. 다중밀집 행사, 전시·축제, 상업 활동 등에서 일회용품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를 제공하고 수거 후 세척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적기업 ‘모어댄’은 가죽 시트, 에어백, 안전벨트 등 자동차에서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부산물을 이용해 가

11 트래쉬버스터즈 홈페이지 <http://trashbusters.kr/company>

방, 지갑 등을 만들고 있다. 1년에 100만 톤 이상의 가죽을 재활용하는 데 성공했다.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가 사용하면서 인지도가 상승해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모어덴은 서울 교외에 시민들이 제품 생산과정을 직접 보며 제작에도 참여해볼 수 있는 체험형 공장을 짓고 있는 중이다. 이밖에도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해 오래된 자전거를 수리해서 자전거 리어카로 재가공하는 사회적기업도 있다.

유럽의 그린딜 Green Deal은 ‘순환경제’를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수리받을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자원순환 재사용 분야는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 정책이 이 분야 사회적경제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호

2019년 출범한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은 강하천의 생태복원, 강 문화콘텐츠 발굴, 에코투어(생태관광)를 하고 있다. 샛강생태공원 위탁 운영(우리나라 최초의 생태공원)을 하고 있으며, 장항습지 110만 평을 관리하고, 여주 남한강 재자연화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강 가꾸기, 생물다양성 보호, 생태계 조사는 사회적경제의 확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한강’의 모델은 우리나라 모든 강으로 확산할 수 있다. 2017년부터 제주 동백동산을 지키면서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홍곶사회적협동조합’도 주민공동체가 생태관광을 통해 주민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과 점봉산곰배령 숲길, 제주 거문오름 세계자연유산 등지에서도 볼 수 있다.¹² 녹색일자리 창출에 기여하

¹² 서재철 (2019.10.2), 「[왜냐면] 케이블카 논란에서 생태관광 도입 논의로」, 〈한겨레〉

는 도시숲 정책도 있다.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의 공원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¹³ 각 지자체는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도시숲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 기후 재난에 공동체 회복력 갖추기

기후 재난에 대비해 회복력을 갖춘 공동체를 만드는 일도 사회적경제가 역할을 할 수 있다. 라이프라인 코리아 김동훈 대표는 재난 대비 공동체의 대응력을 길러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¹⁴ 김 대표는 “고베대지진 당시 생존자를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 혼자서 살아났다는 답변이 68.4%, 친구와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았다는 답변이 28.6%”였고, “국가의 구조라는 답변은 1.7%에 그쳤다”고 말한다. 개인의 재난 대처와 공동체의 재난 대비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2019년 11월 11일, 15일 노들장애인야학에서 독립예술창작집단 ‘리

¹³ 이수현 (2020.8.5). 「서울시 그린뉴딜과 도시숲 정책의 과제」. 제2차 서울시 그린뉴딜 포럼 발제문.

¹⁴ 김동훈 대표는 기후재난 대비 지역사회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생존 빌딩]** 자원봉사 기관들이 속한 건물을 자립형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전환(모든 관공서, 대피소로 쓰이는 학교 등 재난 관련 공공시설 전체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커뮤니티 가든]** ‘비건’과 ‘건강한 먹거리’가 자원봉사의 주제로 채택되기도 하고, 자원봉사가 옥상정원, 수직정원, 도시농업 등의 주체가 되도록 함. **[재난 생활 기술]** ‘마을재난학교’를 열어 재난 대비 리사이클링/업사이클링 방식의 최소 지식과 스킬들을 공동체들이 축적하도록 지원. **[방재 일상화]** 플로깅, 방재캠핑, 방재운동회, 방재기프트 같은 문화 활동. **[공존 도시]** ‘재난 약자’들을 위해 도시의 주요 시설을 배리어 프리화하고, 픽토그램을 도입하고, 다언어 환경을 만들고, 동물 친화 인프라를 만드는 등 마을 디자인 정비. **[방재형 생활 SOC]** 방재 공원, 방재 놀이터, 방재 캠핑장, 방재 키즈카페 등의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한 일상공간의 방재화. **[새로운 공공]** 마을공동체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주민자치회, 사회복지 시설, 자원봉사 모임, 시민운동 단체 등 평시에는 재난과 관련이 없으나 재난 시에는 자연스럽게 공동체 위기 대응의 공공 역할을 하는 기관 연결과 교육. **[마을 코디네이터]** 기후변화와 재난 등의 공동체의 위기 상황을 대비하고 실제 대응하는 역할을 조직화 할 수 있는 리더급 자원활동가들을 육성하고 전국을 연결하는 활동.

슨투더시티'의 재난 대비 워크숍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가 열렸다. 재난 시 대피 요령에 대해서 시연을 곁들여 교육을 하고, 실제로 노들장에 인야학 교사와 학생들이 직접 재난 시 대피하는 연습도 했다. 이처럼 공동체가 기후위기 재난에 대응하는 지역의 회복력을 높이는 일, 매뉴얼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일이 점점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¹⁵ 대구시에서는 2020년 폭염에 대비해 4,800여 명의 재난도우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단기간에 추진해 여러 혼선이 발생했지만 이 또한 잘 설계한다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6) 그린뉴딜과 연계 가능성 높은 사회적경제 분야

온실가스 감축의 주된 영역이 에너지, 건물, 교통, 폐기물이라고 할 때 교통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찾기가 쉽지 않다. 택시협동조합이나 농촌마을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 등 사례에 대한 시도도 계속된다. 2016년 스페인의 카탈루냐에서는 친환경에너지 협동조합 ‘숨 모빌리타트 Som Mobilitat’가 출범하기도 했다.¹⁶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전기차량을 공유하는 카셰어링 서비스로 카탈루냐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는 약 1,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1인 모빌리티나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운영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 외에도 의료나 돌봄, 먹거리, 공유자원 관리,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그린뉴딜과 연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설계해

¹⁵ 허현덕 (2019.11.22). 「재난이 오면 장애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마이너〉

¹⁶ 2010년 스페인 Girona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이 만든 친환경에너지 소비자협동조합으로 2019년 기준 5만 4,0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친환경 프로젝트에 1,300만 유로 규모의 누적 투자를 이뤄냈다. 출처 : 정종덕 (2020.7.9). 「[사회적금융의 상상②] 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 ‘숨 모빌리티(Som Mobilitat)’와 참여형 금융」. 〈라이프인〉

〈표1〉 그린뉴딜 관련 사회적기업

부문	기업	사업 내용
에너지 전환	안산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24개의 발전소에서 연간 3299MW의 전기를 생산.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 전기를 판매하는 수익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 시공, 전기공사, 유지보수업으로 사업을 확장.
	성대골에너지 협동조합	마을닷살림협동조합, 국사봉중 생태에너지전환 사회적협동조합, 성대골에너지협동조합 등 3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운영. 태양광발전 이외에도 수요자원 관리 사업, 에너지 저장장치를 결합한 전력중개사업 참여.
집수리 단열 개선	사회적기업 노나메기	‘단열과 기밀’을 강조해 주택에 에너지를 결합해왔고, ‘주택에너지진단사 제도화’에 기여. 적정생활기술훈련을 보급하기 위해 자전거 발전기, 태양광 오븐, 주택에너지 효율화 건축학교, 로켓메시터 화목난로 제작, DIY목공교육, 장애인 목공 진로교육, 청소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공헌, 노인돌봄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주)녹색친구들	사회주택 건설과 운영에 제로에너지주택 건축 등 그린뉴딜 요소를 적용하여 에너지 절감과 환경문제 해결, 주거복지를 연계. 캠프에너지솔루션과 MOU를 맺고 제로에너지빌딩(ZEB) 사회주택 ‘녹색친구들 대조’를 만들어 사회주택과 제로에너지 주택을 연결하는 작업 시도.
재활용	트래쉬 버스터즈	축제 기획자, 브랜드 디자이너, 업사이클링 전문가 등이 모여 설립한 소셜벤처.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시스템과 순환 체계 추구. 다중 밀집 행사, 전시·축제, 상업 활동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를 제공하고 수거 후 세척하는 서비스.
생태보존 생태관광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강하천의 생태복원, 강 문화 콘텐츠 발굴, 에코투어(생태관광). 샛강생태공원 위탁 운영(우리나리 최초의 생태공원), 장항습지 110만 평 관리, 여주 남한강 재자연화. 시민 참여로 강을 가꾸는 모델로 한강에서 시작해 모든 강으로 확산.
재난 대비 기후 적응	라이프라인 코리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응하는 교육, 훈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

볼 수 있을 것이다. 제로에너지 키친, 기후위기를 막는 비건 식생활에 대한 교육과 확산, 건물 텃밭에서 식재료를 재배해 요리하는 채식 레스토랑도 가능하고, 교육과 문화예술, 저탄소 투어와 탐방 등을 연결해서 상상력을 펼치면 재미있는 시도가 가능하다.

‘사회적경제와 그린뉴딜’ 연결하기

코로나 19가 한국 사회적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은 실업 극복, 공공 일자리 창출에 치중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¹⁷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사회적경제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그린뉴딜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적응과 감축 정책으로 사업 분야의 지평을 넓히고, 제품 생산과 공급, 맞춤형 매뉴얼 개발, 교육과 인식 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위기의 시대에서는 ‘정부나, 시장이나’ 양자택일이 아니라 정부가 공적인 역할을 주도하고, 민간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경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¹⁸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이 연구와 토론을 통해 그린뉴딜에서 사회적경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제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50년 넷제로^{Net Zero} 사회에 대한 압박이 커질수록 ‘지역’, ‘가치 지향’, ‘꼭 필요한 곳에 자원 투입’을 하는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은 부각될 수밖에 없다.

둘째, 정부가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 공공이

¹⁷ 변재수, 앞의 글.

¹⁸ 박유진 (2020.6.29), 「민형배 의원 “성대골 같은 지역 자발적 사회적경제 사례 지원법 필요”」, 〈이로 운넷〉

해야 할 일을 저임금으로 사회적경제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린뉴딜 영역에서 에너지전환 분야는 산업부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중요하고, 폐기물이나 재활용 분야는 환경부의 정책이 중요하다.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폐기물 규제 정책에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수록 사회적경제에 좋은 여건이 만들어진다.

셋째, ‘사회적경제로 그린뉴딜 하기’에 청년이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선라이즈운동(Sunrise Movement)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우리는 지구를 파괴하지 않는 일자리를 원한다”고 외치며 ‘그린뉴딜’을 미국 대선 의제로 만들었다. 청년들이 참여하려면 사회적경제가 낮은 임금을 감수하고 일해야 하는 곳으로 자리 잡혀서는 안 된다.¹⁹ 사회적기업에서는 낮은 임금을 지불해도 일을 한다는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하고, 사회적경제의 임금수준과 복지를 확대해야 청년들도 진입할 수 있다. 정부가 공공조달이나 정책 지원의 양을 늘려야 한다.

넷째, 사회적경제가 온실가스 넷제로 사회의 대안이 되려면, 리빙랩²⁰과 같은 지역기반 실험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송위진 연구원은 “현재 정부 R&D 사업 총 예산의 6%(1조 1,754억 원) 수준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혁신 지향적 공공조달, 시민과 전문가가 결합한 리빙랩 사업,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²¹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전국 6개 지

19 김정란 (2019. 12. 12). 「취재수첩」 사회적경제 인재들, 의지로는 버틸 수 있을까. <라이프인>

20 리빙랩은 살아 있는(living) 실험실(lab)이라는 뜻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자가 시민들의 삶의 공간으로 들어가 사용자와 함께 현장 중심의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개발 방법론. ‘일상생활 실험실’, ‘우리 마을 실험실’이라고도 불린다.

21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https://www.socialchange.kr/)은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공공기관 연계’ 방식의 협업형 문제 해결을 추구한다. 2018년 8월 출범해 지난해 전국 6개 지역에서 기관 292개, 시민 2만 명이 참여했으며, 1,205개 과제를 발굴해 94개 의제를 실행했다. 강원 ‘청소년 생리대 문제 해결’, 광주 ‘빈집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대구 ‘교통약자 무장애 플랫폼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역에 있는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에서는 공통 의제로 기후위기, 교육 격차, 쓰레기 등을 주요 의제로 활동할 계획이다.

지자체, 토건 대신 사회적경제에 예산 투입

사회적경제가 그린뉴딜에서 역할을 하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와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가 먼저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중간지원 전달체계를 강화하며, 부처별 분산된 사업을 통합해 규모를 키우고, 민간위탁제도, 입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전국적으로 태양광시민발전 협동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이다. 땅값도 비싸고, 일조량도 타 지역에 비해 적지만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로 타 지역에 비해 불리한 여건을 보완했기 때문이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성장한 배경에도 안산시가 공공시설의 지붕을 적극 찾아 지원하고, 시민 펀드를 모집할 때도 안산시가 함께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신뢰감을 갖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코로나19로 무너지는 지역경제를 사회적경제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지자체도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태양광 탐사대, 기후에너지 활동가를 공공일자리로 채용했다. 그린뉴딜과 연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공일자리를 통해 성장한 시민이 지역 에너지센터나 지역의 에너지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 투입 방식과 대상을 전환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계획 중인 대규모 토건사업이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에도 유효한지를 검토하고, 좌초 인프라가 될 것으로 보이는 토건사업이라면 과

감히 접고 예산을 사회적경제와 인건비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도 지자체도 예산이 사용되는 목적과 방향을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역량 강화에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혜를 모으고, 전략을 짜야 할 때이다.

■ 참고 문헌

- 관계부처합동 (2020. 8. 13).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 김병권 (2020), 「그린뉴딜과 경제 전환 : 그린뉴딜 프로젝트에서 지역 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역할」, 『생협 평론』 2020 봄(38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김소영 (2019), 「에너지 커뮤니티 시각으로 본 그린뉴딜 지역화 방안 (상상하자! 전환센터 도전하자! 농협동에너지자립마을)」, KDI 그린뉴딜 세미나 토론문.
- 이유진 (2018), 「지방정부 기반 지역에너지 전환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녹색전환연구소.
- 이유진 (2019), 「그린뉴딜(Green New Deal) 시사점과 한국사회 적용 : 기후위기와 불평등, 일자리 대안으로서 그린뉴딜」, 국토연구원.
-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 2014),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 자본주의 대 기후』(*This Changes Everything : Capitalism vs. the Climate*), 이순희 옮김(2016), 열린책들.
- 사회적경제 미디어 라이프인 <http://www.lifein.news/>
- 사회적경제 미디어 이로운넷 <http://www.eroun.net/>

생협평론과
사회적경제의
길
찾기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서
정작 사회적경제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비대면 그 자체라기보다는,
비대면 사회에서 역설적으로
더욱 밀착되어야 할
지역 차원의 대면과 접촉의 영역일지
모른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고립되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비대면 사회와 사회적경제

디지털 뉴딜의 핵심 키워드가 된 ‘비대면’

2020년 예고도 없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확산은,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줄이는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하는 방안 외에 사실상 뚜렷한 방역 대책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른 시일 안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이 낮은 반면, 사람을 통한 전염 속도는

〈그림1〉 방역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과 내용

방역수칙 단계별 조치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집합·모임·행사	허용 (방역 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공공 다중시설	운영 허용 (필요시 일부중단·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다중시설	운영 허용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 (방역 수칙 준수)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 수칙 준수 강제화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 수칙 준수 강제화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등교 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공공 기관 및 기업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 (전 인원의 1/2)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관 기관 및 기업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 권고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자료 : 중앙재해대책본부

무서우리만큼 빠르면서도 치명률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0년 상반기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 모든 대륙을 남김없이 감염시킨 코로나19는 1,0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누적 확진자를 만들어냈고, 그 가운데 5%에 이르는 50만 명 이상이 사망에 이르렀다.¹

따라서 전염병의 확산 정도에 따라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외출 자제나 휴업과 휴교, 재택근무와 온라인 화상회의에서부터, 좀 더 완화된 일정 수준의 제한된 회합이나 출퇴근, 공공 공간의 개방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선택하는 것 외에 특별한 대안을 가지기 어려웠다. 더욱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당초 6개월 안에 완화된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계절과 지역을 넘어 장기화된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당분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위험을 생활 속에 안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현실적인 여건에서 나온 키워드가 바로 ‘비대면^{untact} 사회’였다.

비대면은 개인들의 생활 패턴과 스타일의 급작스런 변화를 가져온 것만이 아니다. 비대면이라는 낯선 상황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일상의 지속’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첨단 ICT 기술을 동원하는 등 다양한 대책들이 개인 차원에서, 또는 조직 차원에서 강조되기 시작했고, 그 연장선에서 국가 정책으로까지 ‘비대면’의 수준은 확장되었다. 이를테면,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14일, 5년간 160조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비중 있게 ‘비대면에서의 사회적 기능 지속’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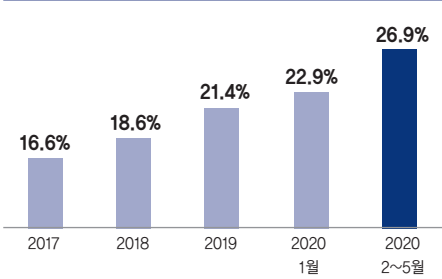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정부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면서 “비대면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1 세계보건기구 웹사이트 참조 :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situation-reports/>

〈그림2〉 비대면 확산을 예시하는 온라인 소비와 플랫폼 기업의 부상

온라인 소비 비중(소매 판매 대비)



미국 5대 플랫폼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



출처 : '한국판 뉴딜' 자료

가속화 및 그린 경제에 대한 인식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진단 아래, “‘일상과 방역의 공존’을 위한 온라인·비대면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² 정부는 이를 ‘비대면 산업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원격·온라인 교육의 강화,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지원, 그리고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등이 그 사례다.

이처럼 예고 없이 들이닥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파괴적인 전염 속도는 우리 사회의 일상과 대인관계, 집합적 행동 양상에 심각한 변화를 강요하고 있으며,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불가능할 정도로 임시방편적인 변화를 넘어 상시적인 패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비대면의 일상화’일 것이다. 심지어 정부는 ‘비대면 산업’을 새로운 전략적 과제로 내세우고, 한국판 뉴딜의 주요 영역에 배치할 정도가 되었다. 당연하게도 이는 일반적인 시장경제 분야는 물론이고, 사회적경제 영역에도 일정한 영

2 관계부처 합동 (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향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경제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 확실시된다. 이 글에서는 ‘비대면의 일상화’를 좀 더 다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비대면의 양면적 특징과 함께, 사회계층에 따라서 비대면이 어떻게 다른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비대면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상해볼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비대면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경제·사회생활을 수행하는 데 사회적경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비대면 사회의 양면성

코로나19 전염병이 만들어낸 ‘비대면 사회’는 새로운 일상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늘 그렇듯이 낮은 변화는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계층에게는 크게 불안하거나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있지만, 사회·경제적 약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흑인이 더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백인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비해 코로나19 감염률이 3배, 사망률이 6배나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왜 그럴까?

그 일차적인 이유는 “흑인이 기저질환이 많고, 돌봄이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직업적 특성, 정보 접근 제약, 주거 불평등 때문”이라는 것이다. 음식업과 서비스업, 호텔업, 택시나 운전기사 등 타인과의 접촉을 수반하는 직종에서 더 많이 일하고 있는 탓도 있다. 여기에 덧붙여 “주택의 상태가 비위생적이거나 주거 수준이 낮고, 오래된 건물에 거주하면서 천식 등 호흡기질환 발생이 많아 복합적 요인에 따른 위기가 가중되어 더욱 가혹한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박미선·조윤지, 2020).

예를 들어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이 요청될 경우 주거가 안정된 계층은 재택근무를 함에 따라 소득이 유지되면서도 더 안전한 워라벨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재택근무에 불리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거나, 업무 종사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계층들에게는 소득 감소가 불가피할 수 있고, 이것이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데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3〉 사회적 거리두기 가능 여부에 따른 주거 상황 양극화 경로



출처 : 박미선·조윤지, 2020.

심지어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은 정치·사회적으로 민주주의, 특히 주민 참여와 공론장 형성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는 공청회·설명회·토론회·세미나처럼 폐쇄된 공간에 다양한 유형의 이해당사자들을 모아놓고 도시 정책이나 개발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토론을 통해 중요한 의사를 결정토록 하는 전통적인 참여형 의사결정 방식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과 장비를 적극 활용해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사실을 전달하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하고, “발표자·토론자뿐만 아니라 고령의 일반 접속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이것이 단기간에 잘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이왕진, 2020).

이처럼 비대면 사회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생활을 더욱 악화시킬 여지도 있고, 다수 시민들의 목소리를 여론 공간에서 사라지게 만들 위험도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로의 갑작스런 전환 과정에서 약자들의 처지와 목소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나 비대면 비즈니스 지원 등에만 초점을 둘 경우, 그렇지 않아도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로 신음해온 우리 사회의 문제를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비대면 사회에서의 지역과 지역공동체

“코로나19 재난은 작은 정부의 대실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영국의 경제학자 마리아나 마추카토 ^{Mariana Mazzucato}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Project Syndicate}에 기고한 칼럼에서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재난 상황이라는 비상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시민들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자원의 배분은 시장 ^{market}이 아니라 국가가 능력 있게 해낼 수 있었고, 그래서 마스크 상품, 공공의료 자원, 심지어는 재난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된 소득분배 정책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상황을 이제 상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시장은 재난 상황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으로 인해 분배를 왜곡하거나, 지불 능력이 부족한 시민들의 생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에 대해 매우 무감각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재평가된 것은 국가나 지방정부만이 아니었다. “COVID-19 위기 속에서 우리가 새로 발견한 것은 집, 일상, 거리, 동네”라는 지적도 있다.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모종린 교수는 이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보다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원거리 이동과 대형 실내공간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우리의 생활권이 실질

적으로 동네로 좁혀졌고, 동네 가게, 거리, 상권이 우리의 관심사가 됐다. 실제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4월 전반적인 오프라인 소비는 줄었지만 집 주변에서 소비하는 홈 어라운드^{Home Around} 지출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한다. 여행을 떠나도 넓은 지역을 다니는 것보다 한곳에 머물며 그 동네의 문화를 현지인처럼 즐기는 여행자가 늘고 있다.”³

실제로 이와 같은 현상은 시민들이 현실에서 대단히 자주 경험한 것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강화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원격 접촉이 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걸어서 10분 거리의 생활권에서 소비 행위나 인간관계 등이 부쩍 늘어났던 것이다. 그 결과 주거 반경을 중심으로 한 마을과 동네 단위의 생활이 새삼스럽게 조명을 받게 되었다. 요약하면, 비대면 사회로의 급작스런 전환은 전통적인 시장경제 의존도를 과거보다 낮추는 대신에 국가나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기 시작했고, 아울러 매우 가까운 거리의 ‘로컬 생활권’에 대한 전례 없는 의존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원거리 비대면-로컬 대면 사회의 조합

비대면 사회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은, 비대면이 모든 대면의 무효화와 원격화, 온라인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람이 사람과 관계하고 집합적 공간에서 활동하는 방식과 성격에는 서로 다른 많은 차원들이 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거대 쇼핑몰이나 대형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에서 익명의 수많은 군중과 섞여서 움직이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3 모종린 (2020.5.28). 「국가만 재발견한 게 아니다, 우리는 동네도 재발견했다」. 〈여시재〉.
<https://www.yeosijae.org/research/974>

직장 사무실이나 일상에서 매일 가족처럼 접촉해온 익숙한 사람들과 규칙적으로 접촉한다. 또 다른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이나 식당처럼 일상적으로 찾는 공간이지만 그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익명이거나 무차별적일 수 있다. 또는 해외여행처럼 비일상적인 특별한 대면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비대면 사회는 이 모든 관계와 모임의 공간을 파괴하는 데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택트로 귀결되고 이것이 밀도를 줄이는 방향의 도시계획으로 향하는 것은 단편적이고 일면적 접근”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언택트의 필요성과 함께 콘택트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양자를 조화롭게 만드는 것, 즉 밀도를 지혜롭게 재설계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 밀도의 지혜로운 재설계란 “지하철역 등 과도한 고밀도는 낮추는 한편 공공인프라 등이 부족한 소외된 지역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밀도는 확보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주소윤, 2020).

또한 다른 차원에서 여전한 대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도 있다. 지금까지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의 기회는 상당수 대면의 힘에서 등장하고 있고, 따라서 “일시적으로 비대면이 부상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대면의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이며 이는 친밀 권역과 사회적 자본으로서 로컬 단위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줄 것”라고 보는 견해가 그것이다(이재경, 2020).

이런 견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논점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시작된 거리두기는 그동안 과도한 이동, 과도한 집중에 대한 전면적 성찰을 요구하게 된다. 그 결과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할 생활과 활동 영역은 어디인지, 또는 불필요한 대면 영역은 어디인지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과도한 물리적 집중과 인구 집약에 대한 거리두기의 일상화는 필요하며, 특히 원거리 반경의 불필요한 익명의 접촉

은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반대로, 생활권 반경의 마을과 동네는 신뢰를 기반으로 오히려 더욱더 많은 대면과 접촉을 통해서 줄어든 비대면을 보완하고 신뢰 관계와 상호 의존관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은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을 이루면서 우리 사회의 일상을 바꾸고 신종 전염병 위험으로부터 예방을 해 줄 것이다.

또한 “광역에서의 느린 접촉, 지역에서의 밀접한 접촉”이라는 비대면의 복합성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기존의 익숙한 대면과 접촉의 강제적 축소와 파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유지시킬 수 있게 할 동력으로서, 새로운 비대면 사회가 삶의 ‘회복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흔히들 재난 회복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재난에 대한 대응, 재난 발생의 억제와 복구 등과 관련된 개인, 조직, 지역사회 등의 능력 또는 잠재력”을 뜻한다(변성수·배민기, 2020). 그런

〈표1〉 재난 회복력의 네 가지 요소

	내구성	가외성	신속성	자원부존성
특징	충격 흡수, 완충장치, 분산, 모듈화	여력, 다양성, 적응적 의사결정 등	빠른 자원 동원, 이머징 이슈, 사회적 자본, 협업과 소통 등	자기조직화, 풍부한 대안, 임기응변, 창의·혁신성 등
정의	위해 요인의 충격과 혼란을 흡수하고 견뎌낼 수 있는 시스템의 내적 역량 (안전장치, 방화벽, 모듈화 등)	재난 발생 시 핵심 기능의 유지를 위해 그 핵심 기능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기능, 여력 혹은 백업 시스템 여부	위기나 충격 발생 시 기능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최악의 시스템 붕괴를 피하기 위해, 최단시간에 대응하는 역량	위기나 충격 발생 시 현상을 파악하고 자원과 원활한 정보 흐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대응 체계를 조직화하고, 새로운 대안을 창출하며 위기에 적응하는 역량

출처 : 이재경, 2020.

데 재난을 계기로 한 갑작스런 비대면 일상화는 자칫 시민들을 고립과 단절로 이끌 수 있으며, 이는 소득 단절을 포함한 물리적인 손실뿐 아니라 심리적 고립, 사회관계를 통한 삶의 회복으로부터의 단절로 귀결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재난으로부터 삶을 회복하는 데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러나 적절한 수준과 지역 단위에서 주민들 사이의 접촉 유지와 활발한 소통은 이러한 회복력 상실을 막아주고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대책과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대면 사회에서의 사회적경제

이처럼 코로나19 재난을 계기로 지역과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새삼스럽게 부상되는 가운데, 원거리 비대면이 지역과 이웃에서의 대면과 결합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 회복력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은 자동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지역에서 새로운 대면과 접촉을 매개해주고, 회복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플레이어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사실 도시를 중심으로 보면 우리 사회는 최근까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동네 단위에서 대다수가 거의 ‘개인’으로 고립되어왔고, 관계의 질과 양 모두 매우 빈약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주민들이 지역에서 새삼스럽게 관계와 대면을 찾아 나선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대목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서 가장 큰 도전은 건강과 돌봄 문제다. 각종 센서를 탑재한 원격진료 장치나 로봇 돌보미 등 최첨단 ICT를 동원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돌봄 행위는 기본적으로 비대면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게도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큰 위험지대는 중·대형 돌봄시설 등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와중에 아이돌봄이나 간병 등의 돌봄 인력을 온라인 원격 플랫폼으로 중개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급격히 부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숭한 플랫폼 기업들과 플랫폼 노동의 부정적 현실이 드러난 것처럼, 기존의 시설 중심 돌봄의 대안으로 오로지 온라인 돌봄 플랫폼 기업들만 부상된다면, 플랫폼 노동의 부정적인 측면이 비대면 사회에서 부각될 위험도 있다. 이를테면, 적지 않은 플랫폼 기업들은 중개에 연결된 돌봄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병가나 휴식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돌봄 노동을 위해 가정 등을 방문할 개연성을 낮게 된다.

따라서 시설 중심 돌봄에 대한 안전한 대안으로서 이번 기회에 정부가 초기적 수준에서 추진해온 ‘커뮤니티 케어’의 초기 구현을 위해 노력할 필요도 있다. 제대로 된 커뮤니티 케어를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의 행정과 보건소, 동네 병원은 물론이고 지역의 돌봄 사회적기업들과 지역공동체가 협력해서 주거 반경의 밀착 돌봄을 가능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지역 밀착형 사회적경제 주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다행스럽게 정부는 이번 한국판 뉴딜정책 안에 사회적경제가 적극 참여하는 돌봄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즉,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사회적협동조합에 맡기는 것, ‘그린 뉴딜’과 연계한 마을 단위 에너지협동조합 확대,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강 취약계층 돌봄 등 ‘디지털 뉴딜’ 사업 참여에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다.⁴

4 「사회적경제기업, 친환경·돌봄으로 확대… 일자리 늘린다」, 〈경향신문〉 2020.8.13.

원거리 비대면, 근거리 대면 사회로의 일상 변화에서 놓칠 수 없이 중요한 대목은 먹거리 이슈다. 코로나19는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은 물론 국가 수준의 공급망도 취약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마스크 구입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의 장기화나 또 다른 기후위기 재난 등의 상황이 발생해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기존 원거리 공급망이 붕괴되거나 작동에 차질이 발생했을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먹거리 등 생필품이다. 현재는 돌봄과 마찬가지로 ‘배달 플랫폼’이 급격히 부상해서 지역의 유통 과정을 온라인으로 매개해주고 있지만 이런 방식이 신뢰 있는 지역 생필품 공급 체계를 대신해주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로컬 차원에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시스템의 대안적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이미 우리 사회도 이 분야에서는 생협을 중심으로 친환경 먹거리 공급 체계를 상당히 구축해왔지만 아직은 제한적이다. 이번 기회에 더 많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지역 단위에서 먹거리를 포함한 생필품 생산과 유통 체계에 참여함으로써 재난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의 필요성 부상에 따라, 지역별로 소규모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시설 확대, 지역재생과 순환경제의 활성화, 자전거 수송 분담 비중의 확대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분야의 사회적경제도 아직은 극히 취약한 상황이라서 당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더라도 앞으로 사회적경제가 참여해야 할 사업 영역임에는 틀림없다. 이처럼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서 정작 사회적경제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비대면 그 자체라기보다는, 비대면 사회에서 역설적으로 더욱 밀착되어야 할 지역 차원의 대면과 접촉의 영역일지 모른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고립되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으로만 연결되어 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대면하고 접촉하고 소통해야 한다. 다만 그것이 불필요하게 낯선 접촉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마을의 낯익고 친밀

한 접촉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박미선·조윤지 (2020.5).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시 위기 시대, 1인가구 주거불안 양상과 주거정책 시사점」, 〈국토이슈리포트〉 제18호, 국토연구원.
- 변성수·배민기 (2020.5). 「코로나19 장기화 대비를 위한 충북의 대응 방안 모색」, 〈충북 FOCUS〉, 충북연구원.
- 이왕건 (2020.5). 「코로나19 시대 도시 사회·공간 변화와 정책과제」,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
- 이재경 (2020). 「코로나19와 지역의 대응」, 정의정책연구소.
- 주소윤 외 (2020.6).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각국의 정책 동향」, 『국토』 제464호, 국토연구원.

생협평론과
사회적경제의
길
찾기



김형미

상지대학교 평생교육융합대학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사회적경제 10년 후, 2030년 우리의 모습

사회적경제는 사람 중심의 조직으로서
그 어떤 조직보다도
자율경영과 팀기업가 역량이
탁월한 조직을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자율경영 역량을 지닌 사회적경제인들이
기술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꽃피우는
모습... 필자가 꿈꾸는
한국 사회적경제의 미래다.

2030년 사회적경제의 모습을 상상하며 이 글을 쓰는 2020년 여름, 우리는 반년을 넘어 코로나19 사태와 맞서고 있고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연달아 큰 재난을 겪고 있다. 기나긴 장마 끝자락의 극한 강수로 인해 순식간에 수십여 명이 사망하고 7,800명(8월 11일 현재)¹이 넘는 이재민이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다. 10년 후는 커녕 한 치 앞도 예상하기 어려운 시절이다.

생각해보면 10여 년 전 세계는 금융위기를 겪었다(2007~2008년).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침체라고 했다. 그보다 10년 전 한국은 IMF 외환위기를 겪었다(1997년). 그 대응 과정에서 한국 경제와 사회는 가혹한 구조조정을 겪었고, 경쟁 심화와 저출산의 양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해 가속도가 붙더니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

세계 금융위기로부터 약 10년 후 지구촌은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새로운 전염병은 치사율은 비교적 낮지만 몇 달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간 무서운 감염 속도와 변이성 때문에 모두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사회적 활동과 이동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2030년에 우리는, 10년 전에 '기후위기'가 본격화되었다고 회고할 것이다. 올여름에 겪은 동아시아 3국의 긴 장마와 극한 강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날씨'는 온난화로 인해 북극권 얼음이 녹아내리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보인다.²

호우 피해와 코로나19로 걱정이 앞서는 지금, 10년 앞인 2030년을 전망하려니 우울한 생각을 접기 어렵다. 우리 뇌가 부정적인 뉴스에 열 배나 민감하게 반응한다지만 세상이 좋아지는 소식보다 부정적인 소식을 더 많이 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도 언제나 사과나무를 심었고 오늘의 생활에 최선을 다해왔다. 삶과 죽음이

1 <12 MBC 뉴스> 2020.8.12. (<https://www.youtube.com/watch?v=ibPtU7gtd2I>)

2 「온난화 나비효과... 북극 얼음 녹자 한·중·일 '물폭탄' 맞았다」, <연합뉴스> 2020.8.4.

교차하다 보면, 산다는 것이 파국과 부활이 교차하는 아슬아슬한 경계선 안팎을 오가는 것임을 깨닫기도 하고, 오늘을 부지런히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삶의 축적이 역사임을 직관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10년 앞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사회적경제가 집중해야 할 실천이 무엇인지를 정리해보는 것이 목표이다. 비판도 낙관도 넘어서서 바뀌어나가고 새로 만들어야 할 미래를 생각하고, 그러한 미래의 모습을 역산해가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실천에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다.

2030년, 우리가 살게 될 세상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100년 후, 30년 후, 10년 후를 상상한다. 오늘의 선택이 미래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지 않을까? 그중 가장 가까운 미래로서 10년이란 세월은 현재진행 중인 변화를 근거로 미래를 보다 실감나게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일 것이다.

2030년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정보통신기술 및 의학의 발전에 따른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버트 브룩스는 소설 『2030년 그들의 전쟁』³에서 암과 알츠하이머가 정복되어 사람의 수명이 100살을 넘기게 된 2030년 미국 사회를 그렸다. 사회보장비 부담 때문에 퇴직 연령도 73세로 연장되고 의료비 증가로 재정과 세금 부담이 늘어난 미국 사회는 청년과 고령자 사이에서는 세금 부담을 둘러싼 갈등과 범죄가 정점

3 알버트 브룩스(Albert Brooks, 2011), 『2030년 그들의 전쟁』(2030 : The Real Story of What Happens to America), 김진영 옮김(2012), 북캐슬.

을 치닫는다. 홀로 사는 이들은 정교하게 제작된 인형을 데리고 살며 가짜 연애를 하고, 가짜 경험이 실재처럼 판치는 세상이다.

정보통신기술이 바꿀 세상의 모습은 일본 정부의 보고서 「미래를 여는 기술 전략」⁴에서도 엿볼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무렵에는 계속되는 기술혁신으로 취업 구조가 바뀌고 생산 인구는 더욱 줄어든다고 한다. 동시에 의료 기술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 세대가 증가하고, 65세 이상도 현역으로서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부여받을 것으로 예측한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할 2030년을 위해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과 평생교육, 겸업과 겸직을 확대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성소수자,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성이 높은 사회,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가 될 때 활력이 생길 것이라는 진단이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장애를 해결하는 기술과 다양성 존중 문화가 보급되어 장애인의 사회 참여는 더욱 진전될 것이고,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로봇의 보급으로 고용 구조가 바뀌어 정형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는 386만 명 감소하는 반면, 가치 창조 업무 종사자는 19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노동의 방식도, 교실의 모습도, 생활 모습도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원격근무나 겸업이 일반적인 노동형태가 되고, 벽면 디스플레이와 증강현실^{AR} 환경이 정비된 ‘파노라마 교실’에서 학생들은 바닷속이나 우주 공간, 인체 내부, 과거 시대를 체험하게 된다. 가정에는 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홈과 휴머노이드 가사 로봇이 보급된다. 청각·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을 문자화하거나 책을 점자로 출력하는 장치, 외국인과의 소통을 돕는 번역 도구가 보급되어 유니버설 커뮤니케이션이 실현된다. 의료기술은 가장 획기적으로 발전할 분

4 일본 총무성이 2018년 7월에 발표한 「미래를 여는 기술 전략」(未来をつかむTECH戦略) 보고서.

야로서 근육, 다리, 무릎 관절 등을 보조하는 기기가 발달하여 고령자의 육체 활동을 유지, 향상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로봇 팔이 장착된 휠체어, 하늘 길을 다니는 택시비행기, 우주에서 전력을 송전하는 시스템, 드론을 이용한 택배와 농장 등, 산업 기술도 크게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는 이상적인 미래를 상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공공 재정을 투입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낼 미래 기술개발의 청사진으로 제시한 것이다.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 모습을 위해 사람 만들기, 지역 만들기, 산업 만들기를 제시했는데, 이에 따른 키워드가 ‘포용’, ‘연결’, ‘전환’이란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개인들이 포용^{inclusive}을 통해 연령, 성별, 장애 유무, 국적, 소득 등과 상관없이 각자의 다양한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존중하는 사회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결^{connected}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집약하여 아담하게 배치하고 원격 이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구감소 시대에서도 서로 연결되는 커뮤니티 생활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 구조를 전환^{transform}하여 유연하고도 신속한 대응력을 지니고 기술과 소비자들의 변화에 적응하는 가치 창조형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비슷하면서도 사회문제에 주목하여 전망을 제시한 「2030년의 세계 : 눈여겨보아야 할 9가지 메가트렌드」⁵에서는 2030년을 바라보는 주요 열쇳말로 인구동태, 도시화, 투명성, 기후위기, 자원 압력, 환경보전 기술 clean tech, 기술 이동, 글로벌 정책, 포퓰리즘의 행방을 뽑았다. 이 글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지금보다 약 10억 명이 증가하고 평균수명도 늘어난다. 2015년 73억이었던 인구는 2030년에는 85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고,

5 Andrew S. Winston (2019.5.7). "The World in 2030 : Nine Megatrends to Watch", *MITSloan Management Review*.

그중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세대는 고령자들로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0억 명 이상이 될 것이다. 한편, 2030년까지 밀레니엄 세대와 Z 세대가 노동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구 동태는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이다. 2030년 도시화는 더욱 확대되어 인류의 2/3 이상은 도시에 살게 될 것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도시와 건물 효율화는 상당히 개선될 것이며 도시 인구의 먹거리 해결 방법으로 도시농업이 늘어난다. 디지털·센서 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것을 추적·관리하게 되고 이를 인공지능이 딥러닝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영향력이 매우 커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발전에 따른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은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섭씨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각국의 실적을 보면 현재로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3℃ 상승을 저지하는 정도일 뿐, 2030년에 이미 1.5℃ 상승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후위기의 영향은 심대하다. 해수면이 높아지고 수원이자 달라지며 빈번한 가뭄과 홍수가 곡창지대를 할퀴게 될 것이다. 주요 식량 생산지가 바뀌고 기후위기로 거주지를 잃은 기후난민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분쟁이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순환형 경제모델로 전환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에 수반한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편, 환경보전 기술이 발전하여 탄소제로 송전망과 철도, 도로, 건물은 확대될 것이다. 인공지능과 기계학습⁶을 기반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성^{hyper connectivity} 사회가 될 것이며, 교통과 건물·에너지 관리의 최적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⁷ 과학자

6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은 컴퓨터가 여러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들은 2035년 무렵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싱귤러리티^{Singularity}, 특이점^{특이점}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08년 OECD가 앞으로 20여 년 후를 내다본 「OECD 2030 환경전망 보고서」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에는 37%, 2050년에는 52%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구 평균온도가 2050년에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7~2.4℃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폭염, 가뭄, 폭풍, 홍수의 증가를 가져와 주요 인프라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동식물종의 멸종으로 생물다양성 손실이 지속되면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구 능력이 제한되고, 물 부족을 겪는 인구는 10억 명이 더 늘어난 39억 명에 달할 것이며, 대기오염이 심각해져 오존으로 인한 조기 사망이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⁸ 이 보고서에서 지목한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지속불가능한 수자원 관리, 오염 및 유해물질이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다.

우리가 원하는 2030년,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위에서 소개한 모습들이 기술변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로 인해 달라질 세계를 예측한 것이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지구촌과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질문하고 찾아야 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어떤 미래를 원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선택과 행동이 달라지고, 달라진 선택과 행동은

7 앞의 글.

8 OECD (2008), 「OECD 2030 환경전망 보고서」(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문), 4~5쪽.

〈표1〉 SDGs 다섯 가지 개념과 17개 목표⁹



9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웹사이트(<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ost2015/transformingourworld>)에 의거, 「디지털기술 발전이 초래하는 지속가능성장의 미래예측 연구」(임현 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 8쪽) 분류를 참조하여 작성했다.

미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 우리가 꿈꾸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비전이다. 인류는 20세기에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고 지구 생명을 전멸시킬 만한 살상무기의 개발 실상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실현하는 국제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지구 생태계를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은 2015년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채택으로 이어졌다. 국제사회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전환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비전과 행동 계획으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결의한 것이다.

이 의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Leave no one behind” 포용적인 발전을 슬로건으로 하고 지구촌의 시민과 기업, 국가가 실현해야 할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169개의 세부 목표 그리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23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17개 SDGs는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협력이라는 5개 행동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행동 영역에 해당되는 목표는 <표1>과 같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수립하는 데에는 개방적인 작업팀이 구성되었고, 여기에 유엔 회원국의 대표들뿐 아니라 국제협동조합연맹ICA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이 참여했다. 이런 참여형 작업 속에서, “We the People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유엔 회원국의 이 의제 결의가 정부 간 약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 의회, 국제기구들, 지자체, 선주민, 시민사회, 기업 및 민간 부문, 학술계, 과학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관여해야 할 여정임을 강조했다.¹⁰

필자는 이 의제를 읽으면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후 국제연합이 채택했던 ‘세계인권선언’ 만큼이나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높은 비

¹⁰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결의문 52번 단락.

전을 제시했구나 싶어 감동을 받았다. 필자가 해석하기에, 존엄성과 평등을 지키며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비전은 사람 중심의 휴머니즘에 기반한다는 인류의 윤리적 고백이다. 또한 번영의 원칙은 자연과의 조화에 있다는 비전은, 환경이 파괴되는 경제성장은 추구해서도 안 되고 성공할 수도 없다는 점을 단호하게 선언한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협력은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의 필요 충족”에 그 목적이 있음을 명시하여, 세계가 한쪽의 비인간적인 상황을 무시한 채 다른 한쪽에서는 부를 축적하는 불평등 사회를 해소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2018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를 발표했다. 아쉬운 점은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비전을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전환하는 작업이었다기보다는 국정계획 중 하나로서 목표 수립에 치중하여 다소 실무적인 작업처럼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사회적경제 부문에도 K-SDGs 수립 과정에 참여 요청이 있었으나 적극적인 참여에는 이르지 못했다. K-SDGs에서는 <표2>와 같이 2030년에 성취할 주요 지표를 설정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6년 기준 694MtCO₂,¹¹ 2030년 608~574MtCO₂(90.2~85.3%)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 한국 사회와 개인의 삶과 환경이 얼마나 좋아질 것인지를 그려내는 비전 만들기 과정이 드러나지 않아서 목표치만으로는 실감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지 못한 지표들도 많다.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서는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의 필요 충족”을 강조하고 있지만 K-SDGs의 첫 번째 목표 ‘빈곤 감소 및 사회안전

11 MtCO₂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tCO₂는 메탄, 아산화질소, 불소가스 등의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배출량 단위로 1MtCO₂는 100만톤CO₂. 따라서 674MtCO₂는 67,400만톤CO₂임.

〈표2〉 K-SDGs 주요 지표

분야	주요 지표	2017년 대비 2030년 목표값 설정
사회	· 상하위 계층 간 소득격차 비율 ·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 노인 빈곤율 ·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 업무상 사망사고 만인율 ·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36.8* → 31.0% 65.9 → 85.5% 46.5 → 31.0% 24.3 → 11.9% 0.52 → 0.22% 24.0 → 44.0% 5.9 → 4.6%
환경	·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율 · 갯벌 복원 면적 ·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 비율	74.3 → 90.0% 0.2 → 6.0km ² 4.9 → 10%
경제	·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 R&D 과제 사업화 성공률 ·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 · 친환경차 보급 대수	4.23** → 4.49 51.6 → 52.9% 75.8** → 95.4% 9.7 → 880만 대

* 2015년 대비, **2016년 대비

출처 :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보고서 2019」, 16쪽.

망 강화’에는 이에 필요한 여러 지표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사회보장 관련 목표치, 근로 빈곤층 대상 정부 재정사업 지출 규모와 같은 목표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국제사회에서는 2030년 지구촌의 비전으로 결의되었지만, 한국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 따라 수립한 K-SDGs는 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사회적경제에 제대로 침투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준다.

사회적경제가 원하는 10년 후, 그리고 문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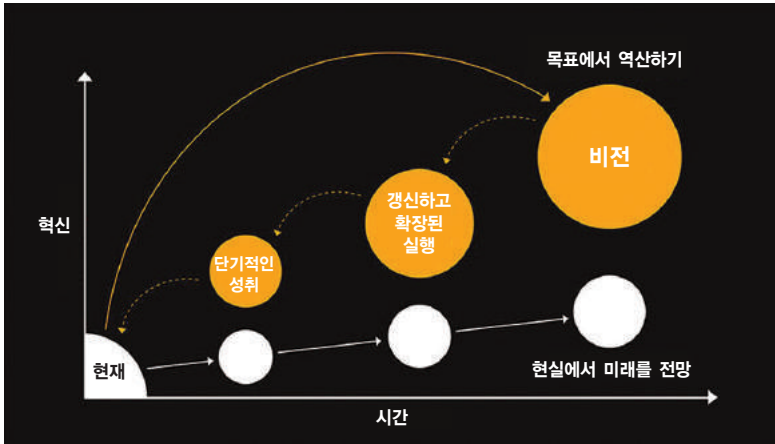
변화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는 현재의 연장선에서 더 나은 실천을 축적하더라도 문제해결에 이르지 못한다. K-SDGs가 “작업반 429명, 이해관계자 그룹 132명, 지역별 순회 토론회 1,000여 명, 상하반기 국민 대토론회 1,000여 명, 대국민 설문조사 2,000명이 참여하는 전국 프로젝트”로¹² 진행되었지만 대한민국에서 그 비전과 행동 계획에 공감의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배경에는 이런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10년 후 노인 빈곤율을 46.5%에서 31.0%까지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노인 10명 중 3명이 중위소득의 절반이 안 되는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면 이를 문제해결이라고 하긴 어렵다.

이럴 때는 실현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목표로 겨냥하고 moon shot, 그 목표에서 역산하면서 실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접근방식 backcasting이 유효하다.¹³ 그릴 때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혁신적 전환을 실현할 수 있다. 마치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계”를 겨냥한 것처럼,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그 결과가 100% 달성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전과 윤리적 고백을 공유하는 사회와, 이러한 비전도 세우지 못하는 사회나 조직 중 어느 쪽이 잠재력을 발휘하겠는가.

12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보고서 2019」, 15쪽.

13 문샷(moonshot)은 지구에서 달을 보기 위해 더 나은 성능의 망원경을 만드는 대신, 직접 달에 가기로 마음먹는 도전 정신, 또는 그러한 혁신적인 생각을 말한다. 백캐스팅(backcasting)은 목표로 하는 미래를 먼저 상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를 거꾸로 찾아가는 과정을 설정하는 접근 방식을 말한다.

〈그림1〉 문샷과 백캐스팅의 이미지



출처 : Chris Michaud (2020.3.24.), “Getting to the Future : Strategic Adaption and the Importance of Backcasting”, EPAM CONTINUUM 블로그 기사.

이처럼 한국 사회적경제의 10년 후는,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이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이 우선이고 가장 중요하다. 필자는 그 비전이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나 유럽연합^{EU}의 ‘유럽 그린딜’ 계획에서 제시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원대한 비전이길 바란다. 유럽 그린딜의 목표는 ‘2050년에 온실가스 순배출이 제로가 되고, 경제성장과 자원 사용량의 연관성이 분리되는 경제를 만들고, 어느 지역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행동 계획은 환경보전기술과 순환경제를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생명다양성을 복원하며 오염을 삭감하는 것이다.¹⁴ 자원 소비가 심한 전기·전자, 차량, 배터리, 포장재, 플라스틱, 섬유 산업에서 순환경제로의

¹⁴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유럽 그린딜(A European Green New Deal) 웹사이트 (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_en)

전환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폐기물 2차 자원화, 폐기물 수·출입 제한 강화가 이루어진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명확하고 섬세한 실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원대한 공통 비전을 세울 수 있을까. 2020년 우리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자활기업협회,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협동조합협의회 등 다종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별·업종별 협의회나 연합회와 같은 2차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당분간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연합회 전국시대’를 맞이할 것 같다. 다양한 연대·연합 조직의 자유로운 활동은 활력과 긴장, 협력과 경쟁의 상호작용으로 성장을 돕기도 하겠지만, 규모화를 저해하고 분열 통치에 이용당하기 쉬운 점도 내포하고 있다. 이들 사회적경제의 연합·연대 조직들이 법제도 개선, 자금 지원, 공동의 정치적 요구 등 현실적 수준의 공동 행동을 넘어서서 공통으로 추구할 비전을 문샷의 관점에서 세울 수 있다면 좋겠다. 마침 2020년 여름 한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라는 3대 축으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계획에서 28개 목표는 명시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나 비전은 제시하지 않았다.¹⁵ ‘한국판 뉴딜’의 내용을 더 진전시킬 비전과 행동 계획을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마련할 수 있을까. 그러한 결의를 할 수 있을까. 2030년 한국 사회에 어떠한 비전을 더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문제와 살바를 감아쥐고 씨름해야 할 것이다.

15 기획재정부의 ‘한국판 뉴딜’ 소개 웹사이트에는 3대 프로젝트와 28개 과제, 10대 대표 과제만 열거되어 있다. <http://www.moef.go.kr/mp/nd/newDeal.do>

미래를 위해 사회적경제가 추구해야 할 공통의 비전

필자는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공통으로 추구할 비전으로, 첫째는 SDGs 실현과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하는 사회적경제, 둘째는 공공서비스 회복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셋째는 사람 중심의 조직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의 잠재력을 최적화하여 기술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사회적경제를 상상해 본다.

첫째,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그 어떤 조직들보다 적극적으로 SDGs 실현과 기후위기에 대처하겠다는 각오를 표명하고, 모든 사업과 활동에 이를 반영하여 실행하길 바란다. 이는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에 해당하는 비전으로 정부, 비영리조직, 주민조직과 협력하여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해가자는 것이다. 한국 사회적경제의 긴급 행동 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성 회복이라는 전환의 흐름에서 유력한 대안이 되어야 한다. 이는 최근 세계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례로 입증되었다. 1980년대부터 확장되기 시작하여 약 한 세대 동안 세계를 석권하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시장에 맡겼던 민영화 정책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약해지더니 최근 몇 년 동안 ‘재공영화(re)municipalisations’되는 경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제적 시민단체인 초국적연구소TNI에서 2017년 발표한 「공공서비스 되찾기: 세계의 도시와 시민은 민영화를 어떻게 되돌리고 있는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835개 이상의 재공영화 사례가 있고, 여기에는 45개 국가 1,600개 이상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다. 공적 소유 모델뿐 아니라 시민과 노동자의 참여 수준도 다양한데, 일관된 것은 공공서비스를 되찾아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공공서비스를 만들면 이를 적정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용하는 재공영화란 용어는, 민영화된 서비스를 지역

수준에서 공공적 통제와 관리 하에 두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중앙 통제식이나 민간기업의 일시적 국가 소유를 의미하는 재국유화와는 다르다.¹⁶ 재공영화의 방법으로 협동조합은 유력한 대안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민주적 소유권과 이익의 사회화, 구성원의 경영 참여에 적합한 기업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 하와이주 최초로 전력의 생산과 송전, 배전 사업을 비영리로 하는 ‘카우아이공익사업협동조합(KIUC, Kauai Island Utility Cooperative)’을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¹⁷

2020년 5월 보고서의 제목을 「미래는 공공이다 : 공공서비스의 민주적 소유를 향하여」로 바꾼 개정판을 발표하면서, 2000~2019년 기간 재공영화 사례는 전 세계 1,408개가 조사되었고 여기에는 58개 국가 2,400개 도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¹⁸ 아래 〈그림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사 사례 중 민영화했던 공공서비스를 재공영화한 사례가 924개, 지자체가 새롭게 공공서비스를 창조한 사례가 484개인데, 협동조합은 양쪽 모두에서 재공영화의 민간 협력 파트너로서 등장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공공서비스 분야를 협동조합이 수탁할 때 이를 지자체가 지원해주거나 공공기관과 협동조합이 공동소유를 통해 재공영화하는 사례들이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입증된 사례들을 참조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과소한 지방과 농촌의 공공서비스 확장, 커뮤니티 돌봄체계 구축, 주민 소유 재생에너지 기업, 사회주택, 사회적 농업 등이 더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커먼스의 확대로 해석해도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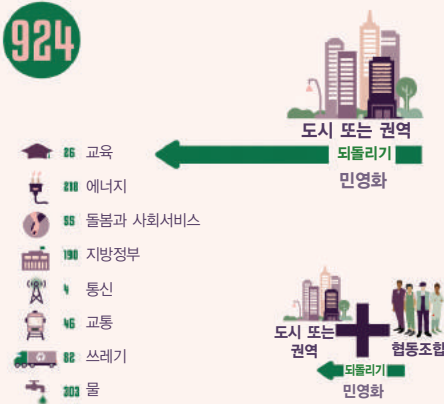
16 TNI(Transnational Institute) 보도자료 (2017.6.23). 「공공서비스 되찾기 : 세계의 도시와 시민은 민영화를 어떻게 되돌리고 있는가」. 한국어판은 요약본이며 전문 보고서는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https://www.tni.org/en/publication/reclaiming-public-services>

17 위 보도자료, 6쪽.

18 TRI (2020.6). The Future is Public : Towards Democratic Ownership of Public Services. Edited by Satoko Kishimoto, Lavinia Steinfort and Olivier Petitjean. tri.org/futureispublic. p.21.

공공서비스 되찾기와 창조 : 재공영화

재공영화



공영화



출처 : The Future is Public : Towards Democratic Ownership of Public Services, p.27.

셋째, 사회적경제는 뭐니 뭐니 해도 ‘사람 중심’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이때 사람 중심은 참여 주체의 확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구촌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직(커뮤니티)이 뒷받침하고, 또한 개인은 조직에 기여함으로써 생의 보람을 만끽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존엄성과 평등을 지키며 건강한 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그동안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은 1인 1표 의결권, 수평적 거버넌스, 이익 배분의 제한, 사회적 목적을 중시하고, 그러한 구조를 갖추는 차원에

19 위 보고서, 27쪽에서 인용.

머물러왔다. 하지만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조직 운영의 차원에서 행정 조직의 거대한 위계 구조를 따르거나 자영업 수준의 운영 역량에 머물러 신세대를 키우지 못하고 있고, 절차에 골몰한 나머지 목적이 실종되는 허망한 조직 운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사람보다 조직의 절차나 구조가 앞서게 되어 사람이 더욱 괴로워지는 현실을 고치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창립 1세대로 끝나기 쉽다.

“사람이 구조보다 앞선다”는 슬로건이 인상적인 네덜란드 가정방문 간호사들의 기업 뷔르츠조르흐²⁰는 본부의 지시대로 따르는 조직 운영에서 벗어나 팀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경영^{self-management}으로 조직 운영을 전환하여 10년 만에 큰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수평적 구조나, 수직적 구조냐는 이분법적 형식논리를 벗어나 사명 달성, 참여와 책임, 효율성이 실현되는 조직 운영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직접·간접·숙의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소시오크라시^{sociocracy}를 조직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정착한 사례들도 있으며, 영국 협동조합은 이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과 조직 운영의 기초로 학습한다.

사회적경제는 사람 중심의 조직으로서 그 어떤 조직보다도 자율경영과 팀기업가 역량이 탁월한 조직을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그 목표를 원대하게 세워 나가면서 사람이 소외되지 않는 자율경영의 사례들이 십 년 동안 풍부해지길 바란다. 자율경영과 팀기업가 역량이야말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로봇이 노동 현장과 조직 생활, 가정생활을 지배하는 가까운 미래 사회에서 더욱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기술(구감, 소통, 미래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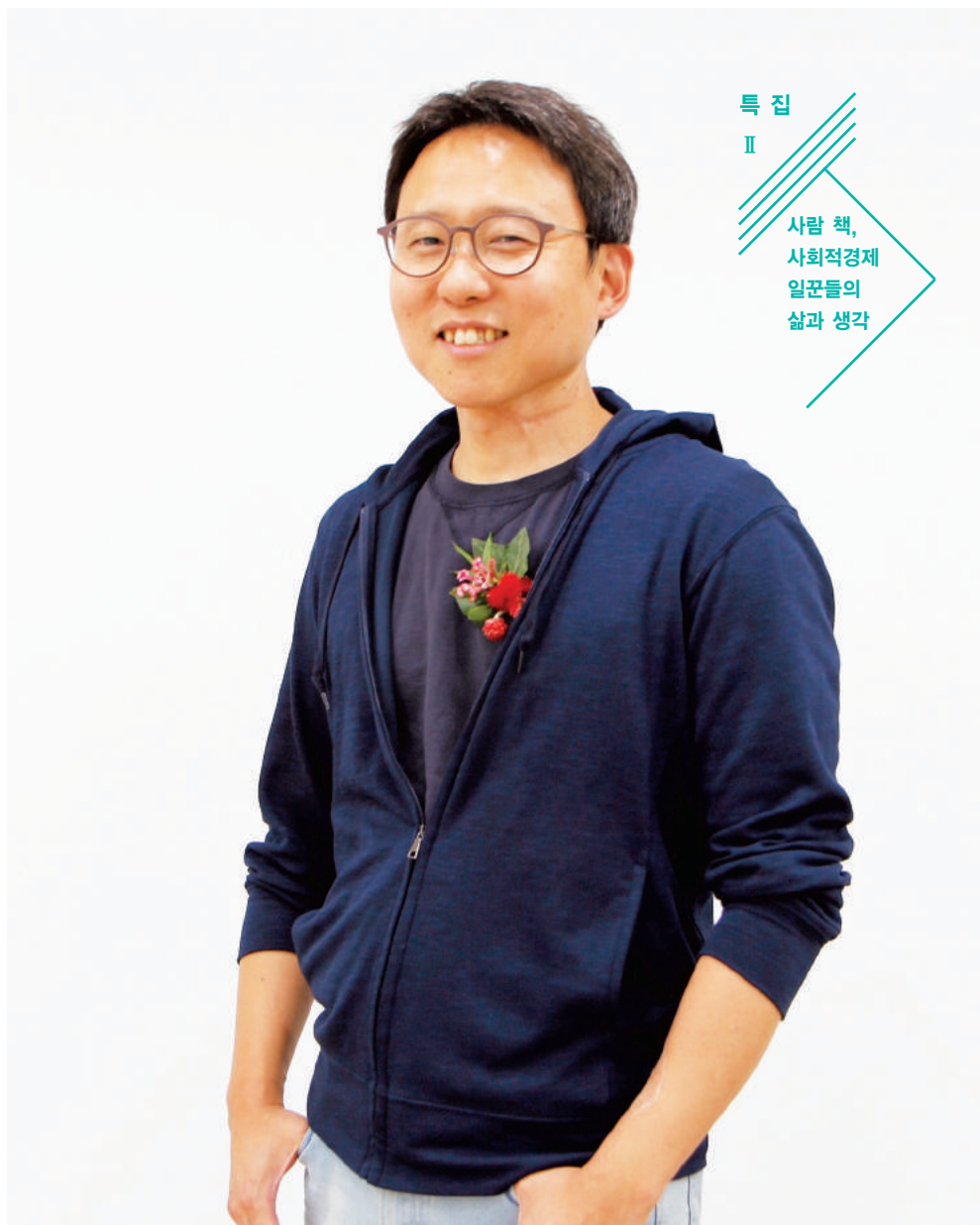
20 2007년 5명의 간호사가 창업한 뷔르츠조르흐(Buurtzorg)는 2017년 현재 1만 명의 간호사들이 850개 자율경영팀으로 운영되며 본부에는 45명이 현장 팀들을 지원하고 있다. 간접비 비중은 8%로 이는 네덜란드의 보건 계통 기업들의 평균 간접비 비중 25%에 비해 획기적으로 낮다. 그만큼, 이익을 간호사와 서비스 수혜자들에게 환원한다. 뷔르츠조르흐의 가정간호 모델과 자율경영팀 운영 사례는 고령화로 인한 보건 수요가 증대한 아시아를 포함하여 24개국에 전파되었다.

윤리의식)의 실체를 이룰 것이다. 이러한 자율경영 역량을 지닌 사회적경제
인들이 기술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꽃피
우는 모습... 필자가 꿈꾸는 한국 사회적경제의 미래다.

특 집

II

사람 책,
사회적경제
일꾼들의
삶과 생각



사회적 금융이 왜 활성화되지

못하나면요

(주)비플러스
박기범 대표

만나다

주 세 운
『생협평론』
편집위원

‘윤리적 소비’는 지난 20년간 생협운동이 크게 성장한 배경 중 하나다. 생협의 조합원은 단지 안전한 먹거리를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농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데 능동적으로 참여한 윤리적 소비자였다. 생협의 가치에 공감한 이들은 출자와 선수금 등을 통한 자본 공여는 물론, 조합원 활동을 통한 노동력 제공과 자발적인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협의 성장에 기여했다. 윤리적 소비자의 존재는 거대 유통자본과의 경쟁에서 생협이 압사당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버팀목이었다.

(주)비플러스는 이러한 윤리적 소비를 금융의 영역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임팩트 투자 플랫폼이다. 비플러스는 자본이 부족하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민-투자자들에게 연결해준다. 정책자금과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국내 사회적 금융의 현실에서 비플러스는 시민들이 소액의 자금으로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이다.

비플러스를 창업한 박기범 대표는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던 공인회계사였다. 그랬던 그가 서울시의 공공기금을 위탁 운영하던 (재)한국사회투자자를 거쳐 2016년 비플러스를 창업했다. 지난 10여 년간 영리 영역에서 사회적경제로, 정책자금 운용에서 시민자본 조성으로, 삶의 향로를 바꾼 온 박기범 대표를 『생협평론』 10주년을 맞아 인터뷰했다.

회계사에서 사회적 금융의 길로

“『생협평론』이 창간된 2010년, 저는 회계법인에서 4년차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즈음 제가 진행하던 프로젝트 중에 시중 은행의 국제회계

기준 도입을 지원하던 일이 기억에 남네요. 야근이 많았어요. 빨라도 저녁 9시였고, 최소 주 3일은 밤 11시, 12시 넘어서 퇴근할 정도로 일이 많았어요.”

그는 주로 금융기관을 자문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관련 자료를 접하다 보니 방글라데시 경제학자 유너스가 빈민구제 목적으로 1976년 설립한 그라민뱅크 Grameen Bank의 마이크로크레딧 Microcredit, 무담보신용대출운동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

“금융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방식이 금융의 미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당시에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운동 전반까지는 몰랐지만요.”

그리고 2011년, 나이 서른셋의 그는 생각지도 못한 큰 시련을 겪게 되었다. 설암이었다.

“결혼 2년차였고, 아이가 이제 막 100일이었어요. 설암은 전이가 빨라서 수술이 잘되어도 말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살려만 달라고 기도했어요.”

다행히 수술 경과가 좋았다. 1년간의 치료를 마치고 회계법인에 복직하려던 2012년 그는 인생의 경로를 바꾸는 선택을 한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했고, 다행히 회복되었잖아요. 두 번째 삶이 주어졌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부터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자 했죠. 처음엔 창업을 생각했어요. 조직 생활이 저와 안 맞았거든요. 조직 부적응자까지는 아니지만, 상명하복 문화가 싫었어요.

저는 상급자라도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들면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투덜이 스머프’ 캐릭터랄까(웃음). 그래서 휴직을 한 김에 아예 그만 두고 창업을 할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마땅한 아이템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다 당시 사회연대은행 이종수 이사장님의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사회적기업을 위한 금융을 함께할 동역자(同役者)를 찾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사회적 금융만을 위한 은행(사회적 은행)을 말씀하셨죠. 제 생각과도 비슷했고, 제가 가진 전문성과 경험을 살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바로 연락을 드렸죠.”

그가 사회연대은행에 합류한 2012년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이 출범 하던 때였다.

“마침 이종수 이사장님이 사회투자은행과 비슷한 맥락으로 별도의 재단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셨어요. 그게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였죠. 처음에는 재단 설립 실무를 돕고, 설립 이후에는 한동안 기획실에서 조직의 초기 세팅을 했었죠. 이후에는 기금심사팀으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사회적 금융을 하려고 이 일을 선택했던 거니까요.

그즈음에 서울시에서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했고, 한국사회투자가 첫 운용 기관으로 선정되었어요. 약 10년간 사회연대은행에서 해온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등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던 거죠.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국내에서 규모 있게 조성된 첫 사회적경제기금이었어요. 이후 퇴사할 때까지 약 250억 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회적경제 현장과 만나게 된다.

“문화충격이었어요. 회계법인에서 그동안 제가 상대했던 은행들은 재무제표 상의 기본 단위가 안 돼도 최소 100억, 1,000억이었는데, 여기서 만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들은 규모도 작고 재무제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기업들이 태반이었으니까요. 너무 영세하다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제 기준에만 맞추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요. 그동안 너무 갖춰진 기업들만 상대했던 거죠. 그래도 현재 쓰이는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의 초창기 버전 개발에 참여도 하고, 사회적 금융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던 시기였어요.”

저도 창업은 처음입니다만...

만 3년간 한국사회투자에서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에 참여했던 그는 2016년 퇴사를 하게 된다. 그가 마지막으로 관여한 업무는 모 저축은행을 사회적 은행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였다. 좋은 기회였지만, 중간에 투자 문제 등으로 무산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퇴사를 결심했다.

“저축은행 추진 건은 정말 아쉬웠어요. 사회적 은행을 시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봐요. (낮은 금리의 은행 예금을 통해서) 민간에서 직접 사회적 금융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 이후에도 내부적으로는 계속 사회적 은행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달랐어요.”

그는 작은 규모라도 민간에서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정치나 외부적 요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다. 정치적 캠페인을 통해 큰 규모의 국책은행을 추진하고자 했다.

두 번째 퇴사였다. 창업을 할 요량은 아니었다. 법조계에 공익변호사가 있듯이, 회계 전공을 살려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공익회계사가 되고자 했다. 관련 공부를 위해 대학원까지 지원한 상태였다.

“그런데 어느 날 그동안 업무상 알고 지내던 투자자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에게 사회적 은행 관련 아쉬움을 토로하는데, 그럼 내가 직접 해보는 게 어떠냐고 되물으시더군요. 갑자기 예전에 창업을 고민하던 시절이 떠올랐죠.”

마침 P2P(개인 간 거래) 금융이 핀테크^{FinTech} 모델로 주목받던 시점이었다. 온라인에서 투자자와 대출자를 직접 중개해주는 P2P 금융이 아주 초기 단계의 은행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P2P 방식이라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금융을 해볼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창업을 결심했다. 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이보연 이사를 창업 멤버로 끌어들이고, 소셜벤처 전문 엑셀레이팅 기관인 ‘소풍’에서 초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어느 창업가가 그렇듯이 저도 우리 서비스를 시작하기만 하면 대박이 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군요(웃음). 현재 회원 수는 3,000여명 정도예요. P2P 플랫폼치고는 적은 수치만 재투자율은 높아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었어’라며 사회적경제를 잘 모르던 시민들이 유입돼서 흥미를 느끼고 재투자를 하고 있어요. 물론 사회적 의미뿐만 아니라 투자수익률,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저희 방식에 만족하시는 게 아닐까 해요.”

말이 안 되는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

비플러스의 누적 대출액은 8월 기준 61억 원. 8조가 넘어가는 전체 P2P 시장에 비하면 미미한 수치다. 평균 투자수익률 15%를 내거는 경쟁사에 비해 비플러스의 평균 이자율은 4~8% 가량이다. 가뜩이나 부실 P2P 업체들로 촉발된 정부 규제 또한 강화되는 상황이다. 8월 시행되는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1인당 개인 투자 한도를 모든 P2P 업체 포함 5,0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사실 P2P 업계의 눈으로 보면 저희는 말이 안 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P2P 기관들과 지향하는 가치가 아주 다르니까요. 저희는 사회적 금융기관으로 분류해주길 바라지만, 어쨌든 P2P 업계에 속해 있으니깐 같은 규제를 받게 되죠. 그동안 업계의 투자자들이 고수의 상품을 하면서 저희 비플러스에도 일부 분산투자를 해주셨는데 총 투자 한도로 인해 큰 벽이 생긴 거죠.”

그는 투자 소득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부정적 인식도 어려움으로 꼽았다.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탐욕적 투자기관들의 이미지가 워낙 크고, 선한 투자의 모델이 부재했던 탓이다. 한국은 가계 자산 비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달한다.¹ 나머지 금융자산 중에서도 예금과 보험이 과반수를 넘는다. SRI 사회책임투자나 ESG 환경·사회·거버넌스 펀드, 임팩트 투자와 같은 윤리적 금융의 영역이 갈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그럼에도 박기범 대표가 지치지 않는 것은 그를 거쳐 간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주는 의미 덕분이다.

1 한국은행 · 통계청 (2020.7.21),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시흥에 있는 ‘빌드’라는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지역 내 부족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커뮤니티를 살리기 위해 레스토랑, 북카페, 실내놀이터 등의 주민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죠. 이곳에 투자하는 펀딩이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40% 이상 참여했어요. 금액으로 치면 수천만 원 단위의 작은 액수일지 모르지만, 저희 플랫폼만이 만들 수 있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직 부족해요. 더 많이 성장해야죠.”

‘선한 자본’의 순환을 꿈꾸다

비플러스 펀딩에 투자하는 개인의 상당수는 사회적경제가 낯선 시민들이다. 그는 사회적기업가를 지원하면서 투자자도 설득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그는 양쪽의 온도차를 피부로 느낀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고민도 한층 더 깊어졌다.

“사회적 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소위 말하는 ‘사회적경제가 영세하다’, ‘비즈니스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경제의 가장 부족한 점은 역설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아닐까 해요. 실제 사회문제에 집중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의 문제인데, 사실 애매한 기업들이 많아요. 지금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양적으로는 늘어나고 있지만, 약한 비즈니스 역량은 물론이고 사회적 가치도 잘 드러나지 않아요. 단지 인맥이나 경력에 의해, 과거 어디어디 출신이니까 사회적기업이다, 그렇게 해서는 시민들이 설득되지 않아요. 사회적경제의 기본은 결국 사회적 가치 창출이에요. 정말 사회적 가치에 충실하게 비즈니스 구조를 만든다면, 나머지는 금융에서 자금 흐름을 설계할 수 있어요. 그게 사회적 금융이나 임팩트 투자의 역

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다가 찾아오는 기업 중에 재무적으로 괜찮은 곳을 골라서 투자하는 방식 말고요. 사회적 금융의 ‘진정성’이란 이런 접근법이 아닐까 해요.”

그의 말이 결코 과장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와 함께 여러 번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해본 경험 때문이다. 대출받는 기업의 재무계획을 엑셀 파일로 직접 설계해주면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는 그의 상담은 금융기관의 것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컨설턴트나 멘토에 가까웠다.

그에게 사회적경제란 단지 사회적경제기업의 총합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의 확산이다. 가령 우리가 생수 한 병을 마셔도 더 재활용하기 쉬운 용기를 사용하는 것, 우리가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의 생활 전반에 환경이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이 녹아드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경제가 아닐까. 그는 그런 고민 속에서 비플러스의 펀딩을 기획하고, 새로운 기업과 프로젝트를 찾고 있었다.

지난 2018년 정부가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로 사회적 금융은 양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매년 수천억 원의 공공자금이 사회적경제 영역에 공급되고 있고, 한국형 사회적 금융 도매기금도 새로이 출범했다. 그런 수천 수백억의 자금 공급자 사이에서 비플러스는 작은 민간 사회적 금융기관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가 던지는 질문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다. 과연 윤리적 소비, 혹은 가치 소비라 불리는 운동이 금융에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그래서 사회적경제 안에서 우리 스스로 자본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지난 10년보다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일 것이다.



특 집
II

사람 책,
사회적경제
일꾼들의
삶과 생각

마음의 소리를 따라 걸어온

10년

HBM사회적협동조합
MTA코리아 이예나 팀코치

만나다

김 아 영

성공회대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2020년 8월 현재, 이예나 씨가 하는 일은 팀코치Teamcoach다. 팀코치는 팀이 함께 학습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으로서 질문을 던지거나 조언을 제공하기도 하고 경험을 전달하거나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 일을 HBM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다. HBM사회적협동조합은 2016년부터 스페인 몬드라곤대학교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몬드라곤 팀아카데미MTA, Monderagon Team Academy’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MTA는 핀란드의 혁신적인 창업 교육인 팀아카데미에 몬드라곤협동조합의 정신과 창업 경험을 더해서 개발된 ‘팀 기반 창업혁신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팀 기업가정신’과 ‘실전 기반 학습’을 강조한다.

이예나 팀코치는 대학생이나 성인들이 참여하는 팀 창업교육 프로그램에서 코칭을 하고 있으며, 9월에 시작되는 몬드라곤대학교 MTA의 학사 학위 프로그램인 ‘레인 서울LEINN SEOUL’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살짝 흥분된 기색으로 눈을 반짝이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명calling’이라는 단어가 생각났다. 예일대 경영대학원에서 조직행동을 강의하는 에이미 브제스니에프스키Amy Wrzesniewski 교수는 “자신의 일을 소명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고 있는 일을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부로 생각하며 일을 통해 세상을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¹고 설명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삶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운이라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전쟁과 폭력, 불평등과 차별 등 행복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을

1 Wrzesniewski, A., & Dutton, J. (2001). “Crafting a Job : Revisioning Employees as Active Crafters of Their Work”.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6(2). 179-201.

슬프게 만드는 것들을 매우 싫어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 귀를 기울이게 돼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을 돌아보면 결국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10년이 어땠는지 물었을 때 이예나 팀코치가 들려준 대답이었다. 그가 『생협평론』 창간 10주년을 맞아 같은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기획한 ‘사람 책’의 열람 대상이 된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2010년 12월에 발행된 창간호에서 당시 편집위원장이었던 염찬희 씨는 『생협평론』이 협동과 나눔 그리고 평화에 대해 iCOOP생협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세상에 던지겠다고 말하며, “함께 나누어 생각하자고, 그리하여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요청했다. 이예나 팀코치와 『생협평론』의 지난 10년은 ‘함께 잘 사는 세상’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었다.

사회적경제는 다 같이 사는 것

이예나 팀코치는 지난 10년 동안, 대학생일 때는 대학생협의 조합원 활동을 했고, 대학원에서는 협동조합을 공부했으며, 대학에서 직접 사회적경제를 가르쳤다. 그런 그에게 사회적경제는 어떤 의미일까? ‘사회적경제는 ○○○다’라고 할 때 ○○○ 안에 들어갈 말을 물었더니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한 후 이렇게 답했다.

“제가 팀코칭을 할 때 참여자들에게 ‘무엇은 ○○○다’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었는데 직접 그런 질문을 받으니 생각이 많아지네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웃음) ‘사회적경제는 다 같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뿐 아니라 자연까지도.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같이 살기’가 사회적경제 같아

요, 솔직히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이 사회적경제 활동이라고 해야 할지 고민되거든요. ‘팀기반 혁신 창업’을 코칭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 조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서요. 그렇지만 생각을 조금 더 넓혀보면 사회적경제와 같은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살기’라고 말하는 이예나 팀코치에게서 능동성이 느껴졌다.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말을 현실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점점 더 이예나 팀코치의 지나온 10년이 궁금해졌다.

사회적경제는 방식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이자 관점

이예나 팀코치와 사회적경제와의 만남은 어땠을까?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도, 내용도 다양할 텐데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만남을 이어왔는지 알고 싶었다. 그는 중학교 때부터 환경문제에서 시작해 사회문제들에 관심을 갖게 됐고,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다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기’는 사회적경제라는 말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일어났던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같이 살아야 한다고 믿는 이예나 팀코치에게 사회적경제는 어느 날 알게 된 지식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이자 관점이었다.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지난 10년으로 좁혀서 이예나 팀코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제 삶과 사회적경제와의 만남을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학부에서부터 대학원 생활까지, 두 번째는 대학원

마치고 경남과학기술대학에서 교원으로 일한 시기 그리고 세 번째가 MTA에서 일하고 있는 지금인데 이것은 현재진행형이죠. 제가 대학생협 학생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대학생협과 여성민우회생협(지금은 행복중심생협)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생협 매장에서 한 달 정도 인턴십을 했어요. 그때 ‘이거다’라는 마음의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환경, 농업, 민주주의, 여성 등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고 ‘윤리적 소비’라는 실천을 통해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보였거든요.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아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환경은 계속 나빠질 거고 사회문제는 커질 텐데 생협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 거죠.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중에 교수님을 통해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에 대해 알게 됐어요. 대학원에 대해 알아보다가 협동조합경영학과 교수님께 직접 연락을 드려서 상담도 하고 수업도 참관해보면서 대학원 진학으로 마음을 굳히고, 2012년에 성공회대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석사과정에 진학해 박사과정까지 마치게 됐어요.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것 중 하나가 공부하는 재미였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실천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협동조합, 특히 생협에 대해 애정이 생기면서 이런 걸 더 잘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찾는 공부를 했어요. 자연스럽게 마케팅을 전공하게 됐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되니 몰입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마음의 소리를 따라 물러서지 않았던 10년

이에나 팀코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가 교집합 같아서 마음이 끌린다고 했다. 변혁적이면서도 현실적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일상의 실

천으로 전체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더 잘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이에나 팀코치가 대학원에서 배우고 알게 된 것을 가지고 사회적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굳히게 된 것은 당연해 보였다.

“박사과정을 마치고 2017년부터 2년 반 동안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이하 사업단)에서 전담 교원으로 일했어요. ‘사회적경제 입문’, ‘사회 혁신과 협동조합’ 등의 교과목 강의도 했고 지역 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나 학생 연수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도 했어요. 전담 교원 생활을 통해서 제가 사람들과 같이 배우고 익히는 일을 즐겨워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 저는 다시 ‘이거다’라는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됐어요. 2017년 2월에 사업단 교수님의 제안으로 중국 상해에 있는 MTA 상해 랩lab에 교원 연수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도전을 발견하게 된 거죠. MTA에서는 ‘실전을 통해 배운다(Learning by Doing)’, ‘팀기업가정신(Teampreneurship)’, ‘국제적 학습 경험(Learning Journey)’을 강조하는데 학생들에게도 이런 프로그램을 소개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학생들을 위한 연수를 기획하고 진행했어요. 연수 전부터 언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참여를 망설였던 학생들이 삼사일 만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정말 많았어요. 우리의 교육이 무엇을 길러내고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무엇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됐죠.

그곳에서 학생들을 변화시킨 것은 팀코치들의 지지와 격려였어요. 팀코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사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2018년에 MTA 팀코치 양성과정을 수료하면서 이 일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에나 팀코치는 자신을 ‘마음의 소리가 들리면 물러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마음에서 ‘이거야’라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 모두 사회적경제와 연결되어 있었다고 한다.

하나의 과정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면서 이루어지는 성장

이에나 팀코치와 사회적경제와의 만남은 때로는 따듯했고 때로는 강렬했다. 그 속에서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기도 했을 것이다. 먼저 ‘성장’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저는 하나의 과정을 잘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그 일을 시작해서 잘 마무리할 때 제가 성장했다고 느끼게 돼요. 2012년에 대학원에 진학해서 2020년 2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했어요. 이 과정을 통해 ‘왜?’라는 호기심을 연구 질문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익히고 배웠죠. 연구하는 역량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꾸준히 활용하고 싶어요. 솔직히 연구도 계속할 생각은 있는데 지금은 하고 있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2017년부터 2년 반 동안 집중했던 전담 교원 생활도 잘 마무리했어요. 흔히 말하는 사회생활을 경험했고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도 했던 시간이었어요. 강의,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학생 연수 진행 등 다양한 일을 직접 해보면서 쌓은 경험이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2020년에 시작한 MTA 팀코치는 또 다른, 새로운 성장을 시작하는

단계예요. 현재 집중하고 있는 일 중 하나가 MTA 학사학위 프로그램인 ‘레인 서울LEINN SEOUL’인데 세상에 없던 대학 과정을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일이라서 긴장이 되지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게 돼요. 문득 ‘사회적경제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혼자 살아가지 않고 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방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변수를 사랑할 수 있게 상수가 되어주는 사람들

하나의 과정을 마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설레기도 하지만 힘든 일이기도 하다. 안정되고 익숙한 상황 대신 불안정하고 낯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예나 팀코치가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싶었다.

“우선은 호기심 때문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갖게 되는 ‘왜 그러지?’라는 궁금증과 그 답을 알고 싶은 마음이 저를 이끌어요.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 살고 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니 변수를 마다하지 않으며 삶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보다는 삶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늘고 민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모두가 같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질적으로 행복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것만이 아니니 같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생각해보니 제가 변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늘 상수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도 제게는 힘의 원천인 것 같아요. 저를 지지하고 믿어주는 남편과 가족들이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갈 수 있게 돕는 힘이죠.”

성장은 넘어지고 일어서는 일을 반복하면서 이어진다. 씩씩함이 잘 어울리는 이예나 팀코치도 그러했을 것이다.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넘어짐과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로 이어졌다.

“팀코치로 성장해가는 지금이 기쁘기도 하지만 어려운 시간이기도 해요. 제가 경험했던 대학원이나 사업단과는 결이 조금 다른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어서요. 마음의 소리를 들었고, 잘할 수 있는 일하면서 더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전했는데, 일을 하다보면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의심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팀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열린 태도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을 하다보면 제가 다른 동료들에 비해 경직되고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대화가 필요한 순간에 토론을 하려고 하거나 동료의 의견을 수용하는 대신 분석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죠. 열린 태도와 마음은 팀코치를 할 때 필요한 요소가 아니라 제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자 태도인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좌절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아프지만 그런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팀코치 동료들에게 그런 제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냈을 때 비로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었어요. 팀코치 동료들이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공감을 나누려고 노력한다고 느껴진 순간 ‘이들이

나를 믿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자신을 믿지 못해서 힘들었는데 다른 누군가가 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 제 안에서도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생기는 걸 느꼈죠. 동료들이 전해주고 싶어하는 인정과 믿음을 제가 받아들이니까 다시 새로운 힘이 생겼어요. 결국 이렇게 좌절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신뢰를 가지고 받아들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같아요.”

지나온 10년의 이야기는 다시 새로운 책으로 이어진다

이예나 팀코치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첫 장이 정말 재미있어서 마지막 장을 넘길 때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는 책을 읽는 것 같았다. 지난 10년이 이예나 팀코치의 1권이었다면 새로운 10년을 담을 2권은 또 어떤 이야기로 가득할지 기대가 됐다. 그래서 살짝 2권의 예고를 청해봤다.

“새로운 10년… 10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길게 느껴지네요. (웃음) 5년 후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5년 후에는 지금보다 원숙한 팀코치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팀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고 배우는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새로운 가족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나고 있어요. ‘내가 엄마가 된다면?’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5년 후에 엄마가 돼서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을 것 같아요.”

5년 후 이예나 팀코치가, 『생협평론』이, 사회적경제가 써내려간 이야기는 어떤 내용일까? 확산과 수렴을 반복하면서 어디로 향해가고 있을

지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어제의 내일이 오늘이고, 오늘은 다시 내일의 어제인 것처럼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도전은 계속 이어진다.

특 집
II

사람 책,
사회적경제
일꾼들의
삶과 생각



시련도 매력으로 받아들이는

청춘의 힘

(주)김태경우리밀베이커리
김태경 대표

만나다

박범용
SAPNet지원센터
경영지원팀장

밀 자급률이 1%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국산 밀로 만든 베이커리만을 고집하는 곳이 있다. 아이쿱생협의 자연드림 매장과 온라인 공급을 통해 지난해 87억 원의 매출을 올린 주식회사 쿵베이커리. 제조업 기반이 약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사업 성과를 이룬 (주)쿵베이커리는 올봄 주주총회에서 ‘김태경우리밀베이커리’로 회사명을 변경했다. 이로써 (주)농업회사법인김태경우리밀베이커리 김태경 대표는 베이커리 사업에 발을 들여놓은 지 15년 만에 자기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게 됐다. 이것이 『생협평론』 10주년을 기념하여 사회적경제의 숨은 주역으로 김태경 대표를 꼭 소개하고 싶은 이유였다. 15년간 아이쿱생협의 베이커리 사업을 성장시켜왔던 김태경 대표, 그녀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2006년 시작된 빵과의 인연

아이쿱생협의 베이커리 사업은 2006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산 매장 뒤쪽 20평 주방에서 냉동생지, 아이스바 등 다양한 물품을 직접 제조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이 베이커리 사업의 모태였다. 처음에는 1개 매장에서 시작하다가, ‘우리밀 소비도 늘리고 여러 매장에서 베이커리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우리밀로 만든 생지를 개발하게 됐고, 파주에 있는 공장 하나를 임대해 베이커리 공방을 시작한 것이다.

“겉도 없었어요. 베이커리가 일반 시중에서 간식으로 많이 먹고 선호하는 식품이라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다른 분이 베이커리 사업을 맡아서 했어요. 저는 물품 구매를 담당하고 있었죠. 근데 파주 공장 생기고 얼마 되지 않아 그분이 그만두게 되어서, 제가

대타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요?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저는 안 되겠는데요’라고 했지만, 1~2주 지나서 발령이 났어요. 그렇게 빵과의 인연이 시작된 거예요.”

과주 공장으로 출퇴근을 시작했을 때 베이커리 매장은 네 군데였다. 수기로 주문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 주문 시스템부터 만들었다고 한다. 처음 하는 일이라서 여러 가지로 미숙했고 첫 행정 점검이 나왔을 때는 밤을 새워 서류를 작성한 적도 있었다. 과주에서 시작된 공장은 안양으로 이전해 ‘(주)쿵베이커리’로 독립했다가, 2013년 구례자연드림파크에 입주했으며 2018년에는 2공장까지 만들게 됐다.

본사 직원에서 법인 대표로

김태경 대표가 처음부터 대표이사로 공장을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니었다. 2015년 이전에는 본사의 자공장 경영팀 또는 베이커리 물품관리팀 소속 직원으로 있으면서, 공장장들과 함께 자공장을 운영하고 베이커리 물품 전체를 관리했다. 김태경 대표가 관리하던 곳은 (주)쿵베이커리 과주 공장, 쿵도우(생지), 순천 우리밀 등 3개 공장과 베이커리 협력 산지들이었다.

그러던 2013년, 김태경 대표는 출산으로 육아휴직을 했다. 그러나 7개월 만에 다시 급하게 호출을 받았다. 구례자연드림파크로 이전한 베이커리 공장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전체적으로 물품 품질이 불안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2014년 5월 베이커리 공장으로 복귀하게 됐고, 2015년에는 대표가 되어 지금까지 베이커리 공장을 이끌고 있다.

“지금은 대표로서 넓고 크게 보려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 가면 문제점들이 눈에 잘 보이죠. 예전에는 그 자리에서 담당자를 불러서 바로 이야기했어요. 지적을 하면 바로 수정은 되죠. 그러나 모든 직원들 앞에서 질책을 듣게 되면 자존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팀장이나 반장이 중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고리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나와요. 그리고 나서 팀장한테 별도로 얘기해요. 팀장이나 반장을 통해 해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재발하지 않기 위해 같이 고민하게 되지요.”

임노동을 넘어 ‘오너파트너십’으로

김태경 대표가 생협 직원으로 출발해서 계열회사의 대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쿱생협의 ‘오너십(현재 오너파트너십)’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아이쿱생협은 오래전부터 ‘협동조합에서의 노동은 어떤 노동이어야 하는가’라는 고민 속에서, 임노동을 넘어 소유노동을 지향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왔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오너십이었다. 오너십은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사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며 함께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구례로 복직할 때 오너십 설명을 들었고 출자 권유를 받았어요. 조직은 너무 ‘쿨하게’ 이야기했고, 저는 너무 쿨하게 대출받아 출자금을 가져왔지요. 물론 마음이 동하지 않았으면 안 했겠죠. 남들은 자기 사업하면서 전 재산을 투자하기도 하는데, 나는 이 정도 금액으로 오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거면 그러겠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베이커리 공장을 ‘내 것처럼 잘 운영해보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시 구레자연드림파크에는 김태경 대표를 포함하여 5명의 오너십 참여자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기꺼이 출자하고 오너십에 참여했다. 오너십 제도는 현재 오너파트너십으로 확대됐다. 사업체에 투자하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경영자 하나로 국한하지 않고, 보다 많은 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오너파트너십에 참여하기 위해 직원들은 최소 금액을 출자해야 한다. 출자금이 없으면 회사가 대여해주는데, 이때 차입 이자는 직원의 몫이다. 회사가 적자일 경우 출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물론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이점도 있다. 김태경우리밀베이커리의 경우, 최근 개발실 3인을 포함하여 사무직 12명 중 7명이 오너파트너십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이들은 김태경우리밀베이커리를 ‘내 것처럼’ 생각하며 제2의 김태경으로 성장할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지?’ 계속된 호기심과 묘한 매력

문득 김태경 대표가 아이쿱생협에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 궁금했다. 유아교육과를 나온 김태경 대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일을 했었고, 아이쿱생협에 오기 전에는 2년간 서울 강남에 있는 외국인회사에서 일했다. 그러다가 잠시 쉬고 있을 때 친구의 권유로 우연찮게 아이쿱생협 면접을 보게 됐다. 그리고 휴일이었던 2000년 5월 1일 노동절에, 상담팀 직원으로 아이쿱생협에 출근을 시작했다.

“저는 원래 호기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일하다가 어린이집도 경험해보고 싶어서 어린이집에서도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시

스탬이 저와는 맞지 않았고 나와서 쉬다가 외국인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죠. 강남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월급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또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쉬고 있었는데, 친구가 생협이라는 곳에 면접을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 가봤죠. 처음에는 ‘참 이상한 회사네. 여기 회사 맞아?’ 하고 생각했어요. 꼬불꼬불 시골길 같은 데에 덩그러니 찌그러진 컨테이너가 있고 거기가 사무실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묘한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강남으로 회사 다니면서 잘 꾸미고 다녔는데, 여기는 청바지에 티 입고, 아무도 화장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에는 다 같이 모여 이야기하고, 이 문화가 너무 생소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지?’ 여름에 수박 실은 차가 오면 다 나가서 사람들이 한 명씩 줄을 서서 수박을 나르는데, ‘이건 또 뭐지?’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뭔데 이 월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 호기심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아이쿱생협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급여로 딱 6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한다.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을 받아왔던 김태경 대표에게는 ‘너무 박한 급여’였다. 그러나 생협의 생소함에 대한 그녀의 호기심은 아이쿱생협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 문제가 발생하면 클레임을 걸기보다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묻는 조합원들이 신기했다고 한다. 말단 직원들에게까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소통하려는 열린 문화가 생소했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는지가 궁금했던 그녀였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궁금하다.

“시련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

구례로 내려오기 전 군포에서 일할 때 김태경 대표에게도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었다. 베이커리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들도 같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주말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어떨 때는 날을 새기도 했다. 납품업체 사장단과 가격 협상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매너리즘에도 빠졌다. 그래서 상급자에게 ‘그만두고 싶으니, 후임자를 정해달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김태경 대표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제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당시 본부장님이 ‘조금 더 생각해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급한 일이 터진 거예요. 솔직히 (그만둘) 시기를 놓쳤어요. (웃음) 저는 ‘모든 직원이 시련 없이 오래 다닐 수 있을까’ 싶어요. 시련은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발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배들을 만나면, ‘시련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곤 해요. 시련을 넘지 못하고 그만두면, 그 선을 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김태경 대표에게 사회적경제는?

아이쿱생협에서 베이커리 사업은 중요한 전략사업이었다. 처음 매장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도 베이커리 매장을 먼저 열었고 초기 매장 운영에서 핵심 컨셉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베이커리는 많이 위축되었다는 게 김태경 대표의 평이다. 사실 적지 않은 조합원들이 장을 볼 때 고기, 과일, 채소는 자연드림 매장에서 사지만 빵은 ‘와○○○○’나 ‘뚜

○○○’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에 가서 사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조합원들이 베이커리도 자연드림 매장에서 함께 구매하게 만드는 것이 현재 김태경 대표의 과제다. 이를 위해 김태경 대표는 오늘도 좋은 제품 만들기에 승부를 걸고 있다.

김태경우리밀베이커리는 현재 2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1공장은 케이크 충전 등 수작업 라인이고, 2공장은 식빵 등 자동화 라인이다. 물품 가지 수만 150개가 넘는데, 밀가루 제분을 빼고는 우리밀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은 거의 다 만든다고 보면 된다. 지금까지는 ‘글루텐까지 100% 우리밀 제품’을 만들었다면, 최근에는 ‘글루텐 프리 치유식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태경 대표에게 사회적경제란 무엇일까? 잠시 고민하던 그녀의 답은 몽클했다. “제 청춘이죠!” 사회적경제에는 한 사람의 청춘을 온전히 바치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음에 틀림없다.

노동자협동조합의 노동관계와 노동법의 적용에 관한 검토

조 제 희

세이프넷지원센터
변호사

문제의 소재

우리나라의 현행 개별적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지위를 엄격히 구분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의 최저근로조건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실효성을 사법私法적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법정 조건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무효화하는 강행규정적 성격으로, 공법公法적 측면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근로감독과 형사처벌을 통하여 각각 담보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노동자협동조합¹(이하 ‘노협’)은 노동자들의 단체적 소유와 경영, 즉 노동자 스스로에 의한 자주, 자립, 자치를 대전제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를 위한 노무를 제공

하는 종속적 관계에서 노동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법의 전제와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협동조합기본법과 노동법에는 이러한 괴리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향후 노협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의 조합원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²

노협의 설립이나 정관의 작성은 이론상 이른바 합동행위(合同行爲)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임금과 노무 제공을 교환하는 쌍무적 계약 체결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노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행위는 근로계약 체결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법률행위라는 점, 노협의 운영과 임원 선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총회에서 모든 노동자 조합원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의 지위가 유동적이라는 점, 금전 출자를 행하고 출자의 범위에서 경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근로관계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즉, 협동조합의 출자자로서 조합원의 지위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임노동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는 점에서 노협의 조합원인 노동자의 특수성이 있는데, 노동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전이라도 조합원 노동자의 이중적 지위를 고려한 유연한 법 해석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노

1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노동자협동조합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임원의 직원 겸임이 허용되는 협동조합의 요건으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제1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령이 인식하는 노동자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검토 대상은 협동조합과 조합원 간에 고용계약 관계가 성립되는 노동자협동조합에 한정하며, 애초에 그러한 고용관계를 상정하지 않는 프리랜서 동업 관계적 성격의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2 해외의 입법 사례들을 보면, 노협과 조합원의 관계를 사용종속관계(근로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조합원 간의 대등한 결사로 보아 노동자 지위를 부정하는 입법례(스페인),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로 인식하면서 예외적으로 조합의 자주적 결정으로 노동법의 적용을 일부 제한할 가능성을 인정하는 입법례(이탈리아)도 있으나, 그 외에는 대체로 노동관계법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원을 일반적인 노동자로 인정한다.

협업의 노동관계에서 노동법과 협동조합법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슈와 보완책을 간략히 검토한다.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

가) 채용과 조합원 가입

협동조합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의 가입 신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관으로 설립 목적이나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문언상 ‘자격’에 대한 제한으로 해석되고, 자격을 갖춘 이상은 가입 거절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협동조합보다 높은 수준의 인적 결합을 요구하는³ 노협의 성격상 이러한 규정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노협의 가입에 대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에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일반 협동조합에 대해 준용하도록 하는 상법의 유한책임회사 같은 경우에 사원의 신규 가입을 정관 변경 절차(총사원의 동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⁴, 이를 참고하여 노협은 정관으로 신규 조합원의 가입을 승인하도록 하는 등의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3 고용관계는 본질상 강한 일신전속성과 상호 신뢰를 요구한다.

민법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 ①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②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규정	협동조합기본법 규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	제21조(가입) 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제명)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나) 징계, 해고 / 제재, 제명

협동조합기본법은 조합원 제명의 사유와 절차(총회의 특별의결정족수 결의, 소명 기회 부여)를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징계 및 해고할 때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고 해고예고, 서면통지 등의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

이때,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제명과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노협에서 조합원 제명의 결의는 곧 근로관계의 해지를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양자는 각각의 효과를 가지는 별개의 절차인가? 현행 법의 해석으로는 양자를 별개로 파악할 여지가 크다. 극단적으로 제명과 해고 처분을 받은 조합원 노동자가 쟁송을 통해 ‘제명은 유효하나 해고는 무효’라는 법적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조합에서 조합원 제명 절차 없이 해고 절차로만 나아간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의 유지 여부가

- 4 협동조합기본법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 상법 제287조의23(사원의 가입) 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원의 가입은 정관을 변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정관을 변경한 때에 해당 사원이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 또는 이행을 마친 때에 사원이 된다.

문제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원의 지위와 노동자의 지위가 분리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것이 노협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입법적으로는 협동조합기본법에서 노협에 한정하여 조합원 제명을 해고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노협 정관에는 제명의 사유로서 노동법적으로 통상 인정되는 해고의 사유들을 명시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나 서면통지 절차를 노협의 제명 절차에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노협 조합원의 제명 및 해고 사건을 담당할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노협의 조합원 제명 결의가 법령·정관상의 사유·절차를 준수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 조합원의 제명은 그 사유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명의 결의는 조합원 총회의 특별정족수를 요건으로 하는 점과 조합원 노동자의 특수한 법률관계, 정관 자치라는 협동조합의 대원칙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 금품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산해야 할 금품에는 탈퇴 조합원의 지분환급분 또는 잉여금배당도 포함되는가?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행사할 수 있다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와 잉여금 배당 역시 당해 연도 결산 후에만 가능하도록 한 협동조합기본법 제51조의 취지를 볼 때, 금

품청산의 범위에 지분 환급 및 잉여금 배당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조합원의 지위에서 가지는 청구권과 노동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청구권은 그 성질이 엄연히 다르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다만,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지분 환급분과 잉여금 배당을 금품청산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임금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가) 노협의 회비, 기타 적립금 등의 징수

노협에서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일정한 회비와 기타 명목의 적립금을 징수하거나, 특별 각출금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조합원의 개별적 동의가 없어도 허용되는가?

이 역시 협동조합의 지분권자임과 동시에 노동자라는 조합원 노동자의 2중적 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소견으로는 조합원이 정관 또는 총회 결의에 따라서 노협의 운영 등을 위한 회비와 기타 적립금을 납부하는 것은 노동자가 아닌 조합원의 지위에서 하는 행위이다. 이를 근로기준법 제22조 문언의 ‘저축’이나 ‘근로계약에 덧붙인 계약’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전액불 원칙은 그 예외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는데, 협동조합기본법에 각출금의 급여 공제를 허용하는 명시 규정은 없다.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노협의 정관이나 총회 결의를 ‘단체협약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명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관 및 총회의 노동법적 의의

가) 정관의 최고규범성과 취업규칙성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는데 노협의 경우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본질적으로 조합원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포함되므로 노협의 정관은 취업규칙의 성질을 함께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정관과 별개로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도 있으나, 그 제정과 변경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참여 절차⁵가 요구된다. 차라리 협동조합기본법에서 노협의 경우에는 정관을 취업규칙으로 간주하고 취업규칙의 법정 사항들을 정관에 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5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정관)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제28조(총회) ①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결의의 효력

대법원은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의 한계로 “이미 구체적

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영 위기 등의 상황에서 긴급한 경영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된 임금 일부를 반납하는 결의 또는 당월 급여의 일부를 수령하지 않기로 하는 노협 총회 결의의 효력은 결의 반대자에게 유효할 것인가? 또는 결의에 의해 해당 월의 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결의 효력은 (반대자는 논외로 하고) 찬성자에게 유효한가?

소견으로는 경영 자금 충당을 위한 조합원 특별기금 등의 납부를 결의하는 것과는 별개로,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임금청구권의 포기를 개별 동의 없이 총회에서 결의하더라도 찬성하지 않은 조합원 노동자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찬성한 조합원 노동자에게도 그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후자의 경우, 그 결의에 따른 임금 삭감 또는 반납이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더라도 경영상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절차를 준수한 총회 결의를 통해 임금을 삭감 또는 반납했다면, 적어도 결의에 찬성한 조합원과의 관계에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 중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여 사용자인 노협의 민사책임을 면제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그러한 결의에 이르게 된 사정과 결의 이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 근로자 대표 또는 노사협의회와 총회의 관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다수 있다. 노협에서도 이를 그대로 준수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노협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소견으로는 이를 노협에 곧이곧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관련법에서 예외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협은 그 자체로 조합원 노동자들 간의 협력관계에 기반한 단체로서 고정된 인적 사용자(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존재하지 않고 그러한 지위는 단순히 동등한 조합원 간의 단기적 역할 분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먼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노협의 이사회는 통상 기업의 이사회와 달리 조합원 노동자의 대표로 구성된 기구이므로 별도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노협에서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적으로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예외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노협 임원의 형사책임

노동관계법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용자를 처벌하는 벌칙 조항을 다수 구비하고 있는데, 노협 이사장 등 임원의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노협의 임원은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동시에, 조합원 노동자의 대표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또한 임원이라 하더라도 상임으로 사용자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노동자로서의 통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상임으로 사용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즉, 임원의 지위는 동등한 조합원 간의 역할 분담에 불과하다.

한편 노협 임원은 노협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하는 지위에 있고, 해당 결의에는 노동자 조합원이 직접(총회의 경우) 또는 그 대표인 임원을 통해 간접적으로(이사회의 경우) 참여하게 된다. 그러한 결의의 집행으로 인해 법 위반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일반 기업체와 동일하게 임원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소견으로는 노협의 임원이 조합의 결의, 특히 총회 결의를 집행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귀결된 것이라면 고의나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임원 개인의 형사책임을 적극적으로 면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생협 zoom in

김성광

작가, flysg2@gmail.com



코로나19 사태 뒤로 휴가 사전 계획 혹은 그 이후 추억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없다. 그 가운데 조용히 휴가 계획을 세워 울산 태화강으로 향한다. 차량과 사람 행렬로 가득찬 길바닥만 보고 다니던 나의 고개가 위로 향했고, 푸른 강물과 대나무 숲에서 하늘로 시선을 옮겨보니 그새 하늘이 높아져 있다. 사진은 태화강 남쪽에서 바라본 십리대밭.



기획

연재

생협 평론이

만난 사람

우미숙

『생협평론』 편집위원

정책 설계자에서 현장 운동가로

돌아온, 최
혁
진

“나의 미션은, 사회적경제와 자영업을 접목하는 경제모델 만들기”

10년 만에 ‘좋은 아버지’로 돌아왔다. ‘좋은 아버지’라는 말이 마음에 무척 끌린다는 그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딸과 아들의 아버지로 아이들 곁으로 돌아왔다. “몇 개월 아이들과 온전히 같이 지내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엄청 좋아합니다.” 청년 시절, 지학순 주교와 장일순 선생, 협동조합운동가였던 아버지가 자신에게 세상 보는 눈을 뜨게 해주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삶을 걸게 만든 스승이었다면, 이제는 아이들이 그의 든든한 기둥일지도 모른다.

올해 1월 21일, 그는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책무를 마치고 고향 원주로 돌아왔다. (2020년 9월 7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리이사로 임명되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 초기에 본부장으로 추천받아 원주를 떠난 지 10년 만이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캠프에 참여하기 전에는 아이쿱 최고전략책임자로 활동한 바 있다.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처음 설치한 부서로 그는 그해 7월 4일, 초대 비서관으로 청와대 생활을 시작했다.

사회적경제비서관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설치된 곳이라 정책의 기본 틀뿐 아니라 정책 전체를 설계해야 했고 기존 정책과 사회적경제가 충돌할 때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그동안 각 부처가 발표하고 추진한 사회적경제 정책 대부분이 그가 2년 7개월간 청와대에서 설계한 것으로, 아직 실행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서너 개를 제외하더라도 17개나 된다.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은 부처에서 다뤄보지 못한 영역이라 비서관실에서 거의 80%를 만듭니다. 2017년부터 설계하기 시작한 정책들은 거의 실행이 됐고,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하고 예산을 책정한 정책도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밥상에 올릴 재료와 반조리 상태 요리를 잘 만들어 놓았으니 밥상만 차리면 될 겁니다.”

밥상 차릴 재료들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찾지 못해 정작 밥을 못 먹는 일도 벌어지겠다 싶다. 유독 구석구석 먹을거리를 잘 찾아 배부르게 먹는 이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여야만 손이 가는 사람들은 마냥 그 자리에서 숟가락만 빨고 있을 수도 있다.

“안타깝죠. 잘 만든 정책이 막상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밥상의 기본 재료를 준비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밥상을 어떻게 차려 먹을지는 현장의 몫이지요.”

그는 마치 어려운 시험을 잘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수험생 같았다. 그에게 시험은 운동장 판을 다시 짜는 일이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수로 뛰던 시절, 선수만 타하는 현장이 답답했어요. 공동체적인 지향이나 사회적 속성을 가진 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실패할 때마다 선수 타만 했어요. 주변의 동료와 자신을 타하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는 일이 반복됐죠. 전국적으로 협력해서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에 힘을 모으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가치로 평가받는 시대

그가 청와대 비서관을 맡으면서 두 가지 미션을 정했다. 하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것으로, 사회적경제의 전반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또 하나의 미션은 공공기관과 정부, 지자체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바꾸는 일이었다. 그는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평가를 사회적 가치 평가 체계로 바꾸는 데 온 힘을 쏟았다. 평가의 기본 관점은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운영구조를 사회적 가치 관점으로 바꾸는 것으로, 균형 인사 원칙과 이사회의 투명성, 노동이사의 참여가 이에 포함된다. 또 하나는 고유 사업을 사회적 가치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발전사가 기존에 복지관에 몇 백만 원씩 나눠 주던 것을 이제는 종합복지관의 유휴 공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주고, 생산한 전기를 구매해 부대 수익을 얻게 하는 식이다. 연말에 라면 박스 들고 가 사진 찍는 식의 사회공헌 사업은 감점 대상이다. 재미 있는 것은 기관장을 신규 채용할 때 사회적 가치 경영전략을 반드시 제출 하게 하거나, 신입 공무원을 뽑을 때 면접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소양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가 공을 들인 게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을 바꾸는 일이었다.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회에서 더 좋은 기회를 얻으려면 돈과 자산,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소수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큰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공적 자산을 소시민의 경제적 기회로 전환하는 법제도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산촌마을 협동조합이 산림청이 가진 국유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버섯을 재배해 돈을 벌고, 숲 체험마을을 열고,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공공자산을 기반으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위한 많은 경제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도 환경을 만든 것이다. 그는 이런 조치들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밥 먹고 살 수 있을 때, 자존심을 지키면서 끝까지 싸울 수 있다”

그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회적경제 현장 원주로 돌아왔다. 그에게 원주는 어떤 의미일까. 태어나 자란 고향의 의미만이 아닐 것이다.

청소년 시절, 세상의 불공평과 삶의 격차를 해결하고자 일찍이 협동조합 운동을 해왔던 지역의 어르신들과 아버지의 삶을 보고 느껴온 곳이고, ‘나도 협동조합운동을 하면서 살아가리라’ 하고 막연히 장래 희망을 품게 했던 곳이다.

“성당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도 안 합니다. 가끔 혼자 생각하기를 하느님이 계신가, 부처님이 계신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나를 만든 것은 신앙이나 책이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이 어떤 고통에 빠져 있는지 보고 겪어온 수많은 경험이지요.”

그는 “집안이 일찍 몰락해서 장사를 해야 먹고사는 집안이어서 장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없다”고 오히려 그 환경을 고맙게 생각한다.

청소년 최혁진이 본 세상은 매사 고민거리였다. “아버지도 선한 사람이고, 어머니는 굉장히 성실하고 깨끗한 사람인데 우리가 왜 자초하지 않은 빈곤의 삶에 내몰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시혜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주역이 되는 운동’을 해온 지학순 주교와 장일순 선생이 좋았다. 두 스승은 ‘빈곤자의 자립’이라는 말을 강조했다. 이는 협동조합운동의 정신이었다.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자신의 필요를 말하고 해결해가는 것이었다.

그의 미래상은 고등학교 때 이미 정해진 듯하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는 교지에 “세상이 잘못된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잘못도, 내 잘못도, 내 주변 사람들의 잘못도 아니다.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는 바로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이과에서 문과로 옮겼다. 왜 문과로 옮기느냐는 선생님들의 질문에 “만주 땅을 되찾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선생님들의 눈에는 어린 학생의 호기로 보였겠지만 그동안 머리에 쫓겨있던 세상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풀어보고 싶었던 거다. 그는 대학 입학 전에 장일순 선생을 찾아갔다. 그때 선생은 “학교 가서 학교 공

부 하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공부나 하라”고 말해주었다고 한다. 이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교수들의 말은 듣지 말고,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잘 보라는 말씀이었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훈계 아닌 훈계를 해준 선생님이 좋았다.

일찌감치 삶의 가닥을 잡았던 그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야학 교사를 했고, 1학년 말에 대학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무국장으로 협동조합 활동을 시작한다. 그가 활동했던 서강대 대학생협은 전국에서 처음 생겨난 곳이다. 학생들이 출자해서 자동판매기와 매점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자원 봉사로 참여하는 등 대학교 내 협동조합 실험실이었다. 당시 전체 학생의 4분의 1이 조합원이었을 정도로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고, 협동조합 운영 원칙에 맞게 민주적 경영을 잘 해냈다. 비록 외압으로 3~4년 만에 문을 닫아야 했지만 그에게는 최초의 협동조합 실전 경험이었다.

대학을 마친 그는 다시 원주로 돌아왔다. ‘잘난 아들 서울 보내면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는 속설이 무색하게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서울이 한국 사회를 주도하겠지만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일찍이 그가 마음의 길잡이로 삼았던 호세 마리아 신부가 산골짜기 공업 도시 몬드라곤을 가장 행복한 곳으로 만들었듯이 두메산골 원주도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보여주고 싶다는 오기가 생겼다.

어린 시절부터 선배 어른들의 협동조합 활동과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봐왔으니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까. “제가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오히려 협동조합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됐지요.”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화된 힘’이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에게 ‘조직화된 힘’은 ‘경제적·사상적 결사’의 의미였다. “시장자본주의에서 밥줄에 매이면 정신적으로 버티기 힘들데, 내 조직에서 밥 먹고 살 수 있을 때 자존심을 지키면서 끝까지 싸울 수 있다는 거지요.” 그가 협동조합을 선택한 이유였다.

그에게 확고한 미래상이 있었지만 잠깐 다른 꿈을 꾸곤 적이 있다. 그는 사제가 되고 싶었다. 대학 졸업 후 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에서 잠깐 일을 할 때 품었던 꿈이다. 원주에 내려와 사북탄광에서 공부방 교사를 하다가 신부가 되려고 신학교를 선택했다. “왜 사람은 닥쳐봐야 깨닫는지 모르겠다”며 막상 사제의 길에 가까이 다가서니 “이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단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모든 걸 던지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사제를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신앙이 중요했지요.”

원주에서 본격적으로 협동조합운동을 시작한 것은 원주의료생협부터였다. 2002년 설립 초창기에 합류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어졌다. 원주 협동조합 활동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그 이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으로서 정책을 설계하는데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아이디어의 기초는 2010년에 쓴 그의 글¹에 잘 담겨 있다. 그동안 머리에 담아두었던 생각과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틈틈이 적은 메모를 에세이로 정리한 것이다. 그는 2010년에 쓴 글들이 이후 10년의 인생을 결정했다고 말한다.

그는 가끔 어떤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만일 지학순 주교님과 장일순 선생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자신에게 물어본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 전체의 변혁과 변화의 틀 안에서 사회적경제의 씨앗을 뿌려온 선배들은 지역 청년들이 사회변화와 생계를 동시에 해결하는 모델로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만들어가는 것에 미답지 못한 눈치를 주기도 했다. “어떨 때는 원주의 생명운동에서 내가 정말 속물이 된 건 아닌지, 경제주의적 편향에 빠진 건 아닌지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그는

1 2010년 『사회적기업연구』 제3권 1호에 발표한 「협동조합의 경험에 기초한 사회적기업의 성장전략과 민관협력 및 제도개선 방안」

“장일순 선생님이나 지학순 주교님이 이 시대에 살아계신다면 우리처럼 했을 것”이라고 믿으며 마음을 다진다고 한다.

“자유로운 개인만이 진정한 협동조합을 할 수 있다”

그는 협동조합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다. 최근 인터넷 사회적경제 미디어 ‘이로운넷’에 〈혁신이형의 슬기로운 협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협동조합 이야기를 쉬운 언어와 다양한 이야깃거리로 잔잔하게 풀어가고 있다.

그는 협동조합을 새로운 시각으로 봤으면 한다고 말한다. 대동단결을 강조한 연대 공동체의 협동조합이 과거의 역사라면 지금은 “자유로운 개인만이 진정한 협동조합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가 생각하는 협동의 시대는 독립된 개인이지만 어딘가에 연결돼 있고, 자신을 지지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사회다. “마치 동학정신을 연상케 합니다. 적과 싸울 때 하나로 뭉치고, 다시 흩어져 살아가는 것, 자유롭게 모였다 흩어졌다 할 수 있는 것이 새로운 협동의 문화라고 봅니다.” 자유로운 개인을 중시하는 청년들에게 ‘따로 또 같이’하는 협동의 문화가 필요하며, 협동운동이 이러한 젊은 세대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게 협동조합은 현실이다. 필요에 대한 대응이고, 경제적 단위이다. 그러하기에 협동조합을 만들 때 기업형 모델로 할 건지, 공동체형으로 할 건지 이정표를 잘 정하라고 당부한다. 목표가 애매모호할 때 조직의 생존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명확히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협동기업을 운영하거나, 사람들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문화적 필요를 해결하거나, 협동 운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길을 정하라는 말이다. “협동조합이 생존과 운명의 공동체가 되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정신 공동체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영업과 사회적경제의 만남, 불평등과 격차 문제 해소에 중요”

그가 원주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관여하는 일이 자영업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가 접목할 수 있는 경제모델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자영업의 경쟁력은 바닥입니다. 5인 규모로 만들어진 작은 협동조합들은 대체로 소상공인 협동조합이지요. 보통 창업 성공률이 2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협동조합 성공률과 비슷하지요.”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중에 비임금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가족노동이나 자영업자들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청와대 정책실에 자영업 비서관실이 만들어졌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활동 종사자 중에 자영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다는 증거다. 청와대 안에 자영업을 담당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그는 두 손 들고 환영했다.

자영업 소상공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 불만을 쏟아내거나, 자영업 정책을 만들어보았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비아냥대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한다. “창업하고 얼마 안 있어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남아 있는 자영업자들마저 줄여야 한다는 말은 무책임합니다. 자영업을 포기한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편입시킬 것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게 뻔합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기초수급자가 되면 복지기금을 늘릴 건가, 하고 되묻고 싶습니다.” 그는 자영업 소상공인의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우선 과제라고 보았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소상공인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의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나 성공률이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는 해결 방법으로 “일정하게 구매력을 갖추거나 유통 채널을 가진 연합 구조 안에 들어가는 것”을 제안한다. 검증된 프랜차이즈 형태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는 원주에 돌아와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아졌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마련한 정책들을 안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예상대로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의 내용을 잘 알지 못했고, 그동안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제 그에게 할 일이 생겼다. 자영업 소상공인의 한국적 모델을 찾는 것이고, 그 방향은 사회적경제와 접목하는 모델을 만드는 일이다. “사회적인 가치와 민주적인 조직 운영체계, 독창적인 비즈니스모델을 결합한 새로운 경영시스템”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원주에 내려올 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아오면서 지켜왔던 땅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호기를 부렸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그는 다시 원주에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어한다. 이전 선배들과 또 다른 모습으로.

자본세 600년, 멈추지 않으면 멸망한다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 :

자본주의에 숨겨진 위험한 역사, 자본세 600년』

라즈 파텔·제이슨 W. 무어 지음,

백우진·이경숙 옮김, 홍기빈 해제, 북돋움, 2020

이차경

(사)소비자의 정원 팀장



인류의 역사 500만 년을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자본주의가 출현한 시간은

23:59:56이다.

——〈EBS 다큐프라임—자본주의〉

70억 인구의 생존이 일시에 위협받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동아프리카는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고 있으며 (100년 만의 이번), 중동은 섭씨 50도를 넘어 필 필 끓고 있다. 또한 시베리아 이상고온현상과 이로 인한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의 기록적인 폭우 등은 현대의 첨단 과학으로도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기후변화가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이며, 자본세¹에서 살아가는 현 인류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상 징

후들이다. “인류 역사상 대변이는 ‘평소처럼’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말을 흘려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이다.

24시간으로 환산된 인류 역사에서 고작 4초의 시간에 불과한 자본주의 역사는 그 이전까지 인간과 자연이 맺어왔던 관계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며 시작된 것이다. 이 찰나의 시간은 자연을 사회로부터 분리하고 야만을 문명으로부터 떼어놓음으로써 ‘저렴한 것들’이 발명되는 시간이었으며, 자연을 정복하고 약탈하는 것이 상식적인 삶의 방식으로 여겨진 시간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의 본질은 끊임없이 잉여가치를 생산해내는 것이다. 사전적으로 ‘잉여’는 ‘쓰고 난 나머지’를 뜻하는 말이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잉여’를 위해 한정된 자원을 무분별하게 활용한다.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과 사람 그리고 제도를 통제한다. 그 방식은 6세기 동안 진화를 거듭해왔으며 자본 확장에 장애가 되는 구질서들은 거침없이 변형되고 제거된다. 1999년 WTO 회의를 반대하고 반세계화운동을 조직했던 활동가 라즈 파텔(Raj Patel, 영국과 사회학과 교수인 제이슨 무어 Jason W. Moore, 미국)가 함께 쓴 이 책(*A History of the World in Seven Cheap Things: A Guide to Capitalism, Nature, and the Future of the Planet*, 2017)은 기후 비상사태와 극단적 불평등 등 현재의 위기는 모든 것을 싸구려로 만들며 발전해온 자본주의가 지난 600년 동안 감춰온 비용이 청구되어 날아온 결과라 지적한다.

학교에서 신대륙을 발견한 영웅으로 배웠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저렴한 것들의 거의 모든 전략을 초기에 실행한 사람으로 이 책의 모든 장에

1 지질학에서는 기후적으로 운이 좋아 인류의 문명이 발생한 시기를 ‘홀로세’라 부르고 홀로세 중에서 해수면이 차오르고 기후가 불안정해지는 등 기후변화가 일어난 시기를 ‘인류세(Anthropocene)’라 부른다. 저자는 1400년 이후의 시기를 ‘인류세’가 아니라 ‘자본세(Capitalocene)’로 명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자본주의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자본주의를 경제 시스템이 아닌 인간과 나머지 지구 생명망의 관계를 엮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등장한다.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자본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인류의 삶을 둘러싼 시공은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편성되고 활용되었다.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견고하게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자연, 돈, 노동, 돌봄, 식량, 에너지, 생명은 본래의 가치를 상실하고 싸구려로 취급된다. 자본주의나 세계화의 흐름이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에 의해 양산된 것이며 그것을 풀 열쇠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음을, 그리고 세상을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저렴한² 자연** : 자본주의는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아니라, 자연을 가능한 한 저렴하게 일하게 함으로써 번성했다.
- **저렴한 돈** : 돈은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매개체이자 자본주의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 돈이 살아서 순환할 때 그리고 그 돈을 둘러싼 관계에서 자본주의는 작동한다. 지난 여섯 세기 동안 지구의 생명은 돈의 힘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자본은 생명과 노동과 자원을 부리는 힘이다.
- **저렴한 노동** : 과거 봉건사회에서는 노예를 사회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 취급했다. 성공을 몇 배로 증식하려면 더 많은 일손을 찾아야 했고 그들의 부서진 몸뚱이를 돌봐 영원히 공짜인 노동으로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탱하도록 해야 했다. 노동력은 절도의 대상이 되었으며 식민지 개척자들은 토착민의 노동력을 착취해 이윤을 키웠다.
- **저렴한 돌봄** : 가부장제는 자본주의 생태의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기초다.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이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은 돌봄 노동

² 저렴함이란 자본주의의 위기를 일시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자본주의와 생명망 사이의 관계를 꾸려가는 전략의 집합을 뜻한다. 저렴함은 저비용과 같은 말이 아니며 저비용은 저렴함의 일부일 뿐이다. 저렴함은 전략이자 실행이고 모든 일을 가능한 적은 보상을 주고 동원하는 폭력이다. 또한 저렴화는 쉼해지지 않던 생명 생성 관계가 가능한 한 적은 화폐 가치로 바뀜을 뜻한다.

이 부분노동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체제를 상대로 돌봄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종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 **저렴한 식량** : 일하는 신체를 지탱하는 것이 식량이다. 자본주의 상수는 이윤을 내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메뉴가 무엇이든 노동자들이 저렴하게 조달된 식량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달러짜리 햄버거와 버킷 가득 담긴 값싼 치킨은 그래서 등장하게 된다.
- **저렴한 에너지** : 우리는 현재 저렴한 에너지 위에 구축된 경제의 결과, 즉 기후변화가 입증된 현실에서 살고 있다. 저렴한 연료의 세계 정치경제는 채굴 과정에서 엄청난 인간적인 고통을 야기했고 지구 생태를 뒤흔들었다.
- **저렴한 생명** : 자본주의에서는 누구의 생명은 소중하고 누구의 생명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힘이 작동한다. 국가에 의해 인정되고 국가의 명령 아래 놓이는 인간의 생명은 인종적이고 가부장적인 위계 속에서 국가의 관리를 받는다.

‘인간’은 환경을 만드는 종^種이지만 ‘인간 사회’는 환경에 취약하다. 문명은 자연으로부터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아 등장해 확장되었고 그 도움이 사라지면 무너지곤 했다. 인류의 삶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삶의 터전인 생명망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자정능력을 잃은 지 오래인 자연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인류의 삶을 위협하지 않도록 제동을 거는 일은 그래서 유예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 지금과 같은 불안과 불확실한 시대를 헤쳐 나가는 유일한 지혜이기 때문이다.

남반구와 북반구의 대비가 보여주듯 자본주의로 이득을 보는 이들과 그 과실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 이들은 분리된다. 스스로는 이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돈의 역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재난과 재해는 늘 약자들을 먼저 공격한다. 따라서 저렴한 생명으로 저렴한 노동으로 저렴한 돌봄으로 규정되기를 저항하는 이들이 이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 늦

였지만, 이제라도 자본주의의 눈부신 발전을 앞세워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감춰온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다.

‘자유를 위한 사회적경제’에 대해 말하다

『자유로서의 사회적경제』

김종길 지음, 북사피언스, 2020

황명연

생협평론 편집위원



나의 젊은 친구들에게 과감히 이야기하고 싶다.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고 말이다. 새로운 시대는 공동체와 자연환경을 중시하며, 약자를 배려하고, 공익에 헌신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의 리더들을 필요로 한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임을 강조하고 싶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 책을 통해 ‘젊은 친구들’과 만나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적경제 분야의 관련자로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이들을 위해 펜을 들었다고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시장과 정부를 넘어선 제3의 길

이 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서 사회적경제를 말한다. 이는 좁은 의미의 사회적경제가 아니다. 보다 넓고 보편적인 경제 원리를 담으며 기존 경제학이 외면했던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 비취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시장경제가 온전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유시장도, 국가에 의한 지나친 시장 통제도 옳지 않으며 노동의 윤리, 개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위한 제도, 법치주의 등을 지탱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먼저 그 새로운 주체로서 시민공동체가 자연환경, 사회적 인프라 등의 사회적 자원을 관리해야 한다는 우자와 히로후미^{宇澤弘文}의 주장을 다룬다. 이어 영국의 캐머런 정부가 실행했던 시민사회의 공공서비스 제공, 자원봉사 및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강화, 시민사회 교육 강화, 사회투자 확대를 위한 도매금융 설립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시장과 정부를 넘어서 제 3의 주체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빈곤과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 중심의 경제

저자는 불평등을 다룰 때 저개발국가에서 나타나는 슬럼화와 빈곤 문제만을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유엔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임에도 4,000만 명의 국민이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미국을 예로 제시한다.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의료비, 선진국 최고의 유아사망률, 낮은 건강수명, 높은 불평등지수 등 미국 내 가득한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드러낸다. 그리고 불평등의 원인으로 시장의 독점과 정치집단의 시장 통제력 상실 등을 들고 있다. 덧붙여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자본수익률로 인해 개인의 노동과 노력이 아닌 자본의 소유량에 의해 부의 분배가 이뤄지는 현실을 비판한다. 그리고 빈곤과 불평등 문제 해

결을 위해서는 근본적 목적을 ‘사람’에 두는 ‘자유로서의 경제발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시민 주체의 성장, 자유로서의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5장 이후부터는 시민 주체의 성장과 자유로서의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관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오바마 정부와 하토야마 정부 등에서 일어난 진보정책 실험을 제시하며 새로운 정부와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기존의 정부와 시장에 덧붙여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로서 사회적경제를 제안한다.

저자는 사회적경제의 주체를 크게 사회적경제 집단과 사회혁신 집단으로 구분한다. 사회적경제 집단은 가난, 배제, 장애 등과 같은 구조적인 사회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며 참여와 연대, 민주적 의사결정 등의 가치를 중심에 놓는다. 사회혁신 집단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더욱 방점을 두고 ‘비즈니스’라는 수단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그러나 어느 특정 집단이 정답이라 말하지 않는다. 저자에게 사회적경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자체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의 협력과 연대,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의존하는 사고를 경계하며 사회적경제 주체의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강조한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당사자가 주축이 되어 이끌어가는 사회적경제를 제안한다.

끝으로 정부의 통합적인 사회적경제 정책과 중간지원기관의 혁신, 그리고 이상을 위한 현실주의적 노력이 있을 때 자유로서의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가 완성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사회적경제에 관한 넓은 품을 가진 책이라 말하고 싶다. 저자는 특정 정책이나 조직의 형태로 사회적경제를 바라보지 않으며 특정 가치만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를 해석하지 않는다. 기존의 사회·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넓은 품으로 사회적경제를 바라보고 있다. 어려운 용어와 학술적인 연구를 담은 글도 아니고, 감정에 호소하는 선동의 글 또한 아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나친 부정도 긍정도 아닌 객관적인 시선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경제와 사람에 대한 저자의 따뜻한 시선이 가득 담겨 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시선으로 사회적경제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교양서 같은 책이다. 오리지널리티 Originality가 분명한 책으로 이는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사회적경제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활동가로서 저자의 삶이 담겨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주희
SAPENet지원센터
국제팀장

ICA 국제협동조합연맹가 2020~2030년 전략인 “두 번째 협동조합 10년을 위한 사람 중심의 길^A People-Centered Path for a Second Cooperative Decade”을 발표했다. 국제 수준의 협동조합 운동을 위한 지침으로서 ICA와 ICA 산하 조직, 회원 전체의 국제적 활동을 위한 전략과 세부 내용이 담겨있다. 협동조합의 행동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사람을 중심에 둔 새로운 길을 제안하는 것이자, 협동조합과 협동조합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ICA 기관들의 공동 활동을 강화하는 전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전략은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ICA 총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당시 새롭게 선출된 이사회가 2030년을 맞이하여 “협동조합 10년을 위한 청사진”에서 제시된 전체적 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을 임무로 받았다. 해당 전략은 총 22개월의 검토를 거쳐 지난 2019년 10월 르완다 키갈리 ICA 총회에서 논의 후 승인되어 최종 전략이 올해 발표되었다. 따라서 이번 전략은 세계가 직면한 과제를 살펴보고 ICA의 목적과 미션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새로운 10년을 위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어떻게 강화하고 심화할지에 대해 설명하고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이하여 ICA는 지난 2013년 야심찬 계획인 “2020년 비전^{2020 Vision}”을 발표한 바 있다. 2020년 비전은 “협동조합 형태의 비즈니스가 2020년까지 사회, 경제, 환경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리드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며 사람들이 선호하는 비즈니스모델이자 가장 빨리 성장하는 기업 형태가 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참여, 지속가능성, 정체성, 법체제, 자본 5가지 기준으로 청사진의 실행 전략을 수립했다.

새로운 전략은 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일련의 측정 가능한 지표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UN의 169개의 타깃 및 23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협동조합의 지표로 활용하면서, 협동조합에 맞는 지표 그리고 협동조합에 있어서 성장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모든 내용을 새로운 전략 이니셔티브에 담았다.

또한 지난 청사진의 내용을 이어받아 이번에 마련된 4가지 주제인 협동조합 정체성 추진, 협동조합 운동의 성장,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그리고 글로벌 지속가능성 발전에의 공헌에 관한 구체적인 이니셔티브 내에 청사진의 5가지 기준을 심화, 발전시키고 있다.

새로운 전략	청사진
협동조합 정체성 추진	정체성, 법체제
협동조합운동의 성장	법체제, 자본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참여
글로벌 지속가능한 발전에의 공헌	지속가능성

협동조합 모델은 민주적 권한 부여를 통해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구체적이고 입증된 방식으로써 세계 인구의 약

전략 계획과 ICA 목적과의 관계	전략적 목적	이에 따른 전략 이니셔티브
협동조합 정체성의 추진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을 추진하고 옹호한다”	· 이해관계자와 일반 시민의 인식 제고 · 기관들의 지원 · 교육	· 협동조합 정체성에 관한 ICA 성명을 강화한다. ·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는 규제를 추진한다. · 정체성과 관련된 소통 및 브랜딩을 추진한다. · 협동조합 교육을 추진한다. · 국제적인 정책의제에서 협동조합 정체성을 추진한다. · 협동조합 정체성에 근거한 ISO 인증을 개신한다.
협동조합운동의 성장 “상호부조와 민주주의에 근거하여 세계 협동조합 운동을 추진한다”	· 협동조합운동의 강화 · 성장의 정의 · 혁신 역량	· ICA 회원의 확대와 관여를 추진한다. · ICA 조직 간의 코디네이션을 심화한다. · 국제적 파트너십과 제휴를 확대하고 심화한다. · 협동조합운동의 정책적인 영향력을 강화한다. · 협동조합운동에 관한 글로벌 지식을 발전한다. · 협동조합의 경제적인 역할을 심화한다. · 협동조합 간의 협동조합 자본을 구축한다. · 협동조합운동의 소통 역량을 심화한다. · 청년의 참여를 심화한다. · 성평등을 추진한다.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회원조직 간에 경제적 및 기타 상호 유익한 관계 발전을 촉진한다”	· 공동의 관심을 확인 · 데이터 · 규모의 경제	· 지식을 구축하고 교환한다. · 대규모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그룹의 공동의 행동을 심화한다. · 중소기업협조합(SMEs)에 대한 더 큰 지원을 장려한다.
글로벌 지속가능한 발전의 공헌 “지속가능한 인간 발전을 추진하고 사람들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제 평화와 안전에 공헌한다”	· 모니터링 · 보고 · 발전 추진	· 협동조합의 SDGs 공헌을 위한 지표를 특정한다. · SDGs에 대한 협동조합의 공헌을 보고한다. · SDGs에 대한 애드보커시를 전개한다. · 국제개발협력에 지원하는 협동조합운동의 이니셔티브를 심화한다.

전문 : <https://www.ica.coop/en/media/library/ica-2020-2030-strategic-plan>

참고 : <https://www.ica.coop>

12%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지만 대부분은 협동조합운동의 힘과 잠재력 그리고 협동조합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 실업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협동조합들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협동조합 모델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동조합운동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전략은 강조하고 있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사회적경제를 접하기 전의 나

돌아가신 아버지는 설렁탕집 노동자셨다. 커다란 국물 솥단지들은 365일 꺼지지 않았고 그것을 지키느라 아버지 역시 360일을 근무하셨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를 뵈러 주방에 들어가면 사우나에 들어간 듯 금세 땀방울이 맺혔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의 인생은 설렁탕에 매여 있었다. 근로계약서도 없이 터무니없는 박봉을 받았지만 가족을 위해 그저 순응하셨다.

대한민국 대부분 장남이 그러하듯이 나 역시 과도한 자발적 책임감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소금꽃 핀 러닝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며, 그것이 무엇

이든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곤 했다. 하루빨리 성인이 되어 아버지를 구출하고 싶었다.

우여곡절 끝에 운 좋게도 법무법인에 취직할 수 있었고 가정형편으로 대학을 중도 포기한 나로선 이보다 좋은 기회는 앞으로 없을 거라 믿었다. 남들에게 내밀 때 부끄럽지 않은 명함, 친구들보다 조금 많은 급여, 무엇보다 기뻐하셨던 아버지의 눈빛 등은 이곳에서 기필코 높은 자리까지 올라야겠다는 욕망의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취직을 했다는 기쁨과 바로 이곳이라는 희망, 저곳에 오르겠다는 욕망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농업자금을 전부 끌어다 쓴 농부를 두 번 올리는 사채업자, 땅을 팔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머니를 컨테이너에 가둔 아들, 아버지 제사상 앞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주먹다짐을 하는 형제, 상대방이 더 쓰레기라고 말하는 한때는 사랑했던 부부 등…. 감정을 배제한 채 그저 내 할 일만, 필요한 서류들만 잘 챙겨 접수하면 됐지만,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았다. 매순간이 아프고 쓰렸다. 그리고 슬펐다. 1년이 채 되지 않아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세상 대부분의 문제는 ‘돈’이라고 불리는 그것으로 인해 기인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울이 산산조각 나듯 회의감이 밀려왔다.

사회적경제 안으로 들어온 나

회의감과 무기력함에 휩싸였지만, 주위의 시선과 급여는 4년 가까이 그곳에 더 다니게 만들었다. 꾸역꾸역 출근과 퇴근을 반복했고 일요일 오후

가 되면 벌써부터 다음 날 출근할 생각에 가슴이 턱 막히는 날들이 계속 되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다른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협을 통해 접하게 되었다. ‘더불어 같이 잘 살자’,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자’는 가치는 깊은 회의감에 빠져 있던 내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다.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게 되었고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내가 찾던 바로 그것인 것 같았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궁금해하던 내게 사회적경제에서 말하는 가치가 따스하게 다가왔다. 이번 생이 아닌 다음 생을 기약하거나, 누군가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 속에서, 적어도 사회적경제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질문의 답을 직접 찾고 싶었다.

무작정 모든 것을 정리한 후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 ‘사회적경제’라는 키워드를 치고 찾아보다 광역 중간지원조직에 들어가게 됐다. 전에 비해 급여가 줄었지만 상관없었다.

사회적경제 현장의 나

중간지원조직에서 박봉과 불안정한 신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지만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해 미련을 버리고 왔기 때문인지 그저 ‘일’이 재미있었다. 현장 구석구석에서 다양한 영역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게 즐거웠다. 나는 현장의 요구를 온전히 반영하며 활동하고

있는가, 나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항상 고민되었다. 그런 힘들 외에 다른 괴로움은 없었다. 일요일 오후만 되면 턱 막히던 가슴이 뚫렸다.

운 좋게도 사회적경제 전국 연대조직에 들어가게 되어 또다시 짐을 정리하고 상경했다. 책상과 침대만으로도 꼭 찬 5평 원룸, 어디 가나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거리, 빼곡하게 자리 잡은 건물들, 도로 끝까지 이어진 자동차들, 낯선 사람들과 밀착된 채 옮겨지는 지하철 등 난생처음 겪는 촌놈의 서울살이는 답답함의 연속이었다. 다행히 그 답답함은 ‘일’을 하며 해소되었다. 전국을 돌아다녔고 지역에서는 만나기 힘든, 겪기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며 바다를 달리는 듯 시원했다. 지금은 다시 지역으로 내려와 또 무엇을 해볼지 이것저것 상상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라는 울타리 안의 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난 이곳과 이 일이 왜 좋은 걸까? 저곳이 너무 싫어서 이곳에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잘 모르겠다. 누군가가 ‘내가 왜 좋아?’ 하고 물어볼 때 느껴지는 막막함 같은 것이랄까. 이곳 사람들이 좋다. 주식이 어찌고 부동산이 어찌고 승진이 어찌고, 듣고 싶지 않은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들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 좋다. 이 일이 좋다. 정도와 계기, 의도의 차이가 있지만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려 노력하는, 그 가치를 실현해보려 노력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과 이별하기도 했다. 대부분 실망이 컸던 탓일 것이다. 동료에게 상사에게 현장에게 실망하고, 다른 조직으로 이직하고 다시 또 실망하고, 또 다시 이직하거나 이곳을 떠나거나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다. 떠난 빈자리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했다. 그때마다 난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곤 한다. 사회적 경제는 종교가 아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인간이 하는 것, 인간이 모인 조직 역시 불완전하다고. 그저 끊임없이 노력하고 한 발자국씩 내디디면 되는 거라고. 종종 실망감에 휩싸여 남몰래 눈물 흘리기도 했지만 절대 절망은 하지 않는다.

〈아노말리사 Anomalisa, 2015〉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다. 극중 존경받는 작가 마이클 스톤은 일상에 찌든 권태로운 삶이 지긋지긋하다. 마이클 스톤의 귀에는 오래전에 헤어진 애인의 목소리도 아프다는 아내의 목소리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똑같이 들리는 스톤에게 '리사'의 목소리만은 다르게 들린다

(출처 : 네이버 영화)

도 선물을 사 오라는 아들의 목소리도 모두 고저장단이 없는 똑같은 목소리로 들린다. 그러던 어느 날 구원처럼 남들과는 다른,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마이클 스톤은 그 특별한 목소리를 가진 여자(리사)와 사랑에 빠진다.

사회적경제는 내게 ‘리사’와 같다. 나는 왜 저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가? 다들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 내가 유별난가? 내가 이상한가? 그때 특별한 목소리를 가진 사회적경제가 다가왔다. 사회적경제 안에서 난 더 이상 유별나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해요. 우리는 기존의 공고한 체제 말고도 다른 것이 있다고 설득하는 사람들 아니까요.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얘기에 귀 기울이고 가슴이 흔들리겠어요. 사람에게에는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금방 느껴져요. 그가 허풍을 떨고 있는지, 정말 진심으로 아니면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우리가 행복했으면 해요. 정말 행복하고 진심으로 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느낌이 절로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흘러넘쳐서 주변을 물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그런 곳이 되도록 함께 만 들어봐요! 우리 같이 힘을 모아봐요!

밑줄 긋기

『생협핑론』 10주년을 맞아 ‘나에게 힘이 되어준 한 구절, 생협핑론 밑줄 긋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바쁘고 치진 일상과 생활 속에서 다시 힘을 북돋아준 『생협핑론』의 한 구절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SNS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공유된 문구들을 여기에 소개합니다.



@ **임사랑, 조계현**

“정치적인 올바름’과 ‘현실적인 경제력’ 사이에서 하게 되는 고민, 그 사이에 ‘윤리적 소비’가 있다. 윤리적 소비란 결국 무엇을 사느냐(buy)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live)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이선옥, 「윤리적 소비는 어릴 때부터」(『생협평론』 창간호, 2010 겨울)

@ **주가연**

“아마티야 센은 경제학 속에 윤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현대 경제학의 과제라고 말한다. (….) 사회 발전이란 더불어 행복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 김형미, 「윤리적 소비의 경제학적인 이해와 생협의 선택」(『생협평론』 창간호, 2010 겨울)

“대안운동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주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주류가 된다는 것은 권력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협동조합이 다수의 사람들의 삶에 익숙해진다는 이야기다. (….) 주류가 된다는 것의 또다른 의미는 협동조합을 통해 할 수 있는 다양한 목표들과 그에 따르는 협동조합들의 폭넓은 분화를 인정하되, 그것을 협동조합이라는 틀로 통합적이고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태계는 진화하면서 복잡해진다.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다.”

: 김기태, 「한국 사회 경제위기의 대안 하나, 협동조합 생태계」(『생협평론』 10호, 2013 봄)

@ **ppuri98**

“결국 답은 ‘사람’에서 찾아야 한다.”

: 이대중,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2년, 기본법 제정 당시의 정책목표는 얼마나 달성했나?」(『생협평론』 18호, 2015 봄)

@ **이은정**

“각자가 양손을 옆으로 쭉 뻗어본다. 충분히 혼자 팔을 흔들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선다. 도움이 필요할 때, 힘을 주어 손을 조금 더 뻗어본다. 그러면 누군가의 손이 잡힌다. (….) 도움이 필요할 땐 누군가의 손이 꼭 잡히는 새로운 협동을 꿈꿔본다.”

: 박선하,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는 재난에 어떻게 응답하는가?」(『생협평론』 30호, 2018 봄)

@ 김성미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아니다. 사회적경제는 특정 조직 형태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새로운 경제 질서에 대한 열망이다.”

: 김성훈, 「결사체 운동으로서 주민운동과 사회적경제의 만남」(『생협평론』 32호, 2018 가을)

@ 신창섭

“유립위원회가 제시한 규정을 고려하여 한국 사정에 맞추어 사회적경제 전문 연구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 본 사업의 목표는 사회적경제 연구와 교육을 이끌어갈 차세대 전문 연구인력 양성이다.

* 사업 기간은 8년 이상이며, 매년 10명씩 박사학생연구원(주니어 펠로우)을 선발하여 3년간 지원하며, 사업 기간 중 총 50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매년 5명씩 박사후연구원(포닥, 펠로우)을 선발하여 각각 3년간 지원하고, 사업기간 중 총 25명을 지원한다.”

: 장승권, 「사회적경제 연구자 육성 현황과 전략」(『생협평론』 32호, 2018 가을)

@ 김미라, yeongog862

“올바른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권력의 기반으로서의 권위(도덕적 능력과 실무적 능력)를 준비하는 긴 학습과 실천 과정이 필요하다.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관용, 토론에 의한 합의, 미래에 대한 확신, 소수자에 대한 배려 등 민주주의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 잘 훈련되어야만 한다. 이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이다. 사회적경제조직은 민주주의 실천의 최고의 학교이기 때문이다.”

: 김종걸,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쟁점들」(『생협평론』 35호, 2019 여름)

@ blueplanet_jun

“인간의 행복은 공동체와 함께하며 느끼는 개인의 지적, 도덕적 능력의 고양에 있다”

: 김종걸,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쟁점들」(『생협평론』 35호, 2019년 여름)

@ mijin7112

“2017년 유네스코는 협동조합을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해 지구적으로 보존해야 할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능과 공익적 역할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 김현하, 「그것도 협동조합이다」 《생협평론》 37호, 2019 겨울

@ 김대훈, 유수지

“이렇듯 사회적경제기업은 재난의 피해를 입어 일정한 구호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았다. 그 가운데 노동자의 보호가 매우 절박했는데, 산업 분야를 통틀어 최초로 ‘고용조정 제도’를 선언했다. 당장에 일자리가 없다 해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움직임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 재난이 세상을 멈춰 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막한 지경에 몰리고 있다. 그야말로 ‘빌어먹을’ 상황이다. 그런데 시인은 기꺼이 빌어먹자고 제안한다. 일을 나누고 삶을 누리면서 유쾌한 순환을 일궈내기. 그렇게 해서 고양된 기운으로 영혼을 보살피기. 사회적경제는 그런 마음의 유전자를 널리 퍼뜨리는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뉴노멀’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보자.”

： 김찬호, 「모두 함께 빌어먹는 세상을 위하여」 《생협평론》 39호, 2020 여름

@ 김대훈, 윤성미, blueplanet_jun

“당신은 누구에게 구조되었나?”라는 질문에 국가의 소방단이나 구조대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자기 자신이 66.8%였다. 두 번째로 가족이나 이웃이 28%, 국가나 지자체는 1.7%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립된 재난 구호의 원칙은 우선 자신이 스스로를 구조하는 자조(自助)를 기본으로, 다음은 이웃을 구조하는 협조(協助),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가 나서서 공조(公助)의 원칙이다.”

： 정미정, 「감염병 재난, 생활공동체로 살아남기」 《생협평론》 39호, 2020 여름

@ 이현아

“이번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아이쿱생협은 조합원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하고 ‘#안부를 묻습니다’라는 온라인 댓글 릴레이 캠페인으로 조합원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활동을 만들어냈다. (...)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웃 간의 유대와 공동체의 위로는 재난 회복력을 높이고 회복 탄력성을 증대시키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 정미정, 「감염병 재난, 생활공동체로 살아남기」 《생협평론》 39호, 2020 여름

@ 윤성미

“호혜적 사회적경제가 우리 삶에 정착,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도 융복합적 방식으로 발굴하고 연결해야 한다. (….) 그래야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지역력을 구축할 수 있다. (….) 사회적경제가 가져야 하는 사회적 유용성과 자발성의 가치를 살려내면서 ‘시민들의 욕구에 잘 부응하는가’에 대해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한다. (….)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의제 중심의 다양한 연대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 김재경, 「코로나19 위기 속 사회적경제의 대응」(『생협평론』 39호, 2020 여름)

@ mei101127

“민들레 흩씨처럼 이웃을 돌보다”

: 김재경, 「코로나19 위기 속 사회적경제의 대응」(『생협평론』 39호, 2020 여름)

@ 안정아

“우리 모두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이웃들 모두에게도 최소한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밑에 깔아놓는 것이 모두의 그리고 나 자신의 실질적 자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차츰 이해하게 될 것이다.”

: 홍기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떠오른 기본소득」(『생협평론』 39호, 2020 여름)

『생협평론』 발간 10주년을 맞아 독자들과 함께 즐기는 심자말풀이를 준비했습니다. 주로 이번 40호에 실린 글들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정답 응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퀴즈를 풀고 정답을 사진으로 찍어서 연락처, 주소 등과 함께 연구소 이메일(icoop-institute@daum.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상품을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 ◎ 접수 기간 : 9월 20일~10월 20일
- ◎ 정답 상품 : ‘지혜의 밥’ 상 : 1명, 치유와 힐링 HF식품 3종
 ‘연대의 책’ 상 : 2명, 도서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연구의 상’ 상 : 생협평론 10주년 기념품 - 냉장고자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 가로 열쇠 】

- ① 인류의 역사 500만 년을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자본주의가 출현한 시간은 〇〇:59:56라고 한다.
- ② 포어캐스팅(Forecasting), 시나리오(Scenarios), 〇〇〇〇 같은 미래 연구 방법론 중 하나로서, 미래를 위해 지금 어떤 경로를 선택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이다.
- ⑤ 2020년 여름 한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디지털 뉴딜, 〇〇〇〇, 안전망 강화' 라는 3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⑦ 행정주체가 전면적으로 담당했던 공적 서비스 업무를 '행정주체'와 '민간'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하여 파트너십의 형태로 공적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방식.
- ⑨ 「OECD 환경전망 보고서」(2008년)에 따르면 '이것'의 배출을 억제할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30년에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37%, 2050년에는 52% 증가할 것이라 한다.
- ⑪ 일본 정부가 공공재정을 투입하고 민관협력을 통해서 만들어낼 미래 기술개발의 청사진으로 제시한 미래상의 주요 열쇳말은 '포용·연결·〇〇'이다.
- ⑫ 2012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에 ICA는 "협동조합 형태의 비즈니스가 2020년까지 사회, 경제, 환경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리드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며 사람들이 선호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자 가장 빨리 성장하는 기업형태가 되는 것"을 2020년 〇〇으로 발표한 바 있다.
- ⑮ 찰리 카우프만이 감독한 애니메이션 영화. 주인공 마이클 스톤에게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똑같이 들리지만 어느 날 남들과는 다른,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하는 여자(리사)와 사랑에 빠지는 내용.

【 세로 열쇠 】

- ① 〇〇〇〇년 암과 알츠하이머가 정복되어 사람의 평균수명이 100살을 넘게 된 미국 사회를 그린 알버트 브룩스의 소설, 『〇〇〇〇년 그들의 전쟁』
- ③ 신생 창업 기업을 뜻하는 말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보통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〇〇〇〇
- ④ 재난에 대한 대응, 재난 발생의 억제와 복구 등과 관련된 개인, 조직, 지역사회 등의 능력 또는 잠재력을 뜻하는 말.
- ⑥ 닷페이스, 어반플레이의 '아는동네', 베네핏과 같은 미디어 스타트업 기업 중 하나로서,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하여 월, 수, 금 아침마다 시사 이슈를 일상의 대화처럼 풀어 뉴스레터로 전달하고 있다.
- ⑦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시장에 맡겼던 〇〇〇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약해지더니 최근 몇 년 동안 '재공영화'되는 경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 ⑧ 미래학에서 쓰는 용어. 문명의 발전에서 가상 지점을 가리키는 말로 미래에 기술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져, 그 영향으로 인간의 생활이 되돌릴 수 없도록 변화되는 기점을 뜻하는 말. 과학자들은 2030년 정도로 예상하며 영어로는 singularity임.
- ⑩ 코로나19로 인한 원거리 비대면, 근거리 대면 사회로의 일상 변화에서 로컬 차원에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먹거리 생산-유통-〇〇 시스템의 대안적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 ⑬ 코로나19와 같은 〇〇〇는 확산 정도에 따라 단계별 방역 수칙을 가지며, 이런 현실적인 여건에서 나온 키워드가 바로 '비대면 또는 언택트(untact) 사회'이다.
- ⑭ 2015년 체결된 '〇〇기후협약'에서는 이번 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미만으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을 1.5℃까지 제한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생협평론 2010 겨울(창간호)

- 창간 특집 윤리적 소비, 신자유주의 질서를 거스르다!**
소비가 이념적이고 윤리적이기까지 한 까닭은?
— 이정옥(대구가톨릭대 교수, 사회학)
윤리적 소비의 경제학적인 이해와 생협의 선택
— 김형미(메이지대학원 정치경제학 박사후기과정)
iCOOP생협과 윤리적 소비
— 정원각(iCOOP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의 윤리적 소비
— 이의남(iCOOP고양생협 이사)
- [창간 특집 좌담]**
윤리적 소비는 생산, 소비, 노동 모두를 고려한다
— 김아영, 김미영, 송정임, 우분주

생협평론 2011 봄(2호)

- 특집 경쟁의 생산에서 협동의 생산으로**
WTO-FTA 시대 한국의 농축업정책,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 권영근(생명창고·지역순환형 사회형성추진운동협의회 상임대표)
한국 농업의 위기와 협동조합의 과제
— 정은미(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협동과 상생의 대안 만들기
: 배추파동을 통해 생각해보는 생협운동의 비전
— 허현중(지역재단 기획이사)
아이쿱은 왜 생산의 문제를 고민하는가?
— 신성식(아이쿱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 [좌담]**
생산자들에게 듣는다 : 한국농업현실과 아이쿱 생산정책
— 김진원, 박석원, 오미애, 유재흠, 주정산

생협평론 2011 여름(3호)

특집

협동조합 제대로 이해하기

협동조합이란? : 경제학적으로 이해하기

— 정태인(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신뢰의 생산이 협동조합의 본성

— 정찬율(친환경유기식품유통인증협회 사무국장)

왜 협동조합은 규모 확대 문제에 더 민감한가

— 장종익(연세대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일본 생협이 직면한 과제와 조합원 참여 시스템

(日本の生協が直面する課題と組合員の参加システム)

— 丸山茂樹(JC総合研究所、客員研究員) / 번역: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좌담]

생협, 규모가 커지면 협동조합 정신이 훼손될까?

— 김영숙, 이금자, 이필구, 김아영

생협평론 2011 가을(4호)

특집

복지사회, 협동과 참여

복지국가운동과 협동조합운동

— 정승일(복지국가소사이터 정책위원)

복지사회의 이행전략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에 관한 탐색

— 장원봉(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협동조합운동과 복지

— 김형미(메이지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선수금 운동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협동조합 경제

— 오항식(아이쿱생협연합회 사무처장)

[좌담]

협동과 참여, 그리고 복지

— 권순실, 김민경, 이미연, 장남희, 김아영

생협평론 2011 겨울(5호)

특집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 김찬호(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두레생협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과 의미

— 권순실(생협전국연합회 전 회장)

지역사회에서, 생활인이, 만들어가는 소박한 복지

: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협동복지사업

— 박제선(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기획부)

나눔과 협동이 건강을 만든다 : 의료생협

— 조병민(대전민들레의료생협 전무이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와 한살림의 '지역살림운동'

— 정규호(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실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이쿱생협

— 김대훈(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장)

일본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協同組合と地域社会への貢献)

— 北川太一(福井県立大学経済学部 教授) / 번역 :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좌담]

지역 활동가들이 보는 협동조합의 나눔 활동

— 김이창, 이진홍, 이혜정, 정경섭, 김아영

생협평론 2012 봄(6호)

특집

민주주의와 협동조합

민주주의 발전에서 협동조합의 역할

— 정태인(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민주주의를 훈련시켜온 유럽의 협동조합들

— 정원자(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의 협동조합기업 : 경제민주화 구현 현장

— 김현대(한겨레 선임기자)

일본의 협동조합 민주주의 : 그 성과와 과제

(日本における協同組合民主主義 : その成果と課題)

— 杉本貴志(関西大学商学部教授) / 번역 :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970년대 한국 협동조합의 민주주의 지향성

— 신철영(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좌담]

협동조합이 민주주의를 말하다

— 신종철, 안상연, 오귀복, 이화수, 홍준호, 김아영

특집

세계의 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시사점

—기노채(아틀리에 대표이사, 주택건설협동조합준비모임 대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김신양(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부회장)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한국에서의 전망과 과제

—김성오(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소비협동조합의 과제와 대안

—전형수(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용조합과 협동조합은행

—김창진(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생산자협동조합의 생성과 진화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 특별기고 】

살아 있는 역사

: 50년 전, 영국 북서부의 협동조합 매장 근무를 추억하며

(Living History : Working at the Co-op in north-west England fifty years ago)

—로저 리차드슨(R. C. Richardson, 영국 원체스터대학 명예교수)

【 좌담 】

새로운 협동을 모색하는 협동조합들

—국태봉, 김일섭, 석승익, 조성돈, 김아영

특집

협동조합의 이론과 실제

협동조합과 ‘일다운 일(Decent work)’의 만남

—신효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ODA인턴)

협동조합은 고용 천국을 보장하는가?

—김성오(『몬드라곤의 기적』 저자)

여성의 참여와 도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원칙과 실천전략

—김아영(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여성의 능력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하는 협동조합을 지향하며

—이미연(아이쿱구로생협 이사장)

협동조합 고유의 특성에 근거한 경영전략

—이호중(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연구기획팀장)

나그네 민주주의와 주인 민주주의 :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

—신성식(아이쿱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좌담]

협동조합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기대, 어떠세요?

—권미옥, 김현동, 박주희, 서재교, 김아영

생협평론 2012 겨울(9호)

특집

자본 조달, 한국 생협의 난제

협동조합과 '자본'

—김수행(성공회대 석좌교수)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모델

—조혜경(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협동조합에서 자금의 문제

—정원각(아이쿱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준비위원장)

협동조합 지원금융 역할을 수행해온 캐나다 데잘맹신헌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좌담]

한국 생협의 자본 조달 현실

—기노채, 김대훈, 민영, 조향숙, 김아영

생협평론 2013 봄(10호)

특집

협동조합 생태계

한국 사회 경제위기의 대안 하나, 협동조합 생태계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협동조합 생태계에 대한 구상

—신성식(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협동조합 생태계로 다함께 행복한 노동을

—김홍범(아이쿱축산 상무대행)

협동조합 생태계와 조합원 활동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의 경우

—권미옥(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활동국장)

협동조합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오항식(아이쿱생협 쿠퍼티스 경영이사)

[좌담]

협동조합 생태계, 이렇게 만들어가야 한다

—김동준, 송주희, 유창복, 이대중, 장은성, 조우석, 손범규

생협평론 2013 여름(11호)

특집

생협법 제도를 둘러싼 논쟁들

: 조합원 외 이용을 허용할 것인가

일본 생협법의 조합원 외 이용 규제 (生協法における員外利用規制)

— 関英昭(青山学院大学名誉教授) / 번역 : 이향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를 철폐해야 하는 이유

— 김형미(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상임이사)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금지에 대하여

— 이재욱(춘천산골마을협동조합 부이사장)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문제에 대한 단상(短想)

—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좌담]

한국 생협법의 조합원 외 이용금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 김보라, 김창근, 문보경, 박은경, 김형미

생협평론 2013 가을(12호)

특집

협동조합 법 제도를 둘러싼 논쟁들

: 정부의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협동조합 정부지원, 협력적 사회 환경 조성이 우선이다

— 최유성(전 특임장관실 제2조정관)

정부의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 이이재(새누리당 국회의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개정 쟁점 및 대안

— 김현미(민주당 국회의원)

협동조합과 바람직한 국가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 강민수(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방향

— 김대훈(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장)

[좌담]

정부의 협동조합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강완구, 박봉희, 손낙구, 정원각, 이향숙

생협평론 2013 겨울(13호)

특집

협동조합 정체성 논쟁 1

[발제]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신성식(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토론]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서 길을 찾자

—이현숙(한겨레경제연구소장)

나무로서 협동조합과 숲으로서 협동조합

: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에 대한 단상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화폐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제도 차이를 인식하자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협동조합운동, 천천히 틈아보면서 나아가기

—김동준(성공회대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토론에 대한 발제자 의견

—신성식(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좌담]

활동가 입장에서 바라 본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김순희, 정설경, 정현화, 손범규

생협평론 2014 봄(14호)

특집

바람직한 사회적 경제 모델 찾기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운동

—장원봉(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사회적 경제의 현실과 협동조합운동의 방향

—하승우(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경제 개발

—김성기(사회적 협동조합 SE EMPOWER 이사장)

한국 사회적 경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

—김영식(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좌담]

사회적 경제, 어떤 모델이 바람직한가

— 김재경, 양현준, 윤호중, 이이재, 김형미

생협평론 2014 여름(15호)

특집

한국사회 친환경농산물의 현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현황과 전망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최동근(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한국 친환경농산물의 조명 : 생산·시장·소비 측면에서

— 김창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COOP생협 친환경농산물 수급 시스템

— 신신일(아이쿱인증센터), 허미영(아이쿱농산)

순환과 공생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옥천 이야기

— 권단(옥천순환경제공동체 운영위원장)

[좌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이 들려주는 현장 이야기

— 김근호, 임영택, 주정산, 홍진희, 이향숙

생협평론 2014 가을(16호)

특집

협동조합 교육,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의 협동, 협동은 어떻게 배우게 되는가?

— 문영선(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교육을 통한 협동조합과 사회의 성장

— 정원각(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학교에서부터 교육해야

— 금현옥(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교사)

학교협동조합에서의 협동조합 교육

— 박주희(학교협동조합지원네트워크)

협동조합 교육, 습득이 아닌 참여와 협동의 과정

— 김아영(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좌담]

학교협동조합, 그 현장의 소리

— 강연수, 김민성, 김현미, 박선하, 황성경, 지민진

특집

한국협동조합의 성장통

이용자협동조합 임금노동자의 노동 문제

— 김대훈(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

반겨야 할 역설, 협동조합의 민주적 거버넌스

— 윤주일(쿠팡협동조합 이사)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인가

— 강민수(콤포즈협동조합대표)

협동조합 지배구조에 대한 단상

—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거버넌스 : 역설 시각에서

(The Governance of Co-operatives and Mutual Associations :
A Paradox Perspective)

— 크리스 콘포스(Chris Conforth, 영국 Open University 교수)

[좌담]

소비자협동조합의 거버넌스와 노동의 실제

— 김정희, 이선경, 한금희, 손범규

특집

협동조합기본법 2년, 그 성적표는?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와 향후방향

— 이철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2년,

기본법 제정 당시의 정책목표는 얼마나 달성했나?

— 이대중(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제정팀장)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그 성과와 과제

— 문보경(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협동조합의 지형

— 김현하(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 2팀)

[좌담]

협동조합기본법 2년, 우리 마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 김정원, 유영우, 이석우, 정원오, 김형미, 김현대

생협평론 2015 여름(19호)

특집

청년과 협동조합

청년, 협동조합, 그리고 '멤버십 사회'

—이원재(희망제작소 소장)

서울시 청년 협동조합 주택

—이수연(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주무관)

협동조합과 청년의 만남 협동조합, 청년에게 더 다가가기

—이현숙(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청년들의 '사회적 노동' 경험 : 청년들의 서사를 중심으로

—명수민(서울대 교육인류학 석사), 이영룡(연세대 문화학협동과정 석사)

[좌담]

협동조합을 만난 청년들, 위기도 행복도 서로 함께

—김진희, 임소라, 조한솔, 김지만

생협평론 2015 가을(20호)

특집

사회적경제와 행복한 지역 만들기

사회적경제, 지역 발전의 대안인가?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마을과 경제

—유창복(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사회 혁신에 기반한 지역 발전 : 캐나다 퀘벡의 사례

—정준호(강원대학교 교수)

혁신적 협동조합과 지역 만들기 : 구레자연드림파크 사례

—정태인(갈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젠트리피케이션, 사회적경제로 핵심을 짚어내자

—전은호(사회주택협회 사무국장)

[좌담]

임대업이 꿈인 나라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누구의 문제인가?

—안진걸, 김남균, 선민, 위성남

생협평론 2015 겨울(21호)

특집

협동조합 지원, 그 실상과 바람직한 방향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둘러싼 협동조합 관련 언론 보도 심층 분석

— 조현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지원정책과 협동조합 현황

— 정상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과장)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유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기업·운동·정치로서의 협동조합

— 김종걸(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좌담]

비판은 약으로 삼고, 오해는 풀어가며

— 박단희, 이현숙, 장승권, 최혁진, 김기태

생협평론 2016 봄(22호)

특집

협동조합으로서의 농협

협동조합의 관점에서 본 농협의 역사

— 박성재(순천대학교 초빙교수)

세계 농업협동조합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 안상돈(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농협의 과제

— 이호중(지역재단 농협연구교육센터 센터장)

도시농협,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 소비자를 통해 생존하거나 문 닫거나

— 정연근(내일신문 기자)

[좌담]

농협에 기대하는 변화, 그리고 농협과 생협의 협동

— 장민기, 정기석, 조성규, 조현선, 유재흠

생협평론 2016 여름(23호)

특집

협동조합과 혁신

협동조합은 사회혁신이다

— 이일영(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대안 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과 혁신의 과제

— 김동준(성공회대 경영학부 연구교수)

노동자소유기업, 일터를 혁신하고 사회를 혁신하다

— 김활신(안산아이쿱생협 이사)

학교협동조합, 학교를 혁신하다

—주수원(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

[좌담]

협동조합, 혁신의 DNA를 찾아서

—김대훈, 김아영, 김홍길, 서종식, 정경섭

생협평론 2016 가을(24호)

특집

협동조합과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은 왜 프랜차이즈에 주목하는가?

—장종익(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주임교수)

소셜 프랜차이즈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해

—김정원(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협동조합 · 프랜차이즈 현황과 소상공인 지원정책

—남윤형(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버거킹, 던킨도너츠에서 레베(REWE), 코나드(CONAD)까지

—김현대(한겨레 출판국장)

해피브릿지가 바라본 사회적경제 영역과 프랜차이즈

—윤찬(해피브릿지 외식창업센터 센터장)

[좌담]

협동조합, 프랜차이즈를 만나다

—김현, 박승룡, 이우용, 박찬선, 강민수

생협평론 2016 겨울(25호)

특집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우리 사회 고령화 문제와 그 해법으로서의 사회적경제

—정건화(한신대학교 교수)

고령화에 대응하는 일본 생협의 복지사업

—이향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의료협동조합이 만들어가는 ‘노인이 행복한 세상’

—박봉희(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교육연구센터 소장)

여민동락공동체의 일상

—강위원(여민동락공동체 대표 살림꾼)

고령화의 도전과 한살림의 대응

—장지연(한살림서울 돌봄기획팀 차장)

[좌담]

조합원의 눈으로 노후를 꿈꿔보다

—김미선, 김종희, 우미숙, 추경숙, 김형미

생협평론 2017 봄(26호)

특집

불안의 시대,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인공지능과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 인간의 길

—구본권(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인간 존중의 조직 문화는 가능한가?

—최동석(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협동조합의 고용 실태와 과제 :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이홍택(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재미’있는 일하기, 협동조합에서는 가능한가요?

—제현주(협동조합 롤링다이스 조합원)

[좌담]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에 대한 필요와 열망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김선경, 마성균, 백희원, 서종식, 최혁진

생협평론 2017 여름(27호)

특집

새 정부에 건네는 사회적경제의 제안

‘모두가 행복한 나라’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병학(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 집행위원장)

사회적기업 법제도 분석과 개선 방안

—김혜원(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분석과 개선 방안

—장종익(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동료 시민과 새 정부에 건네는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

· <청년> 청년이 웃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바라며

—조금득(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무국장)

· <시니어> 장년층 인생 후반의 새로운 가능성, 사회적경제

—김만희(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 본부장)

- <여성> 페미니즘 관점으로 본 사회적경제의 평가와 과제
— 오김현주(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 공동대표)

[좌담]

사회적경제 정책 실행을 위한 첫 걸음

— 김대훈, 김영배, 김인선, 송경용, 서형수

생협평론 2017 가을(28호)

특집

사회적경제와 노동조합의 만남

협동조합운동과 노동조합운동 : 연대와 협력의 가능성 탐구

—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노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의 상생 : 캐나다 퀘벡의 사례

— 김창진(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사회적경제대학원 교수)

노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협력

— 황선자(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따로 또 같이

— 박경숙(순천광장신문 시민기자), 이종관(순천광장신문 편집장)

평화시장의 모범업체

—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좌담]

노동운동과 사회적경제는 왜 함께하려 하는가?

— 박강태, 이희수, 조준호, 한석호, 송경용

생협평론 2017 겨울(29호)

특집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활동

사회적경제 기반으로서의 사회적 참여

— 김종걸(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 곽형모(한국자원봉사문화 교육위원장)

생협의 주인으로서 조합원 활동

— 안인숙(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전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투명하나 충분한 그림자 : 생협 여성 활동가들의 노동을 생각하다

— 임정은(강서아이쿱생협 조합원)

조합원의 자부심, 아이쿱 자원봉사

— 이순옥(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자치국장)

[좌담]

열정페이와 자원봉사 사이에서

—김기민, 김수화, 민선영, 박준구, 손홍택, 박범용

생협평론 2018 봄(30호)

특집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문제인 정부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주요 이슈와 우선 추진 과제

—최호진(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조(自助)와 공조(公助)로 쌓는 일본의 재난 대비

—편용우(전주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공동체 회복 실천 경험

—임남희(안산선부종합사회복지관 부설 힐링센터0416쉼과힘 사무국장)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는 재난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박선하(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원)

전 세계 협동조합이 난민 끌어안는다

—김현대(한겨레 기자)

안전을 우리 생활공간으로 가져온 사회적경제

—조현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생협평론 2018 여름(31호)

특집

순환과 회복의 경제

쓰레기 대란, 해법은 무엇인가?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지구 환경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상생의 관계 맺기

—윤숙희(가치가지살롱협동조합 이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한살림의 실천

—유현실(한살림고양파주 이사장)

지구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사회적경제

—김경하(더 나은미래 부편집장)

과학기술에 '인간의 얼굴'을 새기기

—강양구(지식큐레이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과 사회적경제

—정건화(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좌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한걸음

: 시민 데이터로부터 시작되는 변화

—김성경, 김신범, 오창길, 윤성미, 이경제, 김형미

생협평론 2018 가을(32호)

특집

사회적경제는 사람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뜯아보기

—서종식(의연협동노동센터 소장)

결사체 운동으로서 주민운동과 사회적경제의 만남

—김성훈(한국주민운동교육원 트레이너, 사회적경제 대전플랜 상임대표)

현장 기반 학습으로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활동가

—김유숙(사회투자지원재단 소장)

사회적경제 연구자 육성 현황과 전략

—장승권(성공회대학교 경영학부·일반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교수)

한살림과 한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7가지 방법

—서동재(한살림연합 인사이원팀)

같이 성장하고, 가치를 성장시키는 협동조합 사람들

—김아영(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좌담]

5인 5색, 사회적경제 인재를 말하다

—김하나, 신철호, 신현상, 원종호, 정찬필, 박범용

생협평론 2018 겨울(33호)

특집

사회적경제는 어떤 공동체를 꿈꾸는가

공동체의 진화와 새로운 커뮤니티의 가능성

—김병권(서울시 협치자문관)

공동체는 지역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임경수(전주원도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생생협동조합 상임이사)

아이쿱 모임, 풀뿌리 민주주의로 한걸음 다가간다

—박미정(아이쿱활동연합회 자치활동국장)

청년과 공동체 삶의 가능성

—박희정(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디지털 커먼즈의 위상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좌담]

느슨한 연대로 만드는 현대의 공간

—박동광, 송건, 유한밀, 조완석, 조금득, 장인권

생협평론 2019 봄(34호)

특집

사회적경제와 세대교체

[좌담] 세대 갈등을 넘어서는 세대교체, 이렇게 생각한다

—강성균, 우윤식, 윤하나, 오윤덕, 황명연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청년 리더로 활동하기

—김진아(대학생협연합회 이사장)

농협 세대교체의 현 주소와 농민 협동조합의 미래

—이상길(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농정전문기자)

새로운 소비자운동을 위한 아이쿱 리더십의 과제

—김현숙(사천아이쿱 이사장), 정설경(동작서초아이쿱 조합원)

생협의 세대교체는 어떻게 가능할까?

—위성남(전 마포시민협력플랫폼 대표, 전 성미산마을 대표)

생협평론 2019 여름(35호)

특집

사회적경제의 지형과 전략

[좌담] 사회적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성기, 김영식, 안미현, 정원각, 김찬호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쟁점들

—김종걸(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사회적경제 정책의 현황과 전망

—김기태((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 그 후 6년

—문보경(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 前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경남의 사회적경제, 그 발자취와 활성화 전략

—송원근(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정책 : 광주시 광산구의 경우

—김보라(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 황명연(한국자활연수원 주임)

생협평론 2019 가을(36호)

특집

사회적 가치,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좌담] 현장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가치 측정과 평가

— 강봉심, 지민진, 박기범, 변준재, 주세운

몸무게 재듯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자

— 도현명(임팩트스퀘어 대표)

사회적가치지표(SVI)의 성과와 과제

— 강경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장)

사회적 가치 성과 측정은 조직을 건강하게 만든다

: ‘사회적 회계와 감사(Social Accounting & Audit)’를 중심으로

— 김유숙(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역량강화센터 소장)

퀘벡 사회투자 네트워크(RISQ)의 ‘사회적경제 조직 평가 가이드’

소개

— 김진환(C.I.T.I.E.S 연구원)

생협평론 2019 겨울(37호)

특집

민관 협력과 중간지원조직

[좌담] 사회적경제 당사자로서의 중간지원조직

— 정영화, 조인숙, 이원표, 안준상, 황명연

지원이란 무엇인가?

— 김찬호(『생협평론』 편집위원장, 성공회대학교 초빙교수)

한국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생존 조건

: 경쟁 격화와 전문화/지역화의 요구

— 김종걸(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지역에서 경험한 중간지원조직 민관 협력의 현실

— 윤도현(루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전 동작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 사무국장)

중간지원조직이 사회적경제 인재를 키우는 산실이 되기 위한 과제
 : 일자리로서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고찰
 —최용완(마을과집 한국사회주택협동조합)
 시민 주체 '새로운 공공'을 위한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의 실천
 : 당사자 조직의 중간지원조직 기능, '협동노동'의 플랫폼 만들기
 —타시마 야스토시(田嶋康利,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옮긴이 : 김형미(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생협평론 2020 봄(38호)

특집

사회적경제 법, 제도의 쟁점과 과제

[좌담]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 현장을 돌아보다

—강민수, 박향희, 이경호, 이현민, 김대훈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강민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

생협법 개정이 이 시대에 던지는 5가지 화두

: 협동조합의 상호성 원칙을 전면 제기하며

—박범용(세이프넷지원센터 경영지원팀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과 그 의미

—이선민(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변화 :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박철훈(지역과소셜비즈 연구지원실장)

2020년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을 꿈꾸다

—방대형((사)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운영위원장)

사회적금융 관련 법 · 제도의 점검

—장지연(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

도시재생은 사회적경제를 담는 그릇?

—전은호(목포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특집

재난의 시대, 사회적경제의 길 찾기

[좌담] 코로나19에 비친 사회적경제

—길현종, 변형석, 안인숙, 정태인, 김찬호

코로나19를 이겨낼 소중한 치료제, 협동과 연대의 사회적경제

: 보이지 않는 것들의 공격과 그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

—주태규(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이사장)

코로나19 위기 속 사회적경제의 대응

: 대구 사례를 중심으로

—김재경((사)커뮤니티와경제 소장)

지역과 국가의 경계 없는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협력

—신재민(해외정보분석연구 협동조합)

재난 속 생활 방역 그리고 돌봄 노동자

—최영미(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감염병 재난, 생활공동체로 살아남기

—정미정(아시아태평양재난관리한국협회(에이팍코리아) 이사장)

단행본

No. 발행년도 제목/ 저자 및 역자

- 1 2006 『생협 인프라의 사회적 활용과 그 미래』
_____일본 21세기코프연구센터 저 | 한국생협연합회 역
- 2 2008 『iCOOP생협 10년사 : 협동, 생활의 윤리』
_____iCOOP생협연대 저
- 3 2008 『일본 위커즈 콜렉티브 활동 사례연구』
_____김주숙, 김미영, 김양희, 안세희, 정금수, 이향숙
- 4 2008 『생활 속의 협동』
_____오사와 마리 저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옮김
- 5 2009 『세상을 바꾸는 소비자의 힘 2009 윤리적 소비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집』
_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6 2009 『새로운 생협운동』
_____한국생협연대 엮음 (초판 : 2002)
- 7 2011 『뒤영벌은 어떻게 나는가』
_____이바노 바르베리니 저 | 김형미·김영미 옮김
- 8 2012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_____김형미 외
- 9 2012 『협동조합, 그 아름다운 구상』
_____에드가 파넬 저 | 염찬희 옮김
- 10 2012 『후쿠이생협의 도전』
_____일본생협연합회 엮음 | 이은선 옮김
- 11 2012 『일러스트로 배우는 생활협동조합 매장 운영 가이드 북』
_____오리토이사와카니시 케이코 저 | 이은선 옮김
- 12 2012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
_____사이토 요시아키 저 | 다나카 히로시 옮김
- 13 2012 『꺼지지 않는 협동조합의 불꽃』
_____와카츠키 타케유키 저 | 이은선 옮김
- 14 2013 『살아 숨쉬는 마을 만들기』
_____니시무라 이치로 저 | 번역모임 연리지 옮김

- 15 2013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역사와 사람들』
____조지 제이콥 홀리요크 저 | 정광민 옮김
- 16 2013 『협동조합 운영 사례집』
____서울특별시
- 17 2013 『진짜 가격은 얼마인가요(2013)』(E-Book)
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18 2014 『진짜 가격은 얼마인가요(2014)』(E-Book)
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19 2014 『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
____김기태, 김형미, 신명호, 장종익, 정병호 외
- 20 2014 『협동과 연대의 인문학』
____김창진 편저
- 21 2015 『iCOOP생협 2015년 입문협동조합』
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22 2015 『사람을 탐하다 : 협동조합 역사에서 살아온 그 사람을 탐하다』
____인물탐구동아리 '사탐' 저
- 23 2015 『스웨덴에서 협동조합을 배우다』
____아너스 오르네 저 | 이수경 옮김
- 24 2015 『21세기의 협동조합 : 레이들로보고서』
____A.F.레이들로 저 | 염찬희 옮김
- 25 2015 『영국 협동조합의 한 세기』
____G.D.H.코울 저 | 정광민 옮김
- 26 2016 『iCOOP생협 2016년 입문협동조합』
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27 2016 『아이쿱 사람들 : 협동조합의 문을 열다』
____차형석 지음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28 2017 『로버트 오언 : 산업혁명기, 협동의 공동체를 건설한 사회혁신가』
____G.D.H. 쿨 저 | 홍기빈 옮김
- 29 2017 『기업 소유권의 진화』
____헨리 한스만 저 | 박주희 옮김
- 30 2018 『스무살 아이쿱 : 협동하는 사람들의 가치와 실천』
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31 2019 『이탈리아와 독일 협동조합 100년 성공의 비결』
____장종익 외 13 저

- 32 2019 『사회적경제의 힘 : 통계 방법론과 해외 사례들』
 ____마리J. 부사, 다미앙 루슬리에 저 | 이상윤, 윤길순 옮김
- 33 2019 『한국 협동조합운동 100년사 1권, 2권』
 ____한국협동조합운동 100년사 편찬위원회
- 34 2019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 효율성에 도전하는 연대』
 ____티에리 장테 지음 | 편혜원 옮김
- 35 2020 『협동조합 클로즈업 : 만들 땐 몰랐던 협동조합의 어려움』
 ____김현하 지음

연구보고서(일반)

No.	발행년도	시리즈명	제목/ 저자 및 역자
1	2007	연구보고 2007	『생활협동조합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보고서 : 한국생활연합회 소속 조합원을 중심으로』 ____김주숙·김성오·정원각
2	2009	연구보고 2009	『2009년 iCOOP생협 활동가 의식조사 보고서』 ____김아영·정원각·이향숙
3	2010	연구보고 2010-1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 생활운동을 중심으로』 ____염찬희·엄은희·이선옥
4	2010	연구보고 2010-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공제조합운영에 관 한 연구』 ____장원봉·하승우·임동현
5	2010	연구보고 2010-3	『생협밸리 커뮤니티 디자인 연구』 ____김찬호
6	2010	연구보고 2010-4	『2009 iCOOP생협조합원의 소비자생활과 의식에 관 한 조사』 ____염찬희
7	2011	연구보고 2011-1	『아이쿱생협의 교육현황, 그리고 교육효과 및 만족 도에 대한 연구』 ____정해진
8	2011	연구보고 2011-2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지자체와 소비자생활협 동조합의 협력방안』 ____장종익·김아영

- 9 2011 번역서 2011-1 『일본공익재단법인생협총합연구소 리포트 No.62 : 위기에 대응하는 외국생협—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생협—의 동향』
_____김연숙·이주희·정화령
- 10 2011 번역서 2011-2 『일본공익재단법인생협총합연구소 리포트 No.64 : 협동조합의 출자금, 자본회계 문제』
_____김연숙·이주희·정화령
- 11 2012 기획연구과제 2012-1 『유럽 주요 국가 소비자협동조합의 성패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_____장종익
- 12 2013 기획연구과제 2013-1 『지대(地代)가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
_____장상환
- 13 2013 기획연구과제 2013-2 『2012 아이쿱생협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__염찬희·손범규·지민진
- 14 2013 기획연구과제 2013-3 『생협의 사회 가치 : 아이쿱생협을 대상으로』
_____이향숙·지민진
- 15 2013 생활과 동향 1 『한국소비자원, 「2013 한국의소비생활 지표」 발표』
_____지민진
- 16 2014 생활과 동향 2014-1 『윤리적 소비 속, 업사이클링(Upcycling) 다시 생각하기』
_____손범규
- 17 2014 생활과 동향 2014-2 『일본의 유기농업인증제도의 시사점 : 참가형 인증시스템의 의의』
_____지민진
- 18 2014 생활과 동향 2014-3 『밀레니엄세대에 동기 부여하기 : 아이쿱생협의 20대 직원의 특성을 중심으로』
_____손범규
- 19 2014 기획연구과제 2013-4 『2013 아이쿱생협 직원의 직무만족도 조사』
_____손범규
- 20 2014 연수보고서 2014-1 『2014 ICA Research Conference in Pula, Croatia and 2014 Co-operative and Social Enterprise Summer School in Sheffield』
_____서진선

- 21 2014 기획연구과제 2014-1 『공정무역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iCOOP생협과 PFTC-AFTC의 파트너십 연구』
____엄은희
- 22 2014 기획연구과제 2014-2 『생협의 사회가치 2014 아이쿱생협을 대상으로』
____이향숙·이문희
- 23 2015 연구원리포트 2015-1 『협동조합 자본조달 방안 중 조합원 차입금과 기금에 관한 사례 조사』
____서진선
- 24 2015 연구원리포트 2015-2 『협동조합의 자본조달과 우선출자제도』
____지민진·서진선
- 25 2015 기획연구과제 2015-1 『iCOOP생협 생산자회원의 특성 : iCOOP생산자회 정회원조사 2014년도』
____정은미
- 26 2015 기획연구과제 2015-2 『2014 아이쿱생협직원의 직무만족도 조사』
____손범규
- 27 2015 기획연구과제 2015-3 『아이쿱생협 통계 2014』
____지민진
- 28 2015 기획연구과제 2015-4 『2015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_손범규·이예나
- 29 2015 기획연구과제 2015-5 『2015년 아이쿱생산자회원 실태 및 의식조사』
____이향숙
- 30 2016 흐름을 읽다 1-01 『저성장 시대, 가치소비의 경험』
____지민진
- 31 2016 기획연구과제 2016-1 『아이쿱 통계 2015』
____지민진
- 32 2016 기획연구과제 2016-2 『친환경 우유의 생산 및 소비 확대와 낙농제도 : 아이쿱생협의 판매대행제의 시사점』
____장재봉
- 33 2016 번역서 2016-1 『협동조합의 난제 : 자본』
____윤길순·최은주·서진선
- 34 2016 흐름을 읽다 1-02 『소비, 근심을 덜다 : 저성장기 소비의 질적 변화』
____지민진

- 35 2017 기획연구과제 2017-1 『한국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 연구 1』
____협동조합 제도개선연구회
- 36 2017 흐름을 읽다 2-01 『소비, 그리고 쉼(休)』
____지민진
- 37 2017 흐름을 읽다 2-02 『생활동향연구, 2017. 6』
____지민진
- 38 2017 흐름을 읽다 2-03 『생활동향연구, 2017. 7』
____지민진
- 39 2017 흐름을 읽다 2-04 『생활동향연구, 2017. 8』
____지민진
- 40 2017 흐름을 읽다 2-05 『생활동향연구, 2017. 9·10』
____지민진
- 41 2017 흐름을 읽다 2-06 『생활동향연구, 2017. 11·12』
____지민진
- 42 2017 기획연구과제 2017-2 『GMO 없는 사료 도입에 관한 일고찰 : 생협 사례
를 중심으로』
____이향숙
- 43 2017 흐름을 읽다 2-07 『경기와 일상의 괴리 : ‘나’를 찾는 소비』
____지민진
- 44 2017 기획연구과제 2017-3 『아이쿱생협의 공급망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탐색적
연구』
____박상선·권영기
- 45 2018 I,B 2018-01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1 :
한국 GMO 보급 및 표시제 현황』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46 2018 I,B 2018-02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2 :
소비자 알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47 2018 I,B 2018-03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3 :
Non-GMO 표시제에 대한 주요 국가의 현황과
시사점』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48 2018 I,B 2018-04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4 :
GMO 이력추적제의 도입 필요성—소비자 신뢰와

위해성 차단 관점에서』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49 2018 I, B 2018-05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5 :
BT와 GM 시대, 농업의 진로를 다시 생각한다』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0 2018 기획연구과제 2018-1 『2018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1 2018 기획연구과제 2018-2 『2018년 파머스쿱(Farmer's COOP) 조합원 실태 및
의식조사』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2 2018 기획연구과제 2018-3 『한일 협동조합 공제에 대한 일고찰』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3 2019 요약본_인포그래픽 『2018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요약본(인포그래픽)』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4 2019 요약본_인포그래픽 『2018년 파머스쿱(Farmer's COOP) 조합원 실태 및
의식조사 요약본(인포그래픽)』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5 2019 기획연구과제 2019-1 『공공부문과 협동조합의 공동체 활동 비교에 관한
연구 : 주민자치센터와 아이쿱생협 지역조합을 중심으로』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6 2019 경제소비브리프 2019-1 『어수선한 한국 경제, 다가오는 변화』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7 2019 기획연구 2019-02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생협 이용 결정요인 탐색』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8 2019 기획연구 2019-03 『한국 사회적경제 공제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9 2019 경제소비브리프 2019-2 『2019년 경제 리뷰—새로운 시대로의 도입』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60 2019 기획연구 2019-04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생협 이용 충성도 탐색』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61 2020 기획연구 2019-05 『리뷰, 한국 생협의 궤적』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62 2020 흐름을 읽다 2020-01 『생활 일기 모음집 : 2017~2019』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보고서(수행연구)

No.	발행년도	시리즈명	제목/ 연구자
1	2014	연구원 리포트	『훗카이도 지역 밀 산업의 시사점』 ____이향숙
2	2014	서울시 기획 연구	『학교건강매점 협동조합 모델개발 연구』 ____지민진·최은주
3	2015	기획연구과제 2015-6	『고양파주아이쿱생협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_손범규·신효진
4	2016	양천구 기획 연구	『양천구 사회적경제 인적 자원 조사』 ____이향숙·김경아
5	2019	한국법제연구원	『협동조합 관련 주요국의 입법사례 연구』 ____박광동·김형미·Hirota Yasuyuki·강봉준·신창섭·홍성민
6	2019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 개성방안 연구』 ____김용진·김형미·최은주·신창섭·이태영·김재원

연구보고서(아이쿱 해외 협동조합 연구동향)

No.	발행년도	시리즈 번호	제목/ 번역자
1	2012	2012-2	『미국 협동조합 현황(1)』 ____이경수
2	2013	8-2	『지역사회 만들기와 생협』 ____이경수

- 3 2013 9-3 『지역복지·어르신복지와 생협의 역할 (地域福祉・高齢地域福祉と生協の役割)』
____이경수
- 4 2013 10-1 『푸드 데저트 문제와 지역 커뮤니티』
____이경수
- 5 2013 10-2 『전업주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____이경수
- 6 2013 13 『대규모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조합원 거버넌스 참여 :
코퍼라티브 그룹 형성평가』
____이경수
- 7 2014 2014-13 『이론』 『사례』 『거버넌스』
____이경수
- 8 2015 2015-2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과 식품 : 소비자협동조합의 시각』
____이경수
- 9 2015 2015-3 『2014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모음집』
____이경수
- 10 2015 2015-4 『기후변화와 소비자협동조합 : 도전에 앞서 나가기』
____이경수
- 11 2015 2015-12 『지속가능발전 개발재원과 사회연대금융의 역할』
____이경수
- 12 2016 2016-01 『핀란드 S그룹 : 핀란드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1-7』
____이경수
- 13 2016 2016-02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의 사회적연대경제의 현황』
____이경수
- 14 2017 2017-02 『바르셀로나 시청의 사회적연대경제 추진 정책』
____히로타 야스유키 지음, 이향숙 번역
- 15 2017 2017-03 『이탈리아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 2016 아이쿱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모음집』
____이경수
- 16 2017 2017-09 『사람 중심의 일터 : 사회 혁신 생태계 몬드라곤 사례연구 :
몬드라곤의 경영 탐구 5』
____윤길순
- 17 2017 2018-01 『몬드라곤의 경영 탐구 모음집』
____윤길순

- 18 2018 2018-02 『유럽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 유로쿱의 활동과 정책』
 ____가자가지살롱협동조합
- 19 2018 2018-03 『유럽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 유로쿱의 활동과 정책 2』
 ____가자가지살롱협동조합
- 20 2018 2018-04 『협동조합 과세 : 일반적 가이드라인과 문제들』
 ____번역협동조합

생협평론 정기구독 안내

『생협평론』은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의 공론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청 방법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www.icoop.re.kr) 홈페이지에 있는
‘1년 구독권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 전화를 주시거나 혹은 이메일로 주소와 연락처, 이름을
남겨주세요.

구독료

- 1년 구독료 : 10,000원

입금 안내

- 계좌 : 국민은행 448601-01-449694
- 예금주 :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기타

- 구독 기간에 책값이 올라도 정기구독료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분실이나 반송 등 배달 사고로
『생협평론』이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꼭 연락주세요.
- 낱권 구매는 연구소 이메일로 개별 신청 바랍니다.

『생협평론』 2020년 봄호부터 우편 발송에 썼던 비닐 포장재를 종이 봉투
로 바꿔 발송하고 있습니다.

전화 02-2060-1373

이메일 icoop-institute@daum.net